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2022. 08.



목 포 시
노인장애인과

제 출 문

목포시장 귀하

귀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08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Contents

목 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배경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 1) 연구 배경 3
 - 2) 연구 목적 4
- 2. 과업개요 5

제2장 목포시 현황 7

- 1. 일반 현황 9
- 2. 산업·경제·관광현황 18

제3장 이론적 고찰 및 목포시 여건분석 29

- 1. 장애의 개념 및 권리 31
 - 1) UN의 장애인 권리선언 31
 - 2)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32
- 2. 장애인 친화도시의 개념 및 근거 33

3. 장애인 친화도시 관련 법률 검토	34
1) 법률	34
2) 지원조례현황	38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및 영향평가 기준	39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선행검토	39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제도	75
3) 목포시 BF 인증실적 현황	81
4) 영향 평가 기준	83
5. 목포시 장애인 현황	90
6. 목포시 장애인 정책 분석	97
1) 분야 별 장애인 정책 분석	97
2) 목포시 장애인 맞춤형 정책 분석	99

제4장 사례연구 103

1. 국내 사례연구	105
1) 서울특별시	105
2) 마포구	108
3) 노원구	110
4) 수원시	113
5) 진주시	115
6) 강원도	117

2. 외국 사례연구	119
1) 일본 사이타마현	119
2) 미국 뉴욕시	121
3) 영국 런던시	122

제5장 설문분석 및 결과 125

1. SWOT 분석	127
1) SWOT 개요	127
2)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SWOT분석	127
2. 설문조사 및 개요	128
3. 설문분석 및 결과	128
1) 장애인	128
2) 종사자	136
3) 장애인 가족	146
4) 일반시민	155
4. 설문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165

제6장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171

1. 비전 및 추진 방향	173
1) 비전	173
2) 추진방향	173
3) 7대 추진전략	173

2.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체계 설정	175
1) 기본체계 설정	175
3. 7대 추진 전략에 따른 중점과제	178
4. 7대 추진 전략, 중점과제, 추진과제	179
5.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을 위한 로드맵 및 추진계획	181
6.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	18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7
1. 결론	189
2. 정책제언	192
참고문헌	196

표 목 차

<표 2-1> 목포시 연혁	9
<표 2-2 > 목포시 동별 면적	11
<표 2-3> 목포시 인구현황(2017~2021)	15
<표 2-4> 산업별 목포시 산업체 및 종사자 수	18
<표 3-1> 장애인 복지 및 편의증진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35
<표 3-2> 장애인 친화도시 관련 법률현황	35
<표 3-3>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 관련 조례 현황	38
<표 3-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표3-5> BF인증 대상	45
<표 3-6> 인증수수료 체계(2019.1.1. 시행)	47
<표 3-7> BF인증 실적 현황	48
<표 3-8> 인증대상별 인증실적 현황	48
<표3-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	53
<표3-10>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칙	64
<표3-11> 무장애 시설의 경제적 가치체계	66

<표3-12> 무장애 건물의 비용편익분석 선행 연구	67
<표3-13> '접근성 도시 대상' 선발 기준 및 과정	72
<표3-14> '접근성 도시 대상' 연도별 수상 도시	74
<표3-15> BF인증 등급 구분	77
<표3-16>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80
<표3-17>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수수료	80
<표3-18>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수수료	81
<표3-19>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84
<표 3-20> 정부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지표	87
<표 3-21> 통계청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석지표	89
<표 3-22> 전국 및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장애인 현황 (2017-2021)	91
<표 3-23> 목포시 장애인의 장애유형 추이(2017~2021)	93
<표 3-24> 목포시 장애인 단체 현황	94
<표3-25> 목포시 장애인 복지시설	95

<표 3-26> 목포시 장애인 유형별, 장애정도별 등록현황 (2022년 7월)	96
<표 4-1>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관련 세부과제	107
<표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AAC ZONE」 정책의 주요 내용	109
<표 4-3> 노원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목록	111
<표 4-4> 진주시 중장기 사업계획(2020~2024년)	116
<표 4-5> 진주시 중장기 사업계획(2015~2019년)	116
<표 4-6> 강원도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계획	119
<표 4-7> 일본 사이타마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121
<표 4-8> 영국 런던, 「The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SPG)의 주요내용	124
<표 6-1>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평가기준안	184

그림 목 차

【그림 2-1】 목포시 지도	10
【그림 2-2】 목포시 년도별 인구수	13
【그림 2-3】 목포시 년도별 세대수 변화추이	13
【그림 2-4】 목포시 연령별 인구 변화추이	14
【그림 2-5】 목포시 인구현황(2021.12.31. 기준)	15
【그림 2-6】 목포시 세대별 인구증가 추세(2016~2021)	16
【그림 2-7】 목포시 동별 인구 대비(2021.12.31.기준)	16
【그림 2-8】 목포시 전입 및 전출인구 순이동 추이	17
【그림 3-1】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33
【그림 3-2】 BF인증 관련 법 체계	50
【그림 3-3】 유니버설 디자인 로고	65
【그림 3-4】 ‘접근성 도시 대상’ 홍보 수단	75
【그림 3-5】 예비인증 인증절차	79
【그림 3-6】 본인인증 인증절차	79
【그림 3-7】 목포시 인증실적 현황	82
【그림 3-8】 목포시 인증실적 등급 현황	82

【그림 3-9】 전국, 전라남도, 목포시 장애인 증감률	90
【그림 3-10】 전라남도 시군 장애인 현황(2021.12)	91
【그림 3-11】 목포시 장애인 장애유형별 증감률 현황 (2017, 2021)	94
【그림 4-1】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로드맵	105
【그림 4-2】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비전 및 목표	106
【그림 4-3】 ACC존 안내 도구	109
【그림 4-4】 노원구 장애인친화도시 담당부서	112
【그림 4-5】 노원구 '무장애 숲길'	112
【그림 4-6】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114
【그림 4-7】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협력체계	115
【그림 4-8】 영국 런던, 「London Plan」	123
【그림 5-1】 목포시 장애인 SWOT분석	127
【그림 6-1】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향	174
【그림 6-2】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방안	176
【그림 6-3】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중/장기 로드맵	177

연구의 목적과 내용

I

연구배경 및 목적

1

과업개요

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국제연합(UN)의 장애인 권리선언(1975)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시 단위 지자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하여 관련법규는 ‘장애인 복지법’¹⁾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내 장애인 복지여건 제고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인프라 설치와 운영 등과 관련된 정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목포시는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장애인 친화적 정책수립·구현, 장애인이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여 효과성을 검토하며 관련 통계 및 지표를 생산하고 장애인들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을 위한 장애인 친화도시 인증제도 기준 마련하고자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할 시점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음

1)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1.12.4.] [법률 제16733호, 2019.12.3., 일부개정] 제9조, 제21조~제25조, 제28조, 제30조의2, 제58조 등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의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 및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과업개요

(1) 과업명 :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2) 과업근거

- ①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②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3) 과업배경 및 목적

- 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의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로 활용 및 근거 마련
 -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장애인 친화적 정책수립·구현, 장애인이 의사를 표현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여 효과성을 검토하며 관련 통계 및 지표 생산
- ② 장애인들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을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인증제도 기준 마련.
- ③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3) 과업범위

- ① 공간적 범위 : 목포시 전 지역
- ② 시간적 범위 : 2022년 기준연도

③ 내용적 범위

- 가. 장애인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 및 계획 제시
- 나. 장애인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설문조사 포함)
- 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 발굴 및 5개년 추진계획 수립
- 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 마.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 바.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 사.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 아.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 차.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 파.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④ 세부내용

- 가. 장애인친화도시 인증의 전반적 로드맵 및 인증제도 기준 마련 : 장애인친화도시 인증제도(BF/UD)
 - 시민 체감성과 제도 실효성 위해 민간시설까지 포괄 가능한 ‘(BF/UD) 인증제도’ 기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나. 전체 로드맵에서의 본 용역의 역할과 의미
 - 장애인친화도 및 장애인참여 조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설명과 전담부서에서 인증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 안내

목포시 현황

Ⅱ

일반현황(인구 추이 등)	1
산업, 경제, 관광 등	2

1. 일반 현황

(1) 목포시 연혁

○ 목포시는 1910년 목포부로 개칭되었으며, 1963년에 무안군 이로면 산정리·상리·용당리·달리·율도리가 목포시에 편입되고, 1970년에 산정1동에서 연동이 분동됨

○ 1973년에는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가 목포시 이로동에 편입됨 1979년에는 용당동이 1, 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7년에 무안군 삼향면 대양리·옥암리가 목포시에 편입되었으며, 이때 석현동 일부와 대양동·옥암동을 합해 삼향동이 설치되었고, 1994년에는 이로동이 용해동·상동으로 분동되었고, 1997년에는 29개 행정동을 26개로 정리됨

<표 2-1> 목포시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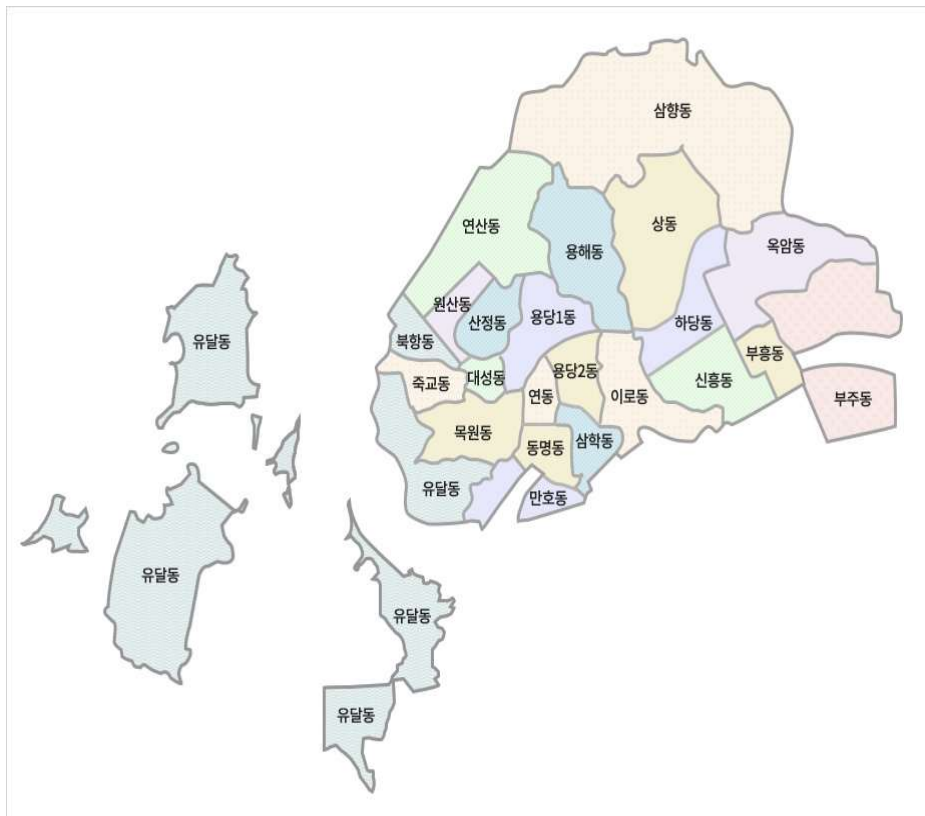
년도	연혁
1439	목포진 설치
1897	목포항 개항
1910	무안부에서 목포부로 개칭
1949	목포시로 개칭
1997	행정동 분합(29개동→26개동)
2006	행정동 통·분합(26개동→22개동)
2012	부주동 신설(23개동으로 개편)

(2) 위치 및 면적

○ 목포시는 한반도의 최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위 34°44'(허사도)에서 34°49'(삼향동) 동경126°2'(옥암동)에서 126°17'(외달도)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무안군, 북서쪽으로는 서해안의 여러섬들로 이루어진 신안군, 남동쪽은 영산강 하구둑을 가로질러 영암군, 남서쪽은 바다를 사이에 둔 해남군과 맞닿아 있으며 총면적은 50.123km²임

○ 구도심 중심부에는 해발 228m인 유달산, 동쪽에는 입암산(121m), 북쪽에는 양을산(156m)·대박산(156m)·지적봉(189m) 등으로 둘러 있고 남쪽은 영산강 하구에 면해 있음

【그림 2-1】 목포시 지도



* 출처 : 목포시청 홈페이지

(3) 지리적 특징

① 교통, 환경

○ [자연 지형] 무안반도 남단에 위치하며, 동쪽에 입암산(笠巖山, 121m), 서쪽에 유달산(儒達山, 228m), 북쪽에 양을산(陽乙山, 156m)·대박산(大朴山, 156m)·지적봉(芝積峰, 189m) 등으로 둘러 있고 남쪽은 영산강 하구에 면해 있으며, 또한, 그 주위에 13개의 도서가 넓게 펼쳐져 있어 경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방파제 구실을 하여 천연적인 양항의 조건을 보이고 있음

② 기후적 특징

○ 연평균기온은 14°C이고, 1월 평균기온 1.0°C, 8월 평균기온 26.1°C이며, 연강수량은 1,483mm임

○ 목포는 온난 습윤 기후(쾨펜의 기후 구분 Cfa)에 속한다. 하계에는 해양성, 동계에는 대륙동안형으로 두 기후가 중첩되어 나타남

③ 행정구역

<표 2-2 > 목포시 동별 면적

(단위 :km²)

동별	면적(km ²)
용당1동	1.45
용당2동	0.91
연 동	0.66
산정동	0.74

연산동	2.88
원산동	0.62
대성동	0.34
목원동	1.48
동명동	0.79
삼학동	0.82
만호동	0.84
유달동	12.68
죽교동	0.77
북항동	1.67
용해동	2.12
이로동	1.95
상 동	3.15
하당동	1.20
신흥동	1.80
삼향동	7.70
옥암동	2.58
부흥동	0.68
부주동	3.79
2019	51.62

* 출처: 목포시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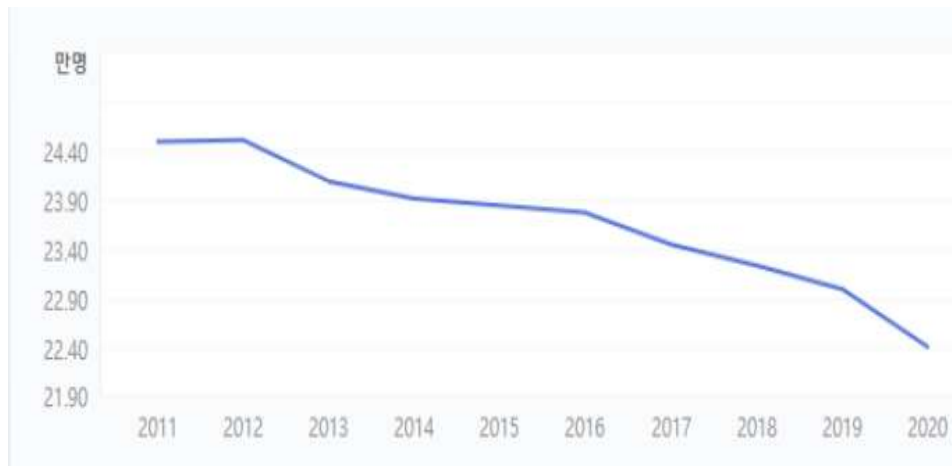
(4) 인구 현황

① 인구수 및 세대수

- 2022년 7월 기준, 목포시의 인구는 217,470명, 목포시 남자 인구는 108,158명 목포시 여자 인구는 109,312명 10월 기준 남녀 비율은 0.99임

○ 목포시 세대수는 103,739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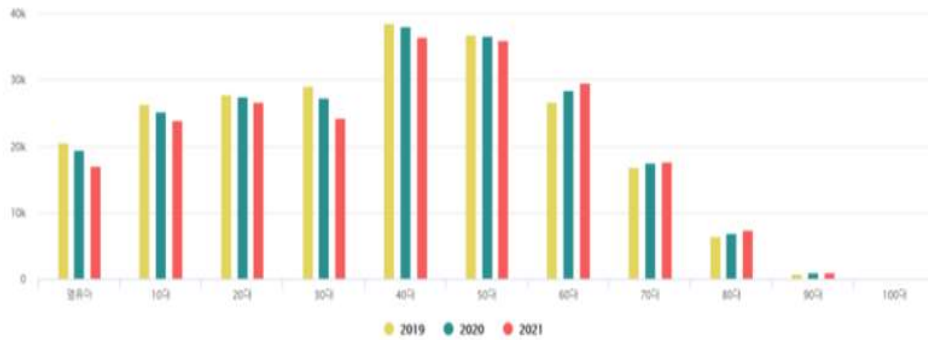
【그림 2-2】 목포시 년도별 인구수



【그림 2-3】 목포시 년도별 세대수 변화추이



【그림 2-4】 목포시 연령별 인구 변화추이



* 출처 : 목포시청 홈페이지

- 목포시 전체 등록 인구는(외국인 포함) 218,589로 매년 감세 추세임
- 2017년 목포시 인구는 237,247명. 2018년 235,423명, 2019년 233,175명, 2020년 227,178명, 2021년 218,589명으로 5년 동안 0.078% 감소함
- 목포시 남녀 인구 비율은 남성 108,808명, 여성 109,781로 여성 인구가 0.2%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목포시 세대수는 0.019% 소폭 상승했으나 인구수는 0.908% 감소함
- 목포시 23개 동 중 부주동과 상동, 용해동은 동별 인구수가 높고 만호동과 작교동, 유달동은 동별 인구수가 낮음. 인구수가 가장 높은 부주동과 가장 낮은 만호동은 0.881% 인구 차를 보임

<표 2-3> 목포시 인구현황(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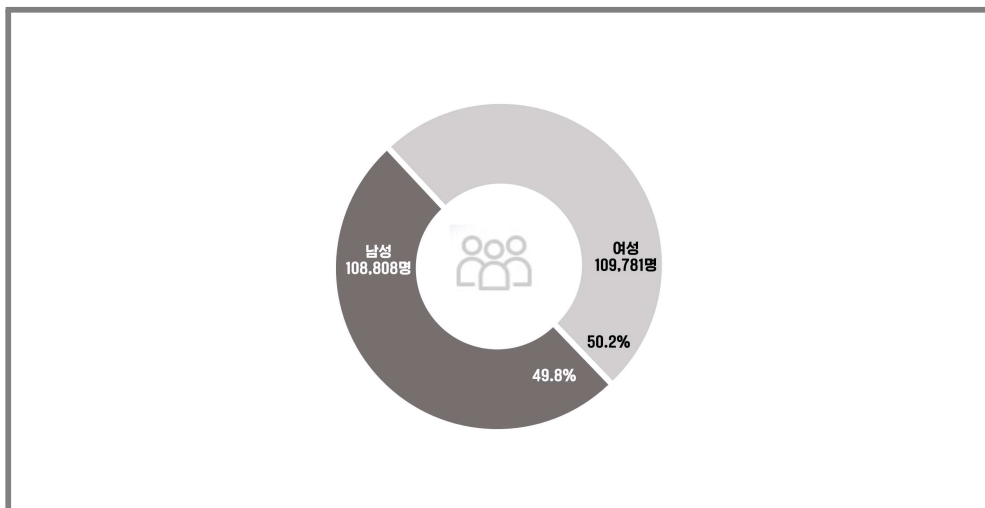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계	237,247	235,423	233,175	227,178	218,589	-0.078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그림 2-5】 목포시 인구현황(2021.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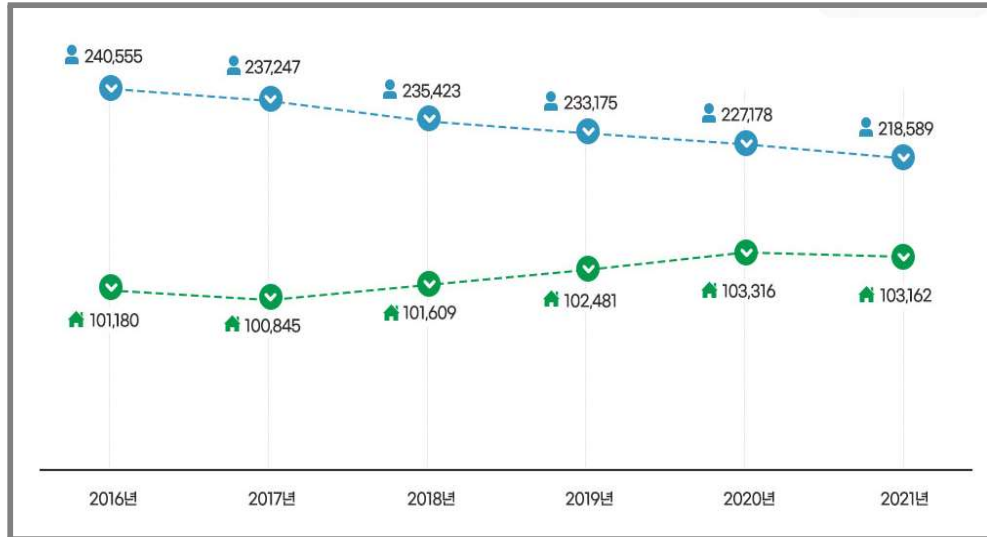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목포통계

【그림 2-6】 목포시 세대별 인구증가 추세(201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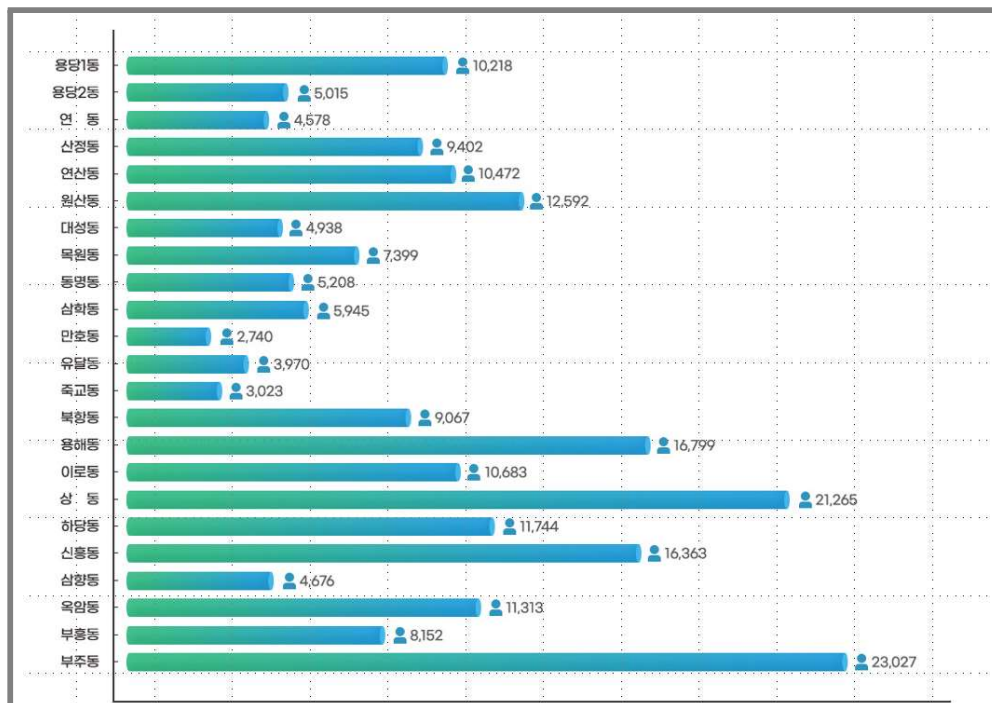
(단위: 명/ 세대)



자료: 목포통계

【그림 2-7】 목포시 동별 인구 대비(2021.12.31.기준)

(단위: 명)



자료: 목포통계

② 인구 전입·전출 현황

○ 2019년 전입인구는 30,963명으로 2018년 33,446명 대비 2,483명 감소하였고, 전출인구는 33,170명으로 2018년 35,300명 대비 2,130명 감소함. 2019년 순이동은 2,207명 순유출로, 2015년 이후 순유출이 지속됨

【그림 2-8】 목포시 전입 및 전출인구 순이동 추이



* 출처 : 목포시청 홈페이지

2. 산업·경제·관광현황

(1) 사업체 현황

<표 2-4> 산업별 목포시 산업체 및 종사자 수

(단 위: 개,명)

구분	사업체	종사자
합계	9,236	84,688
농업, 임업 및 어업	-	114
광업	-	17
제조업	323	4,36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	17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8	425
건설업	167	5,779
도매 및 소매업	2,704	14,836
운수업	120	5,841
숙박 및 음식점업	2,959	11,712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960
금융 및 보험업	36	3,555
부동산 및 임대업	193	2,02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3	1,8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자원서비스업	101	2,1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	3,867
교육서비스업	560	7,722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341	12,46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00	1,784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317	5,0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

* 출처: 목포시 홈페이지

(2) 관광

① 갯바위



갯바위

○ 2009년 4월 27일에 천연기념물 제500호로 지정됨. 목포 갯바위는 서해와 영산강이 만나는 강의 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풍화작용과 해식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풍화혈(타포니, tafoni)이며, 갯바위 일대는 저녁노을이 비치는 바다와 입암산의 절벽에 반사되는 노을빛이 아름다워 일찍이 입암반조(笠岩返照)라 하였음

○ 갯바위의 암석은 화산재가 쌓여 형성된 응회암으로, 화산재 입자를 육

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자가 크며, 주요 구성광물은 석영·사장석·미사장석·흑운모·견운모 등이며, 특히 석영과 장석이 우세하고 갯바위 일대로는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바위에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풍화혈이 늘어서 있음

○ 목포 갯바위에는 중바위가 있고 샛갯바위가 있는데 보통 샛갯 바위를 보고 중바위 또는 샛갯바위라고 하며, 바다 쪽에 있는 바위가 마치 스님 두 분이 샛갯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갯바위라고 부르며 중바위는 훌륭한 도사스님이 기거하였다하여 중바위라 전해지고 있음

○ 갯바위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리를 깨달은 경지 높은 도사 스님이 영산강을 건너 나불도에 있는 닭섬으로 건너가려고 잠시 쉬던 자리에 쓰던 샛갯과 지팡이를 놓은 것이 갯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월출산에서 도를 닦던 도사 스님이 상좌 스님을 데리고 목포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려고 축지법을 사용해서 영산강을 건너려다 상좌중이 잘못 따라와서 건너지 못하고 그대로 굳었다는 전설도 있음

② 유달산

○ 유달산 동쪽 기슭을 중심으로 목포시가 자리잡고 있고, 산은 비록 해발고도가 낮으나 산정은 매우 날카롭고 층층기암과 절벽이 많아 경치가 수려하며, 산정에서는 목포시와 다도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음. 동쪽 산꼬리에는 기상관측소·시청·법원 등 관공서가 있고, 산 중턱에는 유달사·수도사(修道寺)·관음사(觀音寺) 등 사찰이 많음

○ 노령산맥의 큰 줄기가 무안반도 남단에 이르러 마지막 용솟음을 한 곳,



유달산

유달산은 면적140ha, 높이 228.3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산맥의 맨 마지막 봉우리이자 다도해로 이어지는 서남단의 땅끝인 산이며, 유달산은 옛부터 영혼이 거쳐가는 곳이라 하여 영달산이라 불리웠으며 도심 속에 우뚝 솟아 목포시와 다도해를 한눈에 굽어보며 이곳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혼을 일깨우고 있음

○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 하여 이름 붙여진 해발 228m의 일등바위(울동바위)와 심판 받은 영혼이 이동한다 하여 이름 지어진 이등바위(이동바위)로 나뉘어진 유달산은 갖가지 기암괴석과 병풍처럼 솟아오른 기암절벽이 첩첩하며 그 옛날 소식을 전하기 위해 봉수를 올렸던 봉수대와 달성사, 반야사 등의 전통사찰을 볼 수 있음

③ 해상 케이블카

○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슬로우시티 목포의 옛 중심지인 목포 원도심과 북항, 유달산은 물론 고하도를 비롯한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살펴볼 수 있는 해양관광, 레저,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축이며, 유달산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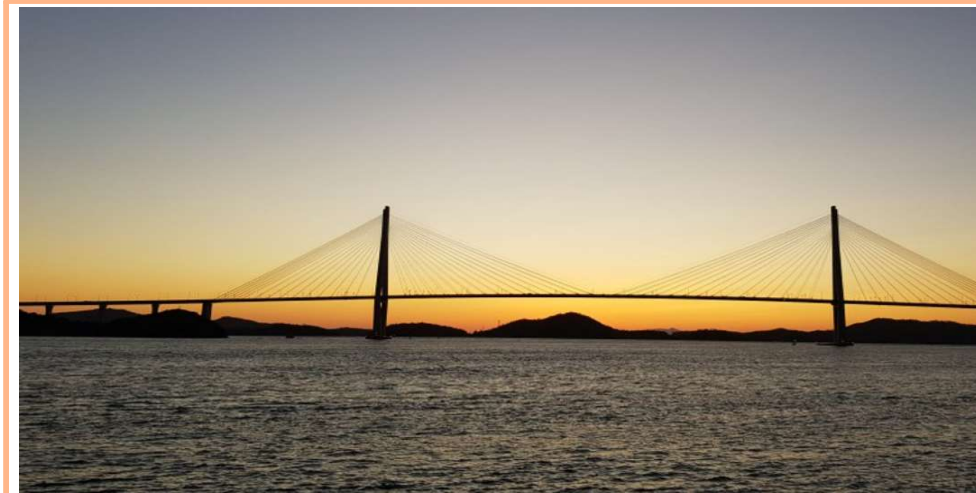
해상 케이블카

형적 특성과 우수한 경관을 고려하여 원도심과 다도해상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장3.23km, 국내 최고높이155m를 자랑하고 캐빈대수 일반40대, 크리스탈 15대 총55대 운행중 총 3,234m(해상 820m, 육상 2,414m)임

○ 목포해상케이블카는 목포 시내 북향스테이션을 출발하여 유달산 정상 부에서 ‘ㄱ’자로 꺾여, 해상을 지나 반달섬 고하도에 이르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이며, 다도해의 금빛 낙조와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총 길이 3.23km의 압도적인 탑승거리와 볼거리로 베트남 빈펄케이블카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음

○ 목포해상케이블카의 5번 타워는 유달산 상부에서 고하도로 향하는 지주 타워로 그 높이가 155m에 이르고, 이 타워는 프랑스 포마의 최신 설계와 시공사 새천년종합건설의 첨단 공법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케이블카 주탑 중 세계 두 번째 높이의 케이블카 타워로 목포 웅비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음

④ 목포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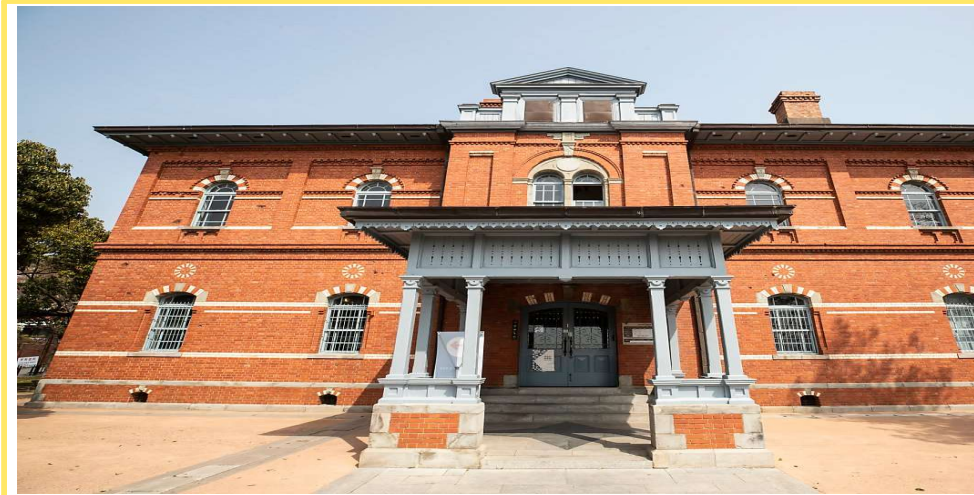
목포대교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의 북항과 유달동의 고하도 사이의 바다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이며, 진입도로를 포함한 총 연장은 4129m, 교량 구간은 3060m(사장교 900m, 접속교 2160m), 너비는 20.9~24.5m에 왕복 4차로이고, 1번국도에 속하는 고하대로(高下大路)의 일부로 자동차 전용도로임. 2004년 11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 29일에 개통하였음

○ 교량 형태는 사장교인데, 상판 좌우에 각각 2쌍의 케이블로 지탱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좌우의 케이블을 1쌍으로 줄이고 중앙에 1쌍을 설치하여 3쌍의 케이블이 상판을 지탱하게 하는 '3면배치가 특징임. 중앙 부분에 높이 167.5m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탑(主塔) 2개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인 주경간장(主徑間長)은 500m이고 수면에서 교량까지 높이는 53m로 5만t급 선박이 통행할 수 있음

○ 주탑과 케이블의 모양은 목포의 시조(市鳥)인 학 2마리가 목포 앞바다를 날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임

⑤ 근대역사관



근대역사관

○ 유달산 자락에는 일제 때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중 하나가 목포 근대역사관으로, 이 건물은 원래 동양척식회사 목포 지점으로 사용되던 곳이고 조선의 토지를 근대적으로 측량한다는 명목 하에 토지를 탈취해 간 곳이 바로 동양척식회사로 일제 수탈의 기지라 하겠음

○ 전국 9개의 지점 건물 중 목포의 이곳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지금은 이 건물 내부를 단장하여 목포 근대역사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역사적 현장이 보존되어 근대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좋은 경우임

○ 개항을 시작으로 일제 때 물자 반출의 기지였던 목포의 역사를 알게 하는 많은 사진 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글로 된 설명보다 더욱 실감나게 와 닿으며, 당시에 쓰던 금고도 건물 내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 볼 수 있는데, 해방 후에는 이 건물이 경찰서로도 사용되면서 금고가 유치장으로도 이용된 적이 있다고 함

○ 목포는 예부터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목포와 이웃한 고하도에서 전력을 증강했고, 지금도 해군의 전략적 요지로 사용되었으며, 바닷길 때문에 일제강점기 수탈의 관문이 되기도 했는데, 그 안타까운 역사는 근대 역사·문화 기행으로 목포 여행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

○ 목포 구시가에는 근대사를 대표하는 두 장소가 있으며, 목포근대역사관 1관(구 목포 일본영사관)과 목포근대역사관 2관(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 지점)임

⑥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 목포 평화광장은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에 위치한 공원으로 원래 공유수면이었던 지역을 1994년 2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총 7년 5개월여 동안 매립하여 조성하였으며, 공원의 면적은 2만 1,207㎡이고, 공원 주변으로 2만 642주의 조경수와 야외무대, 조형물, 산책로 등이 있음

○ 처음 공원의 이름은 미관광장이었으나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여 2001년 공원의 이름을 평화광장으로 개칭하였으며, 공원 중심에는 춤추는 바다분수가 있고, 양편으로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공원 앞으로 왕복 6차로 평화로가 지남

○ 춤추는 바다분수는 세계최초 초대형 부유식 음악분수이며 물과 빛, 음악의 하모니를 통한 아름다운 장관 연출하고 있음

○ 수반길이 150m, 높이 13.5m, 최대 분사높이 70m인 춤추는 바다분수는 잔잔한 바다 위, 워터스크린에 펼쳐진 아름다운 사연이 감미로운 선율과 화려한 빛, 거대한 물줄기 춤에 맞춰 스토리가 있는 레이저쇼와 함께 매일 밤 웅장하고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지고 관람객과 함께 하는 사연소개, 프로포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음

* 출처 : 목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seafountain.mokpo.go.kr>)

⑦ 삼학도 이난영 공원



삼학도 이난영 공원

○ 삼학도에 자리한 목포의 눈물, 이난영 공원은 한 청년을 사모한 세 여인이 죽어 학이 되었고 그 학이 떨어져 죽은 자리가 섬이 되었다는 삼학도는 세 개의 섬을 잇는 아담한 다리가 연결되어 다리를 따라 걷는 산책로와 운치있는 밤 풍경과 함께 “목포의 눈물”의 가수 故 이난영 여사를 기념하는 이난영 공원에는 우리나라 수목장 1호 이난영 여사의 수목장이 있으며 넓고 쾌적한 녹지공간과 시민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론적 고찰, 목포시 여건 분석

Ⅲ

장애의 개념 및 권리	1
장애인 친화도시 개념과 및 근거	2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	3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및 영향평가 기준	4
목포시 장애인 현황	5
목포시 장애인 정책 분석	6

1. 장애의 개념 및 권리

1) UN의 장애인 권리선언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손상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활동과 사회참여에 장기간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WHO는 2001년에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에서 ‘장애’는 개인의 기능손상이라는 정태적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회복과 활동 및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준비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동태적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음

○ 1975년 UN

은 ‘장애인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에서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후천적 능력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UN은 1980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개인적 특질인 손상(Impairment),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 장애(Disabilities), 그리고 환경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2006년에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CPRD) 제4조에서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 후 UN은 2012년에 ‘장애’가 범 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s)임을 확인하고, 사회개발 의제에서의 ‘장애 주류화’를 선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개발계획’(SDG)에서는 장애가 고려되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교통, 접근성, 통계 등의 분야에서의 장애와 장애인이 인지된 목표가 만들어졌음

2)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는 유엔(UN)의 정신지체인 권리선언(1971), 장애인의 권리선언(1975), 장애인에 대한 세계 행동계획(1982),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 규칙(1993), 장애인권리협약(2006)등으로 가시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장애인 복지패러다임 변화는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목표와 수단은 계속 진화되고 있음

【그림 3-1】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과 방향」

2. 장애인 친화도시의 개념 및 근거

○ 장애인 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한 도시’라고 정의 할 수 있음

○ 장애인 친화도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 교육, 고용, 사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임. 즉, 지자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추구할 수 있으며, 특정의 지자체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도시를 구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며, 지자체가 장애인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미임

○ 목포시의 경우 장애인 친화도시'에 대한 근거는 2020년 06월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시사항 기준은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대한 준용함

○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장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①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 ②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 ③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 ④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 ⑤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 ⑥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임

3. 장애인 친화도시 관련 법률 검토

1) 법률

<표 3-1> 장애인 복지 및 편의증진 관련 법률 제·개정 현황

시대	법률 제·개정
1980년대	심신장애자복지법 재정(1981. 6.)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1989. 12.)
1990년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1990.1.) 고용노동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정(1997. 4.)
2000년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2005. 1.) 국토교통부 장애인 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 7.) 중소기업청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2007. 5.) 교과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2008.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2008. 7.)
2010년 이후	장애인 연금법 제정(2010. 4.)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11.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2011. 3.) 고용노동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2011. 8.)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2015. 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 12.)

<표 3-2> 장애인 친화도시 관련 법률현황

장애 영역	법률명	제정일	목적	대상	내용
시설 물 접근· 편의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04.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설치의 기본원칙, 접근권,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편의증진 심의회의설치 등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12.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함으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기본계획수립, 보조기기 교부, 중앙·지역보조기기 센터설치·운영,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연구개발 및 활성화 등
	장애물	2010.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장애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의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7.09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의제2제5항, 제 10조의3제2항,제10조의6 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 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함	, 노인, 임산부 등	무, 인증심사, 인증운영위 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교통· 이용	교통·이동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5.0 1.27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 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 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 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 바지하고자 함	장애인 , 고령자 , 임산부 , 영유아 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정의, 이동편 의증진계획의 수립, 이동 편의시설설치기준 및 설 치 등, 보행우선구역지정, 장애인용승강기 설치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에 관한 법률	2012.0 2.22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 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 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가족 위험으로부터 국민 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 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 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전대상	보행권 보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 본계획 수립, 보행환경개 선지구의 지정 등
차별 인식	장애인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0 4.10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 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 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 과적으로 구제하여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장애인	차별금지, 가족·가정·복지 시설, 건강권 등, 장애여 성 및 장애아동 등
	발달장애	2014.0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	발달	발달장애인의 권리,자기

	인권리보 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20	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 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 과 권리옹호가 체계적이 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 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 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장애인	결정권의 보장, 형사·사법 절차상권리보장, 복지서 비스의 신청, 조기진단 및 개입 등
	장애인복 지법	1981.0 6.05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정 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 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 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복 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 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 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 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 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 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애인	장애인의 권리, 중증 장 애인의 보호, 여성장애 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 정책종합계획, 편의시설,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	1995.1 2.30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 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 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 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 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정신 질환자	국가계획의 수립, 정신건 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주: 1.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부 개정(1989.12.30.)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으로 법명이 개정됨

2.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인 등이

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의미함

2) 지원조례현황

<표 3-3>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 관련 조례 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소관부서	제/개정일
경기	경기도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2019.08.06
경북 김천시	김천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2019.08.24.
대구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2019.05.20
전남 목포시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2020.06.22
서울 금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2020.12.31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2020.11.12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2021.07.15
경기 성남시	성남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2021.02.19
인천	인천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2019.12.30
충남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저출산보건복지 실 장애인복지과	2020.12.30

자료: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및 영향평가 기준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선행검토

(1) BF인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① BF인증 제도의 현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BF인증 관련 규정

○ 지역현재 BF인증제도는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년 1월 29일 관련 조항 신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9년 12월 29일 관련 조항 신설)을 법적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 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경우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이 BF인증 제도와 관련된 부분임

○ 각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중에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 목록을 명시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는 인증대상지역

에 ① 읍·면·동,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중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③ 그 밖에 법령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였음

○ BF인증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동시에 관장하는 공동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명시 되어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규칙은 구체적으로 인증 대상, 인증기관, 인증심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BF인증 조직

○ 주무 부처

- BF 인증제도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주무 부처는 인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년간 교대로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인증운영위원회

-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도시·군 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됨

- 인증운영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인증수수료 체계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함

○ 인증기관

-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음

-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함

- 2019년 기준 BF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 산성본부인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으로 총 7개 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8년부터 가장 먼저 인증기관이 되었고 2017년에는 한국감정원, 한국 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인증기관이 되었음. 이 중 한국토지 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개별시설과 지역 등 모든 인증대상에 대한 인증 이 가능하고, 그밖에 기관들은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개별시설 중 건축물에 대한 인증만 가능함

○ BF인증 대상사업 및 종류

○ 인증대상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2008년 7월 15일에 제정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2008년 도에 시행될 때, 인증대상은 1. 도시, 2. 구역, 3. 개별시설의 세 가지였음. 이때 도시는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 또는 각종 개별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200만㎡ 이상의 사업지역을 의미하며, 구역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시·군·구의 행정동, 각종 개발법에 따라 조성되는 10만^m² 이상의 사업지역 또는 도로와 그 도로에 연속적으로 접하는 공공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을 의미하였고, 개별시설물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의미하였음

- 이후 2010년 7월 9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인증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와 지역으로 변경되었음. 이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 되는데, 이것은 2009년 12월 29일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이 신설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대상시설만 포함한 것으로 보임

- 이후 2013년 12월 24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대상시설 중 도시가 삭제되고, 구역은 지역으로 변경되어 지역인정과 개별시설인증으로 바뀌게 되었음. 이때 지역은 행정구역으로 구분되는 읍·면·동 또는 각종 개발법에 따라 새로이 조성되는 10^m² 이상의 사업지역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정하는 지역을 의미하게 되었음

- 공원,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은 2015년 1월 28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신설되면서 2015년 8월 3일에 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대상)에 포함됨

- 제2조에 따르면 인증대상은 1. 개별시설, 2. 지역으로 구분되며, 개별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이 포함되는데, 제10조의2 제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인증 의무화가 시작되었음
-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2015년 7월 24일에 신설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을 정해주고 있음
- 따라서 현재 BF 인증대상은 크게 개별 시설과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개별 시설중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경우는 지역과 함께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표 3-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복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갇혀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갇혀·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3-5> BF인증 대상

구분		내용
개별시설	대상시설	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 밖에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등
	여객시설	정류장, 철도시설, 환승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도로	보도, 횡단시설 등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읍·면·동, 도시·군계획사업, 지역재정비축진사업, 지역택지개발사업 지역 등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 인증 종류(단계)

- BF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심사기준에 따라 각각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으로 구별하여 인증 결과가 부여됨
- 예비인증은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신청하고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지만, 본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본인증을 받아야 함
- 본인증은 공사 및 지역조성을 완료하거나 교통수단을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임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함

○ BF 인증 절차 등

○ 인증절차

- BF 인증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따라 구분됨
- 예비인증은 예비인증 신청→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 등 1차 평가→인증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 →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 순으로 진행됨
- 본인증은 본인증 신청→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 순으로 진행됨

○ 인증수수료

- 인증을 신청한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예비인증, 본인증,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함
- 2019년 1월 1일부터 개별시설의 크기에 따라 인증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지역 인증의 예비인증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429만원이고, 본인증의 경우 면적에 따라 618만원에서 995만원까지 부과되며, 개별시설 중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예비 인증 286만원, 본인증 403만원이 부과되고,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경우 예비인증시 면적에 따라 103만원에서 309만원까지 수수료가 소요되고, 본인증시 면적에 따라 201.5만원에서 604.5만원까지 부과됨

<표 3-6> 인증수수료 체계(2019.1.1. 시행)

(단위: 만원)

구분	지역 인증			개별시설 인증					
	10만㎡ ~ 200만㎡	200만㎡ ~ 300만㎡	300만㎡ 이상	교통 수단, 여객 시설, 도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300㎡ 미만	300㎡ 이상 ~ 1,000㎡ 미만	1,000㎡ 이상 ~ 3,000㎡ 미만	3,000㎡이 상 ~ 10,000㎡ 미만	10,000㎡ 이상
본인 인증	618	807	995	403	201.5	322.4	403	483.6	604.5
예비 인증	429	429	429	286	103	164.8	206	247.2	309

주1: 부가제 별도, 인증 연장 수수료는 100분의 50

2: 개별시설의 제5구간(10,000㎡ 이상)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 (2019.12.31.)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 인증서발급

- 인증이 결정되면 개별시설과 지역에는 각각 인증명판과 인증안내판이 소유자 등에게 발급됨
-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이를 부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 BF인증 실적

- BF인증 제도의 인증율은 인증의무가 있는 국가·지 자체의 인증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2%대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BF인증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4,771건의 인증 중 인증대상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의 인증실적 이 4,172건으로 전체의 8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의 인증실적은 599건으로 전체의 12.6%에 불과함

- 해마다 공공의 인증비율이 높아지고 민간의 인증 실적은 점점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예비인증에 비해 본인증의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예비인증은 3,346건으로 70.1%를 차지하고 있지만, 본인증은 1,425건으로 29.9%에 불과한 수준임
- 또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 대한 인증은 미미한 반면, 건축물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 3-7> BF인증 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총계	4,771	4	18	45	96	115	126	155	188	629	1,213	1,654	528
인증대상	민간	599	1	3	24	52	46	49	50	54	106	130	34
	공공	4,172	3	15	21	44	69	77	105	134	1,083	1,554	494
인증단계	예비인증	3,346	3	13	33	89	89	87	92	123	545	941	1,041
	본인증	1,425	1	5	12	7	26	39	63	65	84	272	316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표 3-8> 인증대상별 인증실적 현황

(단위: 건)

구분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합계
예비인증	최우수	1	5	2	63	168	229
	우수	-	3	3	22	1,595	1,623
	일반	-	-	-	-	163	163
	합계	1	8	5	75	1,926	2,015
본인증	최우수	-	-	2	12	83	97
	우수	-	-	2	10	445	467
	일반	-	-	1	-	19	20
	합계	0	0	5	22	547	574
공공	-	6	8	15	2,045	-	2,074
민간	1	2	2	82	428	-	515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2) BF 인증 관련 법체계

○ 2008년 도입된 BF 인증 제도는 인증신청, 심사, 심의, 인증서 발급 등의 인증업무 전반에 걸친 관리시스템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개별 시설물 또는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BF 인증제도 관련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시행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령이다. 즉,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림 3-2】 BF인증 관련 법 체계

법률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p> <p>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0조의7(청문)</p>	<p>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p> <p>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p>
시행령	<p>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의 범위)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p>	<p>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p> <p>제15조의2(인증대상지역) 제15조의3(인증표시)</p>
시행규칙 (공동부령)	<p>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p> <p>제1조(목적) 제2조(인증 대상)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6조(인증의 신청) 제7조(인증심사 등) 제8조(인증 기준 등) 제9조(인증서 발급 등) 제10조(인증의 취소) 제11조(재심사 요청)</p> <p>제12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2조의2(사후관리) 제12조의3(인증수수료)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해촉)</p>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 법률

○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시해온 BF인증제도는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년 1월 29일 관련 조항 신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9년 12월 29일 관련 조항 신설)을 법적 근거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 두 법률 중 BF인증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이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경우 제17조의2와 제17조의3임

○ 법률에 의한 인증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와 같은 개별시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임

○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인증대상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화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인증대상 지역의 범위를 추가하고 있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 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의무적으로 인증 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는 인증대상지역에 ① 읍·면·동,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중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③ 그 밖에 법령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 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하였음

○ 규칙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 인증의 주체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시함에 따라 두 부처가 동시에 관장하는 BF인증 관련 공동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2010년 7월 9일부터 시행하였음

○ 이 규칙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인증 대상, 인증기관, 인증심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례

○ 시·도 중에서는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와 같은 7개 시·도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또한 대구시 달서구, 대구시 북구, 광주시 동구,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남도 거창군과 같은 5개 시·군·구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제주도와 같은 4개 시·도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현재 16개 지역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각 지역의 조례는 비슷한 형식과 내용이지만, 대상시설, 의무시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

- 부산시처럼 대상시설과 의무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대상시설과 의무시설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각 시·도가 건축주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도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시·도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까지도 의무시설에 포함하고 있음

- 의무대상시설에 공공건물의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과 개축도 포함하고 있는 조례들이 다수 있음

-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처럼 민간기관의 건축물도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지정하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BF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음
- 의무대상시설에 각 시·도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점,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도 포함하고 있는 점, 장애인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사회 복지사업 목적 건축물, 비영리 기관이 건축주인 건축물 등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점 등은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함의를 주는 것으로 보임

<표3-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비교

조례 (지역으로 표기)	대상시설 (적용 범위)	의무시설 (인증취득의무)	지원 (인증취득지원)
서울시 교육청	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부산시			의무인증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대구시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권장시설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 가능
광주시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권장시설에 대한 행정적, 경제적 지원 가능
	3.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 시설로서 건축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하며,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고 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건축물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광주시 교육청	1.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경기도	의무+ 권장시설 권장시설: 민간시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 경기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경기도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경기도 교육청	1. 경기도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	인증 취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가능
충청남도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민간시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개인이 건축주인 인증(예비 인증 포함) 받은 건축물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지사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증축, 전면 개축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의 인증 대상의 시설주(또는 인증수수료 납부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수수료의 50%(부가세 제외) 지원 가능
전라남도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민간시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 전라남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전라남도가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3. 그 외 전라남도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수수료지원 가능 기타 인증 취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행·재정적 지원 가능
제주도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민간시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4. 건축주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1.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제주자치도가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재인증을 포함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제주도교육청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신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아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정 하는 공공건축물	도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 가능
대구 달서구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3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 2.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1.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3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대구 북구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행정적·재정적 지원
광주 동구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1.동구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동구가 위탁 운영하는 건축물 3. 그 외 동구가 전부 혹은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 4. 동구의 도로, 공원등 공공발주 대상물	공공건물 입찰 참여시 기존 인증 취득 실적이 있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등 인증 취득 장려
목포시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건축물	1. 시가 건축하는 공용의 청사 2. 시가 신축하여 위탁 운영하는 다중이용 공공건물 3. 그 외 시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수수료 지원 기타 인증 취득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지원
거창군	의무시설+권장시설 권장시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거창군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수수료의 50퍼센트 (부가세 제외) 지원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3) BF인증제도의 문제점

○ BF인증제도 비활성화 문제

○ BF인증제도 필요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BF인증제도를 편의시설 정책의 다른 버전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이 다수 존재함

- 현행 BF인증제도가 주로 접근성을 강조하다 보니 편의증진보장법에 의한 편의 시설 설치에 부가된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이처럼 추가규제로 여기는 인식이 많다 보니 법률에서 의무를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규정을 지키려 하나, BF인증은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굳이 지키려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BF인증에 따른 이익 부족

- 현행 BF인증제도는 인증을 받은 노력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의 만족감 이외에 제공되는 이익이 부족한 상황임

- BF인증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물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나 BF인증을 위해 소요한 비용 및 노력에 비해 얻는 이익이 적을 경우 인증을 회피할 수밖에 없음

- 현행 인증제도 하에서는 인증을 받더라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단지 BF인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BF인증을 받기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해당 면적만큼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는 혜택만 있을 따름임

- 인증 신청시 오히려 2~4백만원 정도의 인증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음

- 공공시설의 경우 인증의무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지만 불이행시 어떤 제재조치도 없어 결국 현재 BF인증 제도는 공익적 차원의 만족감 외에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또한 벌칙도 없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건축주, 특히 민간분야 건축주 입장에서는 BF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이익이 없고, 안 받아도 벌칙이 없다보니 인증을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해 결국 민 간부분의 BF인증을 유도할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BF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 BF인증이 결정되면 개별시설과 지역에는 각각 인증명판과 인증안내판이 소유자 등에게 발급되어,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 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이를 부착하고 홍보에 활용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

- 소유자 등이 BF인증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BF인증에 대해 알고 있고, BF인증을 받은 경우 이용 등이 더욱 활성화되거나 심리적 만족감이 상승되어야 하나, 현재 BF인증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BF인증이 하나의 브랜드로써 작동하지 못해 BF인증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

-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의시설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 보니, BF인증에 대한 인식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9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업체 측은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며, 폐업 시 임대인이 경사로 철거를 요구하는 점 등을 어려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주는 장애인 1~2명을 위해 비용을 쓸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한편, 경사로가 인도를 점유하여 보행 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철거하는 사례도 있어 BF인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BF인증 의무대상의 제한성

○ 인증대상의 제한성

- 현재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경우로 제한되다 보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설립한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은 모두 배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민간이 건축하는 건물 및 시설의 경우에도 국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를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존재함에도 이와 같은 건물 및 시설이 의무대상에 서 배제된 문제점이 존재함

○ 건축범위의 제한성

- 인증대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로 인증의무대상이 제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증축, 개축,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BF인증 의무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기존 건물의 경우에도 이 제도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으나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지표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등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BF인증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기존 건축물을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현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용도와 면적에 대한 고려 미흡

- BF인증 의무대상시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시설로 규정하다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소규모 시설까지 모두 포함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음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BF 대상시설 관련하여, 현재 규모의 제한이 없다 보니 공원 내 화장실과 같은 소규모 건물도 의무대상이 되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소규모 시설이라 하여도 장애인 등 모든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시설의 용도에 따라 이용 정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용도 및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에 따라 일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을 높이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므로 용도와 규모를 함께 고려한 대안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수수료 부담 문제

-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수수료 비용 등이 BF인증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현재 소규모 시설의 수수료와 재인증 수수료가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는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BF인증 참여를 유도하고자 2018년 8월 '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고, 기존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인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해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소규모 민간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함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인증이 꼭 필요함에도 수수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BF인증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음
- 현재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건물의 큰 변동의 없었음에도 5년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음

○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의 문제점

-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부재
- 현행 인증기관 지정 정책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음
- 하지만 3년 이내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연장을 위한 평가나 재지정을 위한 평가 제도는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인증기관을 수시(1년 단위)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운영 중인 7개 인증기관별로 상당한 전문성 격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인증 품질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몇몇 기관들은 공공정보다는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 기관의 인증 품질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인증기관 부재

- 현재처럼 인증기관이 7곳에 이르게 되면 주무부서의 인력만으로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 인증제도의 홍보 및 제도 개선, 심 사전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인증기관만 있다보니 인증을 위한 심사제도는 발전할 수 있지만, 건축주 등에게 인증제도를 알리고, 제대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등 지원업무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BF인증 제도가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되고, 인증기관이 많아졌기 때문에 타 인증제도의 경우처럼 인증운영기관을 새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인증심의위원회 및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의 문제 - 시민 대표성 부족

- 최종적인 인증단계인 인증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더불어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와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 장애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복지 업무 경력자를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영 현장에서는 위원회가 건축, 도시계획, 조경, 장애인복지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어, 장애 관점보다는 업계의 의견이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BF인증제도는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노인, 장애인, 여성(임산부 포함) 등 시설,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각 위원회에 노인, 장애인, 여성(임산부 포함) 등 시민대표가 4-5 인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체, 시각, 청각, 발달 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접근권(Right to Access)은 장애인의 기본권 중 하나로 건축물의 이용과 접근에 대한 권리(건축물 접근권 또는 시설 접근권)와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권리(이동권), 그리고 전자 및 비전자 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정보접근권)를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장애인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음

- 법률에서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대상의 범위에 있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대상시설은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이용방법에 있어서 장애인도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접근성(accessibility)이라고 하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등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특히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과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서비스’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건축물 접근권

○ 우리나라의 건축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특징은 건축물의 접근성을 편의시설이라는 시설물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장애인의 건물의 이용과 이동에 대한 부분을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시설과 설비를 편의시설로 지칭하게 되었음

- 법령 측면에서도 보면 「심신장애자복지법」(1980)에서부터 최근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2005)까지 공간 전체의 이용측면에서의 접근성 또는 접근권 보장이라기보다는 편의시설 설치라는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려고 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접근성은 다양한 방안 가운데 편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었고 건축물 접근권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권리로 축소되었음

- 이에 반해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뿐 아니라 장애물의 제거(barrier free), 합리적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을 포함시킴

- 우리나라의 경우 BF인증 제도의 의무화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통해 합리적 편의제공을 도입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기본적인 정책은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2018년 기준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74.8%로 2013년의 60.2%에

비해 증가했으나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률은 실제 설치율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편의시설 설치율과 장애인의 접근성이 비례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장차법이 도입된 이후 근 10년 간 시설물 접근에 대한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는 전체 중 12.2%로 재화·용역 일반,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건축물 등 시설에 접근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실제 건물을 자유롭게 이용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함

○ 유니버설디자인

○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제품이나 시설,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대상자는 모든 사람이며, 장애의 유무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체형의 차이, 신체기능이나 이해력의 차이 등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BF 인증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BF인증이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유니버설디자인은 처음부터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은 특정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 복수의 디자인 및 제품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국내에서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기준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BF인증의 지속적인 발전과 맞물려 공간 유니버설디자인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정보와 제품 영역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BF인증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초고령화된 사회구성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 가능 하도록 다양한 사회 환경의 유니버설로의 변화가 요구됨

-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국제 흐름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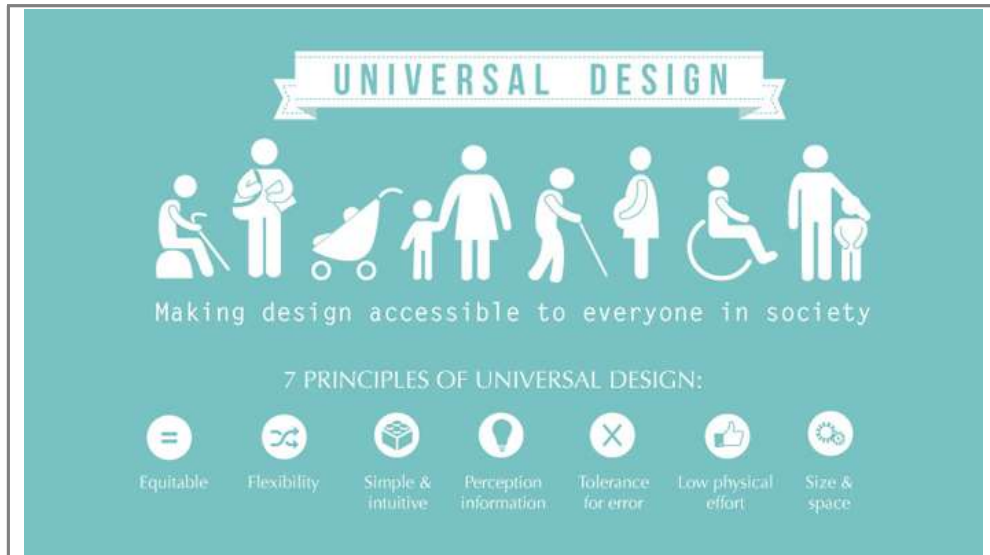
○ BF인증제도는 건물과 공간에 대한 디자인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개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BF인증과 함께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로 유니버설디자인도 함께 고려해야 함

<표3-10>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원칙

구분		원칙
1	quitable use	동등한 사용
2	flexibility in use	사용성의 유연성
3	simple and intuitive use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용법
4	perceptible information	정보이용의 용이
5	tolerance for error	오류에 대한 포용력
6	low physical effort	최소의 물리적 노력
7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자료 :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그림 3-3】 유니버설 디자인 로고



자료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홈페이지

(4) 편의시설의 효율성

○ 국내 문헌 분석

- 김인순 등(2009)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비용 효과 분석 연구에 서 장애물 없는 건물의 비용편익분석의 국내외 사례를 고찰하고 인증을 통해 건물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하고 있음
- 김인순 등은 먼저 무장애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구분하며 제시하고 있음
- 김인순 등(2009)은 무장애(barrier free)와 같은 공공재화는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선택가치, 존재가치 등과 같은 비사용가치도 가지고 있으므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총경제가치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 (CVM)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무장애 공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연구들은 건물이 지어진 후에 개보수하는 것보다 건물 계획부터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

에 유리하며, 계획부터 반영할 경우 기존 공사 비용의 1~3%의 비용만 추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예비인증을 통해 건축물 등의 계획부터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편익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박신원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여객시설의 점수를 분석하여 인증이 어느 부분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음

<표3-11> 무장애 시설의 경제적 가치체계

총 가치 (total value)	사용가치 (use value)	직접사용가치 (direct use value)	무장애시설을 현재 직접 사용할 때 획득되는 가치
		간접사용가치 (indirect use value)	다른 사람들(지인, 타인 등)이 무장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얻는 가치
	비사용가치 (non-use value)	선택가치 (option value)	무장애시설에 대한 의도된 미래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가치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다른 사용·비사용가치 외에 무장애시설이 존재하여 편리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획득되는 가치
		유증가치 (bequest value)	미래세대가 무장애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존되는 것에 대하여 느끼는 가치

자료 : 김인순 외, 2009, p. 30.

<표3-12> 무장애 건물의 비용편익분석 선행 연구

저자	연구 연도	주요 내용
Schroeder & Steinfel	1979	초기 계획단계부터 무장애건축으로 디자인할 경우 나중에 개조비용에 비해 4배에서 35배의 비용이 절감됨
싱가포르 도심 재개발기관 (CIB W84 Report)	1993	사무공간, 주차장, 푸드센터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접근을 제공한 시설은 비용이 11% 증가함.
Armani	1993	접근 가능한 기준에 의해 지어진 공동주택은 0.5~1%의 비용이 증가함.
Ratzka	1994	평균적으로 접근가능한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은 0.1%, 공동주택은 3% 정도의 비용이 증가하나, 건축가, 시공자, 공급자의 무장애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비용은 현저히 줄어든 것.
Desmyter & Lechat	2006	디자인 단계부터 접근가능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경우 총 건설비용의 1.8%가 더 소요됨.
Gaia	2008	기존의 건물에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복도시스템, 승강기와 같은 요소들은 변형이 불가능했으며, 계획시 비용보다 2.1%의 추가비용이 소요됨.

자료 : 김인순 외, 2009, p. 30~323.

○ 국외 문헌 분석

○ 국외에서는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배리어프리화의 사회경제적 평가 확립 을 향하여』라는 연구를 통해 배리어프리(BF)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적용 가능성 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 연구에서 가상평가법(CVM : Coningent Valuation Method)을 활용하여 편익을 측정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역사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 함

- 연구에서는 배리어프리사업의 경제효율성 즉, 투자효율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써 비용편익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역사 시설에서 장애

인과 노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쾌적한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정비효과를 계량화하고자 함

- 일반적으로 교통시설 관련시설정비의 편익계측 방법으로는 시간 단축 효과나 주행비용 절효과가 편익의 전부가 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보행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정신적·육체적 부담 경감이라는 효과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의 성격이나 데이터 제약으로 시간 단축이나 주행비용 절감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국토교통성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도시환경 및 광의의 환경의 경제성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의식조사 방법인 가상평가법(假想評價法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 로 칭함)을 이용하여 편익을 측정함

- CVM 모델의 설명변수로서 제시금액, 지역, 연령, 고령화 의식별로 현재 역시 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의 자신의 편익을 포함하고 있는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등의 5가지의 항목을 채택하여 지불행동모델과 WTP를 추정함

- 제시금액, 지역(도쿄 or 센다이), 연령, 고령화 의식(고령이 되어도 현상태의 역시설이 충분히 편리하고 쾌적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자신의 편익을 포함하는가 포함하지 않는가라는 항목에 있어서, 지역은 동경보다 센다이가, 연령은 많으면 많을수록, 고령화의 의식은 나이가 들면 지금의 시설은 불편할 것이라는 의식이 가진 사람이, 현재 자신의 메리트를 포함한 설문표에 회답한 쪽이 보다 높은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결과에서 역시설 내의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설문지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였지만 모두 설치하는데 있어서의 지불금액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각 각의 지불액의 합과 일치하지는 않는 결과를 나타냄

- 지역비교에 있어서는 센다이 지역의 지불 의사액이 동경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는 도심부보다는 주변 지역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심지보다도 교외에 고령자 더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예상대로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 불의사액이 높았으며, 고령화의 의식에 있어서는 현재 역시설로 고령을 맞이하였을 때 현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역사 시설 내의 배리어프리화에서 특히,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의 필요성의 상당히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남
- 국토교통성은 배리어프리 정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매크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함
- 분석 결과 먼저, 배리어프리 정책의 실시로 소비를 동반하는 행동이 증가하고, 여행 횟수가 증가하며, 노인 가족이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배리어프리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하트빌딩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가는 국내 항공 이용의 증가와 노인의 일본 내 관광인구의 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 및 노인 1인당 JR역의 엘리베이터의 수도 소비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함
 - 국토교통성은 매크로 경제에 있어서 국민의 저축율 감소 등의 요인이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배리어프리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산능력이 증가되어 오히려 국민경제는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음

(5) 유럽연합의 '접근성 도시 대상'

○ 도입 배경 및 목적

- 유럽연합(EU)에서 2010년부터 착수하여 2011년부터 시상을 시작한 '접근성 도시 대상'(Access City Award)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특히 도시 지역의 접근성 (accessibility)을 높이기 위한 시도 중 하나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접근성 도시 대상'의 도입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의한 의무와 '유럽장애전략(European Disability Strategy) 2010-2020'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1).
- 유럽장애전략 2010-2020은 유럽연합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10년간 장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계획이며, 정책 영역을 크게 8개로 구분하는데 그 중 첫 번째가 '접근성'임(European Commission, 2010).
- 장애인 이 완전한 권리를 향유하고 완전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전반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위해 8개 영역에서의 장벽(barrier)을 제거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자 함
 - 전략의 부제에도 '장벽 없는 유럽'(Barrier-free Europe)이라는 목표가 달려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0)
 - '접근성 도시 대상'은 유럽장애전략 2010-2020의 주요 이행 실적으로도 소개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b)
- 구체적으로 '접근성 도시 대상'의 시상은 ①유럽연합 내에서 접근성을 높이려는 도시의 노력을 인정하고, ②장애인 등의 도시 생활에서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며 ③ 지방 당국이 접근성에 대한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짐

○ 신청 대상 및 선발 과정

- ‘접근성 도시 대상’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내의 도시를 신청 대상으로 함
 - 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유럽연합의 시민 5명 중 4명이 도시에 거주할 정도로 유럽이 본질적으로 도시화 되었다고 보기 때문임
 - 신청 대상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①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②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국내에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가 2개 미만인 경우, 두 개 이상의 인접 소도시가 결합하여 인구 5만 명 이상이 있는 도시 지역이 신청이 가능함
 - 동일 도시가 여러 차례 신청하고 수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년 연속 수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수상한 도시의 다음 해 신청은 금지됨
- 심사 영역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과 실제 이루어진 조치를 평가함
 - 첫 번째 영역은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두 번째 영역은 교통 및 관련 인프라, 세 번째 영역은 신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ICTs), 네 번째 영역은 공공시설 및 서비스로, ‘접근성 도시 대상’은 시설 접근성, 이동권, 정보 접근성이라는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시설 접근성 및 이동권에 초점을 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와 차이가 있음
- 심사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로 ①접근성 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가 ②시설의 소유권, 그리고 헌신의 수준 ③접근성 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의 영향 ④접근성 향상을 위해 취한 조치가 낳은 결과의 질과 지속가능성이, ⑤ 장애인 및 관련 파트너의 참여 정도로 구분됨
- 심사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1단계인 사전심사는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짐

- 신청국가별로 구성된 국내 심사단(National jury)이 신청 도시의 접근성을 평가하여 국가별로 최대 3개의 도시를 선정하는데, 이때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선정이 가능하며 사전심사를 통과한 도시는 2단계인 최종심사에 올라감
- 최종심사는 유럽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전 유럽 차원에서 구성된 심사단 (European jury)이 최종 심사를 하여 수상 도시를 선정하게 됨
 - 심사단은 장애인, 노인 등의 당사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됨
- 최초 시상인 2011년의 경우 유럽심사단은 패럴림픽 휠체어테니스 메달리스트 Mark Eccleston을 위원장으로 하여 장애인단체 대표, 노인 및 장애인 교통 전문가, 건축가, 민간재단의 접근성 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장애인권리 국장 등으로 구성됨
- 2012년의 경우에도 북극탐험가인 Marek Kamiński를 위원장으로 하여 당사자 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였음

<표3-13> '접근성 도시 대상' 선발 기준 및 과정

심사 영역	심사 기준	심사 절차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교통 및 관련 인프라 -신기술을 포함한 정보통신 -공공 시설 및 서비스	-조치의 범위 -소유권, 현신의 수준 -영향 -결과의 질과 지속가능성 -장애인 및 관련 파트너의 참여	-사전심사(국가수준): 신청국가별로 구성된 국내 심사단이 국가당 최대 3개 도시 선정 -최종심사(유럽수준): 전 유럽 차원에서 구성된 유럽심사단이 최종 심사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 수상 현황

- 유럽연합의 '접근성 도시 대상'은 2011년 66개 도시, 2012년 114개 도시가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2019년에도 52개의 도시가 신청하였음

- 2011년 제1회 ‘접근성 도시 대상’에서는 스페인의 아빌라(Ávila)가 대상을 수상하였음
- 인구 6만의 중세 도시인 아빌라는 2002년 ‘아빌라 접근성 특별 행동계획’(Special Action Plan for Accessibility in Ávila)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건축, 통신, 교통 등 모든 영역에서 접근성을 핵심 이슈로 적용하고, 2007년에는 시 정부에 접근사회관광부(Department of Accessible and Social Tourism)를 설치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 건축물과 교통수단의 개조, 신기술의 적용 등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중세 관광도시로 발돋움한 것이 아빌라가 대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이 되었음
- 제2회 ‘접근성 도시 대상’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Salzburg), 2013년 독일의 베를린(Berlin), 2014년 스웨덴의 예테보리 (Göteborg), 2015년 스웨덴의 보로스(Borås), 2016년 이탈리아의 밀라노 (Milan), 2017년 영국의 체스터(Chester), 2018년 프랑스의 리옹(Lyon)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네덜란드의 브레다(Breda)가 대상을 수상함
 - ‘접근성 도시 대상’에서는 1~3위의 수상 도시를 발표함과 동시에 최종 심사 단계까지 올라갔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 도시 중에서 특정 부문에서 접근성 향상의 좋은 사례가 되었던 도시를 ‘특별 언급’(special mentions) 부문으로 발표하고 있음
- 초창기에는 ‘접근성 도시 대상’의 네 가지 심사 영역에서 두드러졌던 도시들을 ‘특별 언급’ 수상 도시로 발표했음
- 2016년부터는 기존의 심사 영역이 아닌 새로운 ‘특별 언급’ 분야의 시상을 시작했는데, 2016년에는 노인 및 장애인의 접근성 부문과 근로환경 개선 부문에, 2017년에는 스마트시티, 근로환경 개선, 금융환경 개선, 지형의 어려움 극복 부문을, 2018년에는 문화유산 접근성 부문, 2019년에는 혁신적인 건축환경, 지속적인 접근성 개선 부문의 ‘특별 언급’ 시상을 하였음

- 2019년에는 ‘유럽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문화유산 접근성 부문의 특별상(Special Prize)을 별도로 시상하였음
- 15개 도시가 신청하여 인구 5만 이상 부문에서는 덴마크의 비보르(Viborg)가, 인구 5만 미만 부문에서는 이탈리아의 몬테베르데(Monteverde)가 수상하였음

<표3-14> ‘접근성 도시 대상’ 연도별 수상 도시

연도	본상	특별 언급(special mentions)
2019년 (제9회)	-1위: 브레다(네덜란드) -2위: 에브뢰(프랑스) -3위: 그디니아(폴란드)	-지속개선: 커포슈바르(헝가리) -혁신건축환경: 비고(스페인)
2018년 (제8회)	-1위: 리옹(프랑스) -2위: 류블랴냐(슬로베니아) -3위: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문화유산 접근성: 비보르(덴마크)
2017년 (제7회)	-1위: 체스터(영국) -2위: 로테르담(네덜란드) -3위: 유르밀라(라트비아)	-스마트시티: 루고(스페인) -근로환경개선: 셀레프테오(스웨덴) -금융환경개선: 알레산드리아(이탈리아) -지형어려움극복: 푼살(포르투갈)
2016년 (제6회)	-1위: 밀라노(이탈리아) -2위: 비스바덴(독일) -3위: 툴루즈(프랑스)	-근로환경개선: 바사(핀란드) -노인장애인접근성: 커포슈바르(헝가리)
2015년 (제5회)	-1위: 보로스(스웨덴) -2위: 헬싱키(핀란드) -3위: 류블랴냐(슬로베니아)	-공공시설 및 서비스: 아로나(스페인),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로그로뇨(스페인) -교통 및 인프라: 부다페스트(헝가리)
2014년 (제4회)	-1위: 예테보리(스웨덴) -2위: 그르노블(프랑스) -3위: 포즈난(폴란드)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벨파트스(영국) -정보통신기술: 드레스덴(독일) -공공시설 및 서비스: 부르고스(스페인) -교통 및 인프라: 말라가(스페인)
2013년 (제3회)	-1위: 베를린(독일) -2위: 낭트(프랑스), 스톡홀름(스웨덴)	-교통 및 인프라: 그디니아(폴란드) -정보통신기술: 빌바오(스페인)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팜플로나(스페인) -공공시설 및 서비스: 탈라(아일랜드)
2012년 (제2회)	-1위: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2위: 크라쿠프(폴란드), 마르부르크(독일), 산탄데르(스페인)	-건축환경 및 공공 공간: 테라사(스페인) -교통 및 인프라: 류블랴냐(슬로베니아) -정보통신기술: 올로모우츠(체코) -공공시설 및 서비스: 그르노블(프랑스)
2011년 (제1회)	-1위: 아빌라(스페인) -2위: 바르셀로나(스페인), 쾰른(독일), 투르쿠(핀란드)	-공공서비스: 반즐리(영국) -정보통신기술: 더블린(아일랜드) -교통 및 인프라: 그르노블(프랑스) -건축환경: 말뫼(스웨덴)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1~2019)에서 정리

○ 수상 결과의 활용

○ 유럽연합의 ‘접근성 도시 대상’의 시상식은 전년도 말(11월 말 ~ 12월 초)에 개최되며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장애인의 날’(European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컨퍼런스 행사와 동시에 진행되는데, ‘접근성 도시 대상’은 시상식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상 도시들을 홍보하고 있음

- 우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근성 도시 대상’에 대한 메뉴를 구성하여 의미, 절차, 연도별 수상도시 등을 소개하며, 또한 수상 도시의 접근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 (facebook)에 게시하고, 마지막으로 ‘접근성 도시 대상’에 대한 소개와 수상 도시의 모범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

【그림 3-4】 ‘접근성 도시 대상’ 홍보 수단



자료 : 접근성 도시 대상(Access City Award) 홈페이지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제도

(1) 인증개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

○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 1. 28 개정) 제10조의 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5. 1. 28 개정) 제17조의 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5. 8. 3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인증 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함

○ 인증신청자

-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 인증 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 인증 신청 전

○ 본인증: ①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 인증등급

○ 크게 최우수, 우수, 일반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정해짐

<표3-15> BF인증 등급 구분

등급	평가점수	비고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 인증신청자

○ 본인증 : 5년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2) 종류 및 절차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경우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함
-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서류제출 후 접수, 인증수수료납부, 서류검토, 인증심사단심사, 심사답변 제출, 답변 검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심의 답변 제출, 답변검토의 총 9개의 절차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됨

○ 본인증

- 개별시설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항공법」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가능함
-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가능함
- 인증절차는 인증 신청 서류 제출 후 접수, 인증수수료납부, 서류검토, 인증심사단심사, 심사답변 제출, 답변 검토,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심의 답변 제출, 답변검토의 총 9개의 절차를 거쳐 현판 제작 및 인증서가 발급됨

【그림 3-5】 예비인증 인증절차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그림 3-6】 본인인증 인증절차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3) 인증 수수료

○ 인증 수수료는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와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으로 구분되어 지불함

<표3-16>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제 4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 2018.8.441022.시행

<표3-17>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수수료

(단위: 만원)

구 분		지역 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이상~ 300만㎡미만	300만㎡ 이상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본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 비 인 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429	429	429	286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표3-18>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수수료**

(단위: 만원)

구 분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 인 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 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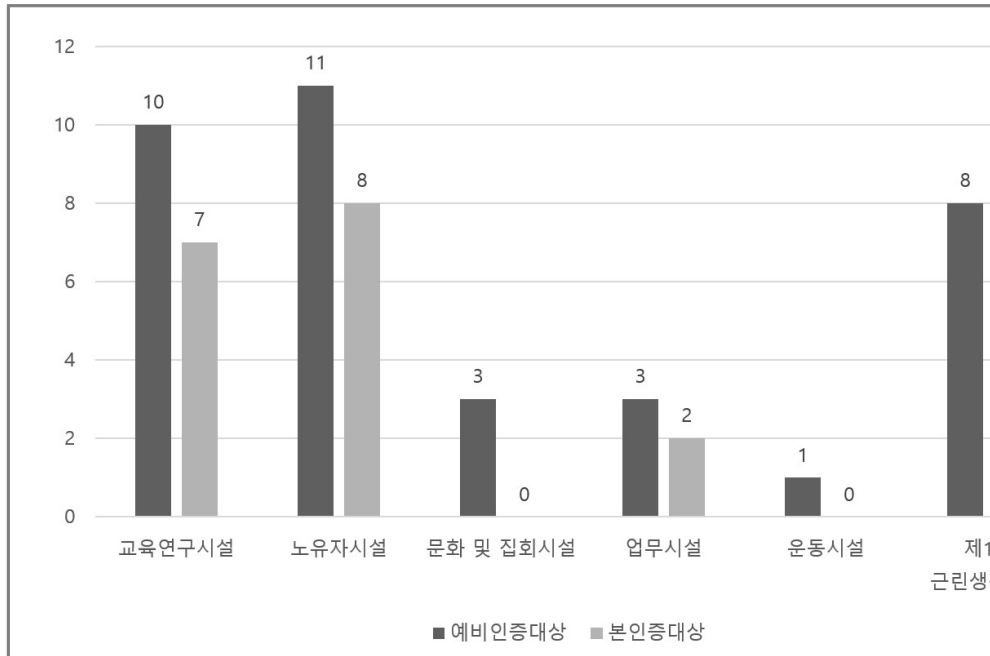
주: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3) 목포시 BF 인증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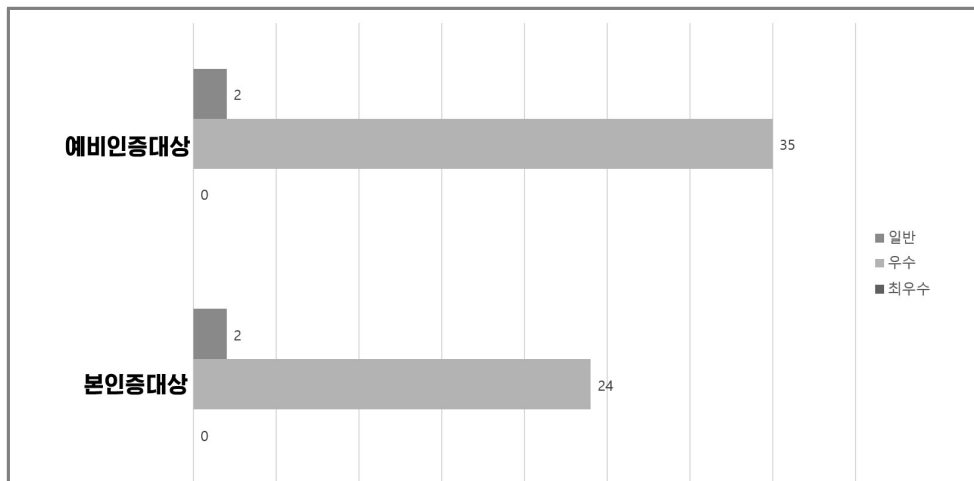
- 목포시 예비 인증대상은 모두 37건임
 - 인증대상은 모두 건축물이었으며 용도구분상 노유자시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연구시설이 10건, 문화 및 집회시설이 3건, 업무시설이 3건, 운동시설이 1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8건으로 나타남
 - 인증등급은 2건이 일반, 35건이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최우수 등급은 없었음
- 목포시 본인증대상은 모두 25건임
 - 인증대상은 모두 건축물이었으며 용도구분상 노유자시설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연구시설이 7건, 업무시설이 2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8건으로 나타남
 - 인증등급은 1건이 일반, 24건이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최우수 등급은 없었음

【그림 3-7】 목포시 인증실적 현황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그림 3-8】 목포시 인증실적 등급 현황



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4) 영향 평가 기준

(1) 전제사항

○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기준’이란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고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친화도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충분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배제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제고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친화도시 조성 정책이 장애인에게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지를 평가하고, 추후 정책수립 시에 피드백 (feed-back) 하는 도구로서 ‘친화 영향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친화 영향평가기준’ 마련은 장애인의 도시 내 정주여건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발굴 · 추진되는 도시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 및 그에 따른 피드백 (feed-back)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목포시는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에 근거하여 구 · 군의 장애인 친화영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목포시는 「동 조례」 제8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에 근거하여 구 · 군의 장애인 친화영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표3-19>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4.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5.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목포시장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주: 2020.6.22.시행

(2) 기본검토

○ 정부 정책지표

◦ 정부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되는 정책기준은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이외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문화관광체육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재정기획부 등) 및 산하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통계청 분석지표

◦ 통계청에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정책과 관련되는 분석기준은 크게 ① 인구·가구, ② 의료·건강, ③ 주거복지, ④ 고용·일자리, ⑤ 소득·소비, ⑥ 여가·사회참여, ⑦복지시설 등 7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각 부문별로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통한 통계치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모든 정치·경제·사회·복지분야에서 신뢰성있는 기초자료로 인용되고 있음

<표 3-20> 정부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관련 정책지표

담당 부서	산하 기관	발간자료 (발간년도)	정책지표	대부류(5개 부문)					비고 (근거법률)
				복지서비스확충	경제적자립반성	교육문화체육	장애인생활SOC확충	제도적개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 실태조사」 (2017)	장애인 출현율	0				◎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8조 내지 제 19조
			기본적 일상생활동작	0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0				◎	
			월평균 가구소득	0	◎				
			월평균 가구지출	0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0	
			건강보험 가입 여부	◎				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0	
고용노동부	자체	「2018 보육통계」(2019)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0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0		◎			
	국립재활원	「2019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2019)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0	-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수검률	◎				0	
			암검진 수검률	◎				0	
			구강검진 수검률	◎				0	
			장애인 의료이용 현황	◎				0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협회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국조사」 (2018)	편의시설 종류	0			◎		-
			편의시설 설치율	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2019)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인구 / 취업/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6조
			중상장지위 (취업자 지위/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		◎				
			산 3, 직업(경제활동 내용 / 기능별 종류)		◎				
			구직단절자 (통계청 기준 / E DI 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2019)	기업체		◎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6조
			상시근로자		◎			0	
			장애인 고용기업체		◎			0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			0	
			장애인고용의무기업체		◎			0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기업 / 상시 고용근로자)		◎			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 제7조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2015 주거실태조사」	주택 유형		◎		0		「주택법」제 5조 1항, 2

		태조 : 장애인 (2015)	주택 점유 형태		◎		0	항 · 동법 시행 령 제 6조에
			주거지원 프로그램		◎		0	
	교통 안전공단	「2018 교통 약 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2018)	저상버스, 특별 교통수단	0			◎	「교통약자 의 이동편의증 진 법」제25조
문화· 체육부	대한 장애인 체육회	「2018 장애 인 생활체육 실 태 조사」(2018)	생월·체육 참여형태	0		◎		-
여성 가족부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2018년 전 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 사 연구」 (2019)	다문화 가족 현황	0			◎	「다 문화 가 족 지원법」제2 조
교육부	자체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0)	특수교육			◎	0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 교 육법」 제 12조
			특수학급			◎	0	
			진학률			◎	0	
			취업률		◎		0	
재정 기획부	통 계 청 · 금 융 · 감 독 원 · 국 은 행	「2019년 가 계 · 금 융 · 보 지 조사 결과」 (2019)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		0	-
			소비지출액		◎		0	
			비 소비지출액		◎		0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		◎		0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주: 2020.6.22.시행

<표 3-21> 통계청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석지표

대분류	분석지표	대분류(5개부문)					비고	
		복지 서비스 확충	경제 적 자립 기반 조성	교육 문화 체육 보편 화	장애 인 생활 형 SOC 확충	제도 적 여건 개선	근거자료	작성부서
인구·가구	성별·연령별 인구	○				◎		
	장애유형·장애정도별 인구	○				◎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가구원수·가구유형별 인구	○				◎		
교육·문화·일자리	교육 등급 (초 · 중 · 고) 별 인구	○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청
	의료이용	◎				○	-건강보험통계 -장애인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수검률	◎				○	-건강검진통계 -장애인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주거·복지	사망원인	◎				○	-사망원인	-통계청
	주거유형	○			◎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장애인 및 가구 주택소유	○			◎		-주택소유통계	-통계청
고용·일자리	경제활동	○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성별 · 연령별 장애인 일자리	○	◎				-일자리행정통계	-통계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소득·소비	가구 소득 및 소득분포	○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구 지출	○	◎					
	여가활동	○		◎			-사회조사	-통계청
여가·사회참여	정보접근성	○		◎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기정통부
	온라인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	○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과기정통부
	장애인의 선거참여	○				◎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SOC) 설치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사회기반시설 통계	-통계청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주: 2020.6.22.시행

5. 목포시 장애인 현황

○ 전국의 장애인은 지난 5년 동안 소폭 증가했으나 전라남도의 장애인은 5년 동안 소폭 감소 추세임

○ 전국의 경우, 2017년 장애인은 2,545,637명에서 2021년 2,644,700명으로 0.038%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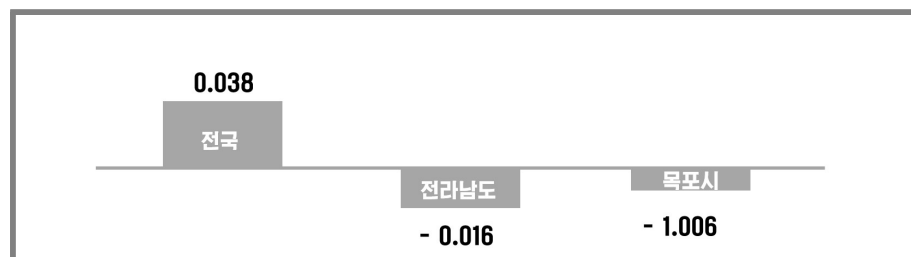
○ 전라남도의 경우 2017년 142,174명에서 2021년 139,868명으로 0.016% 감소함

○ 목포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여수시와 순천시 다음으로 장애인이 많으나, 감소율이 0.006%로 나타나 전국 평균(0.038%)보다는 낮은 수준임

○ 목포시 장애인은 2017년 13,915명, 2018년 13,949명, 2019년 14,024명, 2020년 13,911명, 2021년 13,822 명으로 매년 소폭의 증가와 감소 양상을 보임

【그림 3-9】 전국, 전라남도, 목포시 장애인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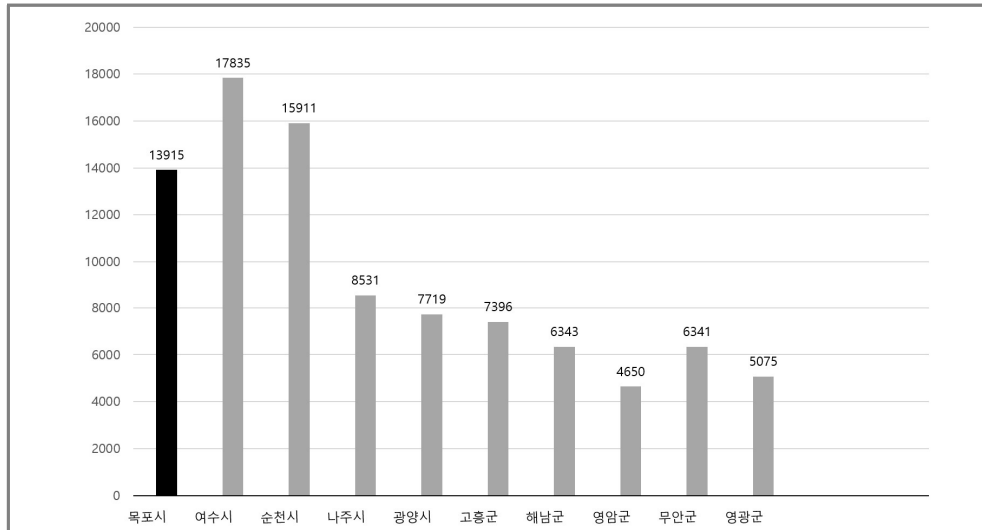


주: 증감률은 2017년 대비 2021년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17~2021). 장애인 등록 현황

【그림 3-10】 전라남도 시군 장애인 현황(2021.12)

(단위: 명)



주: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상위 10개 지자체만 발췌

자료: 보건복지부(2017~2021). 장애인 등록 현황

<표 3-22> 전국 및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장애인 현황(2017-2021)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전국	2,545,637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0.038
전라남도	142,174	142,213	141,888	140,942	139,868	-0.016
목포시	13,915	13,949	14,024	13,911	13,822	-0.006
여수시	18,079	18,009	17,980	17,870	17,835	-0.013
순천시	15,757	15,928	15,939	15,944	15,911	0.009
나주시	8,590	8,678	8,659	8,600	8,531	-0.006
광양시	7,567	7,707	7,765	7,760	7,719	0.020
담양군	4,075	4,090	4,011	3,991	4,023	-0.012
곡성군	3,318	3,324	3,303	3,279	3,210	-0.003
구례군	2,858	2,859	2,826	2,803	2,746	-0.039

고흥군	7,600	7,559	7,545	7,493	7,396	-0.026
보성군	4,556	4,536	4,467	4,414	4,398	-0.034
화순군	5,025	5,046	5,107	5,133	5,166	0.028
장흥군	4,055	3,997	3,937	3,909	3,835	-0.054
강진군	6,439	3,427	3,396	3,329	3,269	-0.492
해남군	6,556	6,527	6,483	6,397	6,343	-0.032
영암군	4,705	4,774	4,772	4,689	4,650	-0.011
무안군	6,378	6,309	6,280	6,348	6,341	-0.005
함평군	3,850	3,806	3,813	3,764	3,701	-0.038
영광군	5,259	5,239	5,214	5,119	5,075	-0.034
장성군	4,231	4,207	4,208	4,104	4,025	-0.048
완도군	4,648	4,633	4,630	4,591	4,546	-0.021
진도군	3,236	3,223	3,190	2,217	3,151	-0.026
신안군	4,447	4,386	4,339	4,244	4,175	-0.061

주: 매년 연말 기준이며, 증감률은 2017년 대비 2021년의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7~2021). 장애인 등록 현황

○ 목포시 장애인의 장애유형 증감률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의 장애유형 중 신체적 장애인 청각 장애가 -0.459 %로 증감률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안면장애(-0.444%), 뇌전증장애(0.277%), 언어장애 (0.1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5개의 장애유형 중 언어장애(0.197%)를 제외한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는 모두 감소 추세이며, 내부기관의 장애는 심장장애(-0.2%)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 추세임. 정신적 장애는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임

<표 3-23> 목포시 장애인의 장애유형 추이(2017~2021)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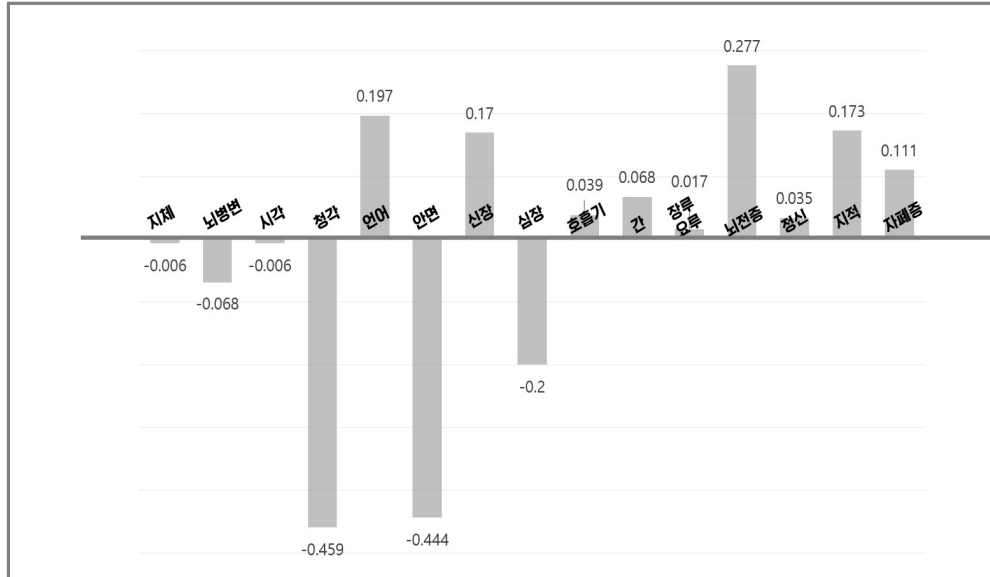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률
계			13,915	13,949	14,024	13,911	13,822	-0.006 ▼
신체 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의 장애	지체	7,142	7,016	6,992	6,796	6,656	-0.068 ▼
		뇌병변	1,436	1,397	1,397	1,380	1,337	-0.068 ▼
		시각	1,493	1,502	1,498	1,500	1,483	-0.006 ▼
		청각	1,334	1,443	1,502	1,493	721	-0.459 ▼
		언어	91	87	95	103	109	0.197▲
		안면	9	8	5	6	5	-0.444 ▼
	내부기관 의 장애	신장	457	458	489	492	535	0.170▲
		심장	25	26	25	22	20	-0.2▼
		호흡기	51	51	50	47	53	0.039▲
		간	73	72	74	76	78	0.068▲
		장류·요 루	56	53	57	53	57	0.017▲
		뇌전증	36	39	40	42	46	0.277▲
정신적 장애		정신	484	499	498	496	501	0.035▲
		지적	1,147	1,216	1,280	1,315	1,346	0.173▲
		자폐성	81	82	92	90	106	0.111▲

주: 매년 연말 기준이며, 증감률은 2017년 대비 2021년의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17~2021). 장애인 등록 현황

【그림 3-11】 목포시 장애인 장애유형별 증감률 현황(2017, 2021)

(단위: %)



주: 증감률은 2017년 대비 2021년의 증감률을 의미함

○ 목포시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증 장애인(1~3급)의 비율은 2017년에 비해 -0.001%, 경증(4~6급)은 -0.009% 감소함

<표 3-24> 목포시 장애인 단체 현황

(2021년 8월 기준)

연번	단체명	회장	회원수	설립 년도
1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김홍봉	2700	1990
2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목포지회	박춘복	1055	1988
3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목포시	이진희	325	1988
4	목포시장장애인연대	황영택	2500	2007
5	전남장애인정보화협회	황영택	1600	1998
6	전남장애인정보화협회 목포시지회	김민수	250	2001
7	한국여성장애인연합전남지부	문애준	485	2002

	전남여성장애인연대			
8	목포여성장애인나눔회	이점단	250	2005
9	목포중증장애인애인회	고영민	80	2006
10	한국장애인부모회 목포시지부	신현청	300	1997
11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목포시지회	양정숙	200	2010
12	전남척수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	김형석	230	2009
13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목포시지부	김문재	75	2011
14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미화	270	2002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http://www.data.go.kr>)

<표3-25> 목포시 장애인 복지시설

(2021년 8월 기준)

시설명	소재지	종사원	시설유형
광명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호정길 43-17	54	시각,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공생재활원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로 14-24	49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목포장애인요양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문화리 339-5	5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소망장애인복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199번길 93-36	29	지체장애인거주시설
보담하우스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199번길 93-46	18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명도복지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199번길 25	40	지역사회재활시설
목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205번길 12	24	지역사회재활시설
목포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61	6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성산그레이스 주간보호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변화로41-7	5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목포시수어통역센터	전남 목포시 산정로21번길 9	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명도주간보호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99번길 25	5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성골롬반하우스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로길 266-13	4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명도단기보호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199번길 25	3	장애인단기보호 시설
예손자립원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로 372-3	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명도자립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대박길 69	5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소망자립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산단로199번길 93-34	5	장애인직업재활 시설(보호작업장)
진 성 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101	27	노숙인재활시설
동 명 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북길로 211-35	12	노숙인재활 시설
성산정신요양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101	58	정신요양시설
명도복지관일신그룹홈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91, 일신아파트 103동102호	1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성골롬반그룹홈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13	1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http://www.data.go.kr>)

<표 3-26> 목포시 장애인 유형별, 장애정도별 등록현황(2022년 7월)

(단위 :명)

장애 유형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합계	13,715	7,569	6,146	5,196	3,059	2,137	8,519	4,510	4,009
소계	13,715	7,569	6,146	5,196	3,059	2,137	8,519	4,510	4,009
지체	6,563	3,465	3,098	1,210	744	466	5,353	2,721	2,632
시각	1,469	817	652	277	159	118	1,192	658	534
청각	1,495	776	719	417	213	204	1,078	563	515
언어	117	77	40	55	32	23	62	45	17
지적	1,348	814	534	1,348	814	534	0	0	0
뇌병변	1,297	759	538	746	410	336	551	349	202
자폐성	117	90	27	117	90	27	0	0	0
정신	500	269	231	499	269	230	1	0	1
신장	546	327	219	432	257	175	114	70	44
심장	21	14	7	20	14	6	1	0	1
호흡기	55	43	12	52	42	10	3	1	2
간	82	49	33	2	2	0	80	47	33

안면	5	3	2	4	2	2	1	1	0
장루·요루	53	35	18	7	4	3	46	31	15
뇌전증	47	31	16	10	7	3	37	24	13

자료: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과

6. 목포시 장애인 정책 분석

1) 분야 별 장애인 정책 분석

(1) 시설물 접근·편의시설 장애

- 고궁,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 및 생활편의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용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함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고 있음
- 등록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함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함
- 주간, 단기 보호시설 운영으로 재가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함

(2) 교통·이동의 장애

- 교통약자를 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시책을 시행,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이동의 편리를 위하여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함
-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제한함),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 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등의 혜택을 지원함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민원 업무 보조, 직장 출근, 퇴근, 장보기, 외출보조 등을 지원함
- 장애인 보장구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 쿠션, 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에 대해 등록장애인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3) 차별인식 장애

-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여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을 실시함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 봉사활동, 취업 알선을 제공함

(4) 의사소통 장애

- 청수화통역센터에서 각,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공서, 법률관련 기관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수화통역을 실시하고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을 상담함

2) 목포시 장애인 맞춤형 정책 분석

(1) 서비스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편의 지원
 - 장애인이 불편함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포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단기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급식비 지원 등을 실시
 - 보호자 부재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 중인 중증장애인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 확대
 - 목포시는 2022년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확대함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시간당 단가 인상과 대상자 지속 확대 등을 통해 활동 지원인력과 수급자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함
 - 기존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돼 발생하는 급여 감소 등을 보완하기 위해 65세

보전 급여를 제공함

-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를 확대(기본형 월 125시간)하고,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도 강화함
- 이 밖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 기기 임대 서비스 등의 맞춤형 복지를 추진함
-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 2022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했으며,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 아동수당도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씩 인상함
 - 신규 시책으로 발달장애인의 적성 개발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함

(2) 소득·일자리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 4개 유형(일반·복지형, 안마사 파견, 전남형 권리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미취업 장애인 453명에게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021년 대비 참여자가 60명 늘어났고, 예산도 6억원이 증액되었음
 - 전남형 권리 중심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장애인 20명이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 인식개선 강의·공연 등을 펼칠 예정임

(3) 건강 생활 지원

- 전남권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건립
 -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72억원)를 오는 2024년까지 건립해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목을 개설해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할 계획임
 - 재활의료센터(지상 3층)는 의료인력 17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성장단계와 장애 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장비

(75종) 및 시설을 구비해 전문적 치료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재활의료센터는 원거리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족난민, 잦은 이직 등 장애아동가족의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됨
- 장애인 가정이 행복한 복지 추진
 -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함
 - 임신·출산·육아·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구에 홈헬퍼 서비스를 제공함. 홈헬퍼 서비스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출산 예정 3개월 전, 신생아 양육 생후 4주 미만, 만 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 가정에 산전·산모·영아·기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임

사례연구

IV

국내 사례연구

1

외국 사례연구

2

1. 국내 사례연구

1)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 및 인권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욕구 및 특성에 맞게 법적·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자긍심을 심어주어 지역공동체사회를 통합하며 나아가 장애인들의 자립심을 고취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현재 이와 같은 제도적 실사가 타 지자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은 크게 1차 도입기(2012~2017), 2차 발전기(2018~2022), 3기 확대기(2023~)등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그림 4-1】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로드맵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포럼(<http://wis.seoul.go.kr/handicap/deinstitution/result.do>)

○ 서울특별시는 단계별 목표에 따른 점진적 추진으로 정책추진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중기·연동계획 성격의 2차 발전기(2018~2022년)를 수립하였음

【그림 4-2】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포럼(<http://wis.seoul.go.kr/handicap/deinstitution/result.do>)

○ 2차 발전기(2018~2022년)의 추진목표는 2022년까지 800명 탈시설, 거주시설 변환 2개소 시범운영이며, 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2,306명)가 대상임

○ 또한, 중장기 로드맵 상으로 2차 발전기(2018~2022년)에서 추진 중임

<표 4-1>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관련 세부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추진기관
1. 탈시설 정책 추진 강화 및 전환 지원 체계 개선 (8)	① 서울시 탈시설 권리 선언	서울특별시
	② 탈시설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서울특별시
	③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개선	복지재단
	④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및 절차 개선	서울특별시·복지재단
	⑤ 자립생활주택 지속 확대	
	⑥ 탈시설 체험 전용 주택 운영	
	⑦ 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⑧ 지역별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서울특별시·복지재단
2.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3)	⑨ 발달장애인 신(新)거주모형 개발	서울특별시
	⑩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확대	서울특별시
	⑪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확대	서울특별시
3. 장애인거주 시설 운영 개선 및 시설 변환 (7)	⑫ 시설별 자립지원 연간 계획 수립 의무화	거주시설
	⑬ 시설장애인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⑭ 거주시설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서울특별시·거주시설
	⑮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의무 실시	복지재단
	⑯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체험홈」 확대	서울특별시
	⑰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운영	서울특별시
	⑱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시범 운영	서울특별시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7)	⑲ 탈시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⑳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서울특별시·자치구
	㉑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서울특별시
	㉒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금 지원확대	서울특별시
	㉓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생계비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
	㉔ 탈시설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서울특별시
	㉕ 탈시설 장애인 중단연구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자료: 서울특별시 복지포럼(<http://wis.seoul.go.kr/handicap/deinstitution/result.do>)

○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의 관심도와 지자체의 의지, 그리고 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 중, 장기 로드맵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정주여건과 관련한 사업은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마포구

- 마포구는 2018년 6월부터 언어·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AAC ZONE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정책을 운영함
 - 당초 마포구에 위치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언어치료 이후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화와 자존감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마포구 전례로 확대된 것임
 - QR코드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전자도구와 그림 및 글자로 구성된 의사소통 안내판, 가방 등과 같은 비전자 도구 등이 있음
 -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존(zone)을 보급함
 - 그림이나 글자로 된 의사소통 판을 만들어 공공기관과 식당, 편의점, 카페 등 10곳에 보완대체의사소통 존을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보완대체의사소통 존에 있는 의사소통판을 손으로 가리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해 주민센터에서 행정 업무 이외에 마트에서는 물건도 쉽게 살 수 있도록 함
 -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비교적 낮은 연령의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음

<표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AAC ZONE」 정책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대체 의사소통 도구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징 디자인 제작 후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과 의사소통 도움판 제작 및 보급 ▷ QR코드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등과 같은 전자도구와 그림 및 글자로 구성된 의사소통 안내판, 가방 등과 같은 비전자 도구 등이 있음. ▷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비교적 낮은 연령의 장애인들이 사용
인식개선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산동 일대 공공기관과 상점(11곳) 및 지구대(17곳)를 대상으로 AAC 어플리케이션 및 의사소통 도움판을 제작 ▷ 센터에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으로 AAC 홍보 및 교육을 시행
AAC ZONE 조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에서 상점 및 공공기관에 권유 후 어플리케이션 및 의사소통 도움판 제작함. ▷ 변동사항 발생 시 의사소통 도움판을 재제작해야 하며 약 한달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한계점이 있음.
은행 화상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 은행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언어·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의 통합 화상상담센터를 운영함. ▷ 스마트폰, PC, 화상 전용부스, 현금입출금기 등, 화상상담·수화상담·댓글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함.
수사 매뉴얼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함. ▷ 경찰청은 2014년 12월 지적장애인의 의료지원 및 조사과정 설명, 의사소통 그림판 등의 수사 매뉴얼을 제작함.

자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

【그림 4-3】 ACC존 안내 도구



자료 : 경향신문, 2019.10.10. 기사

3) 노원구

- 노원구는 민선 7기 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신규 세부사업 발굴 및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지역 내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
 - 장애인들이 직접 정책 제안사업 발굴에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사업을 추진함
 -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와 인식도를 제고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환경 조성하고자 함
 - 장애인 친화도시 노원 만들기 TFT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신규 세부사업 발굴 및 실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노원구는 전담부서인 ‘장애인 친화도시팀’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
 - 전국 지자체 최초의 장애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를 신설함
-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와 관련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과 ‘이동권 보장강화’, ‘장애 인식개선’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계획함
 - 7개 지하철 역사와 흥파복지원,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5개 공공 건물 주변보도환경 정비를 완료하였고, 편의점, 카페, 약국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편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사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함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힐링’으로 연계하는 취지에서 지역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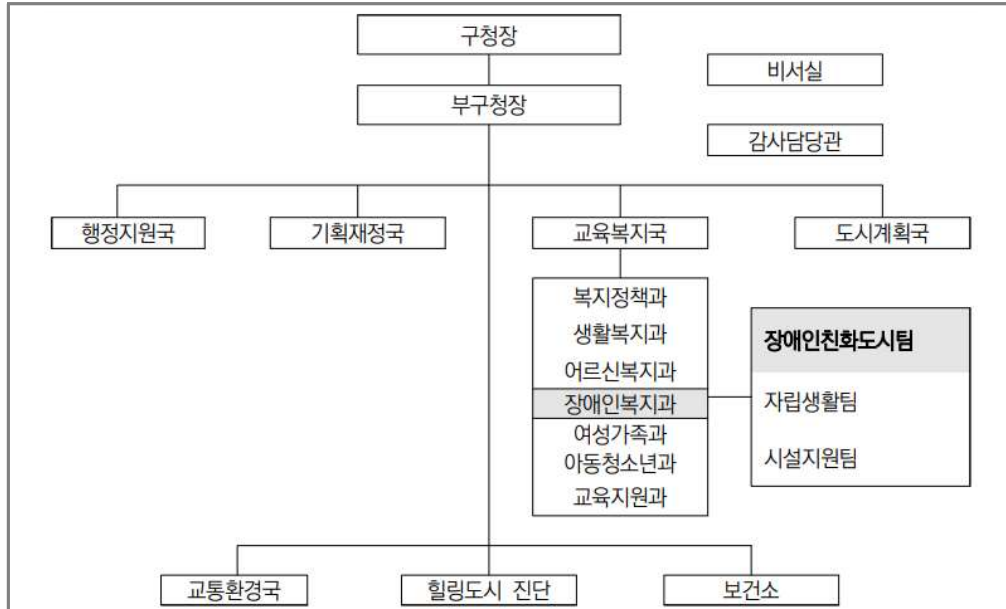
- 주요 산책로인 영축산과 불암산에 ‘무장애 숲길’을 조성함
-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중랑천 워터파크 물놀이 행사’, ‘우리동네 무장애 놀이터 조성’ 등의 여가생활을 지원함

<표 4-3> 노원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정책과제별 세부사업 목록

정책과제		세부사업(24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20.설치 완료)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 단체 활동지원센터 운영('20.설치 완료)
	돌봄 강화	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사업
	여가 생활 지원	무장애 숲길 탐방「숲과의 만남」 운영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중랑천 워터파크 물놀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운영('19. 조성완료)
		장애인 친화 미용실 조성('22 신규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20. 설치 완료)
	복지시설역량강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분야확대
	정보 접근성 향상	장애인복지시책 안내 책자 발행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청 소식지 제작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22. 신규사업)		
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22.신규사업)		
중증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조성('22. 신규사업)		
장애인 디지털 안내기기(키오스크) 설치('22. 신규사업)		
이동권 보장 강화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 보험 가입('22. 신규사업)	
	무장애 보도 정비 사업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확대	
	공공시설 장애인 화장실 개선	
	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복지시설 명칭변경 권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침해예방&대응메뉴얼 제작 배포		

자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

【그림 4-4】 노원구 장애인친화도시 담당부서



자료 : 노원구청 홈페이지

【그림 4-5】 노원구 '무장애 숲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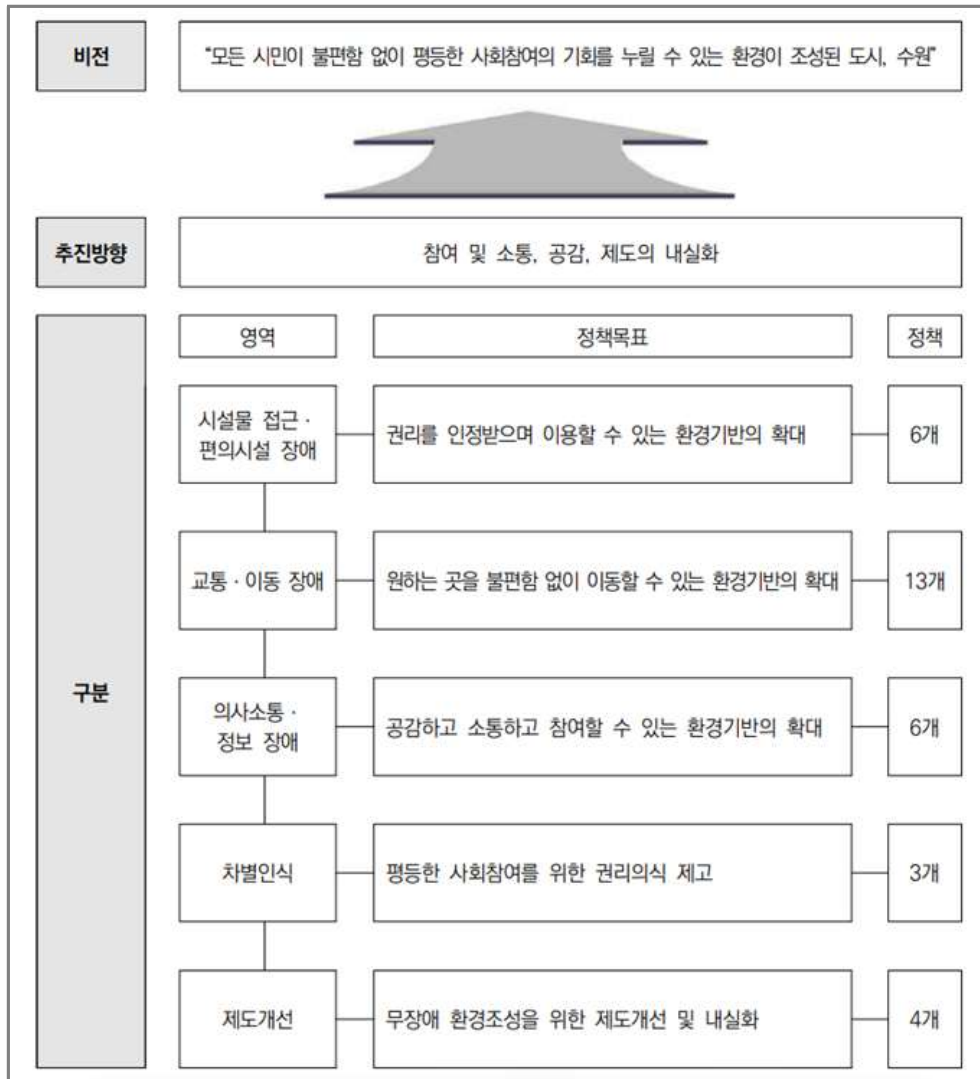


자료 : 헤럴드경제, 2015.10.15. 기사

4) 수원시

- 수원시는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평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2023)」을 수립함
 - 무장애도시 추진방향은 크게 ‘참여 및 소통’, ‘공감’, ‘제도의 내실화’로 설정함
 - ‘참여 및 소통’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무장애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공감’은 장애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느끼는 불편함, 기분 등의 감정을 이해하고 무장애도시를 조하는 것이 장애를 경험하는 특정인을 위한 배려의 개념보다는 권리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제도의 내실화’는 새롭게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실행하고 있는 무장애도시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4-6】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자료 : 수원시 홈페이지

【그림 4-7】 수원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협력체계



자료 : 수원시 홈페이지

5) 진주시

- 진주시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복지기관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장애인을 포함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 복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또한,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다중이용시설에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의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정주여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진주시는 이와 같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 이외에도 장애인 뿐만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환경 속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안전한 생활을 할 있도록 ‘함께 하는 무장애 공감 도시’를 추진하고 있음

<표 4-4> 진주시 중장기 사업계획(2020~2024년)

구분	초기(2020년)	중기(2021~2022년)	장기(2023~2024년)
환경분야	부서별 종점사업 시행 민간부분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계획 수립	지속추진	세부사업지속추진→ 사업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
정보분야	무장애홈페이지 관리 및 어플리케이션 구축 수립	무장애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자료업데이트	
인식개선	캠페인 및 인식개선 교육 실시 무장애전문가 양성	캠페인 및 인식개선, 교육 운영 공무원, 관련 종사자, 학생 등 전문교육 시행	
조직보완	장애인시민촉진단 구성 무장애도시 읍면동 위원회 운영	지속추진	
시민공감	장애인 등 단체 예산 지원계획 무장애의 날 지정	지속추진	

자료 :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표 4-5> 진주시 중장기 사업계획(2015~2019년)

구분	초기(2015)		중기(2016~2017)		장기(2018~2019)	
	실행목표	세부실행 내용	실행목표	세부실행 내용	실행목 표	세부실행내 용
가이드라인 /매뉴얼	BF도시조 성매뉴얼	인증기준 매뉴얼 제작				
환경개선 사업	진주시 BF보행망	BF보행망 계획 수립	시범사업	BF보행망 세 부 추진 계획	BF 환경개	BF통행망 구축 확대

	및 시범사업 계획수립	시범사업 구역선정 및 시행계 획수립		수립 시범사 업 시행(ex. 시청사 BF 인증, 무장애 공원 탐방로 조성)	선사업	시행(ex. 공 공/교육시 설, 공공의료 /복지시설, 공원 주거 지가로)
정보분야	진주시 BF현황 조사	진주시 BF현황 실태조사	BF웹사이 트운영	BF정보제공 및 홍보용 웹사이트 구 축, 운영	유도안내 체계개선	공공공간 유도안내 체계개선 타지역 및 외국인 관 객을 위 한 안내체 계 개선 (UD)
인식개선/ 전문인력양 성	인식개선	인식개선 행사계획	BF소룸	BF제품 및 장애체험을 위한 소룸	인식개선 및 전문인 력 양성	지속추진
			교육확대	공무원, 전문 가, 학생교육 실시		
부서간 연계	BF도시 조성센터 설치	BF센터 설치	BF도시 조성센터 설치, 운 영	타분야 기본 계획 반영	BF도시 조성센터 설치·운영	지속운영
민간확대 방안	제도지원 및 인센티브	인센티브 제공을 위 한 구체적 방안 및 제도적 근 거마련	제도지원 및 인센 티브	BF적용시설 에 대한 인 센티브제도 시행 숙박업, 관광업 우선 적용	제도지 원·인센 티브	인센티브 적용범위 확대 및 모 니터링 등 을 통한 제 도보완

자료 :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6) 강원도

- 강원도는 2018년 ‘무장애 도시-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자 “장애인과 더불어 더 행복한 강원도”라는 비전 아래 4개 분야
22개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함

- 2대 정책목표로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및 편리하고 차별 없는 사회 환경 조성과 장애인 중심 복지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를 설정함
- 이를 위해 전년대비 11.2% 증가한 1천 3십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수립한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2018년 ①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자립지원을 기반으로 ②탈시설화 및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③장애인 접근성 개선 ④교육·문화·체육활동의 평등한 향유 ⑤장애인 권익증진 및 실행기반 마련을 중점과제로 추진함
- 탈시설화 및 안정적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 접근성 개선, 교육·문화·체육활동의 평등한 향유를 위해 새로이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자립 지원, 장애인 권익증진 및 실행기반 마련을 위한 기존 사업은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첫째 사업으로는 ①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②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 확충 ③자립 생활 주택 설치·운영 ④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⑤시군 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 ⑥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관 지원 ⑦전국 장애인 하나 되기 문화예술 페스티벌 개최로 장애인 자립 지원, 편의시설 개선,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지원을 위해 도내 장애인들의 경기 참관을 지원(3,433명)하고 전국 장애 학생 등(750명)을 초청해 경기관람 및 문화예술 교류, 강원도의 지역문화를 체험하는「전국 장애인 하나되기 문화예술 페스티벌」개최는 문화 패럴림픽의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함
- 기존 중증 장애인 연금 지원과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사업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연금은 1인당 25만원(4만4천원 증가)을 지급하고, 활동 보조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지원 시간은 대폭 확대함

<표 4-6> 강원도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	세 부 사 업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① 장애인연금 지원(확대) ② 장애인 일자리 지원(확대) ③ 직업재활시설 기능강화(확대) ④ IT경진대회 활성화 지원(확대) ⑤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확대)
탈시설화 및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① 탈 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新) 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확충(新) ③ 자립생활주택 설치·운영(新) ④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확대(확대)
장애인 접근성 개선	① 편의시설 전수조사(新) ② 시·군 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新) ③ 수어교육 활성화(확대) ④ 장애인 이동권 증진(확대)
교육·문화·체육활동의 평등한 향유	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확대) ②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확대) ③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확대) ④ 올림픽·패럴림픽 참관지원(新) ⑤ 전국 장애인 하나되기 문화예술 페스티벌(新)
장애인 권익증진 및 실행기반 마련	① 도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활성화(확대) ②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활성화(확대) ③ 장애인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확대) ④ 장애인복지증진 공모사업(확대)

자료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2. 외국 사례연구

1) 일본 사이타마현

○ 일본 사이타마현 ‘장애인 복지마을 만들기’ 정책의 핵심은 모든 장애인이 모든 차별과 어떠한 사회적 편견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

○ 사마타마현은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73년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신체 장애인이 살기 좋은 가로정비사업’을 시작하였음. 이를 위해 민간 건축물까지 대상이 추가되어 ‘장애인 등이 살기 좋은 가로정비 추진지침’을 제정함

○ 1990년에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마을은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이타마현 살기 좋은 복지 마을 만들기 추진지침’을 수립하였음

○ 1996년에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²⁾이념²⁾을 토대로 하여 복지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동시에 편등한 사회참여가 가능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음. 조례에서는 고령자·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 가능한 생활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배리어프리²⁾와 관련된 시설의 정비기준과 더불어 생활 관련 시설의 정비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교통 편의시설 및 건축물 등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일본 사이타마현 ‘장애인 복지마을 만들기’ 정책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교통편의 시설 제공,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 등의 제공 등을 통하여 ‘주민모두가 행복하고 혜택 받는 복지마을 만들기’를 위한 지자체의 의지표현이라 할 수 있음

2)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 1974년 UN의 「장애자 생활환경 전문가회의」에서 「장벽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생긴 개념임. 원래는 건물이나 거주환경에서 층을 없애는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물리적인 장애(barrier)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건축학계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표 4-7> 일본 사이타마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구분	주요 내용
조례명	사이타마현 복지마을 만들기
제정일	1996.03.20
개 념	고령자,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행동상의 제한이 있는 사람을 배려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용하기 쉬운 시설정비가 추진되는 마을
대 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내 용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사이타마현 사업자·주민 책무(제3조, 5조, 6조), 시책의 책정 등의 기본방침·추진체제·재정조치(제7~11조), 정비기준(제12~15조), 생활관련 시설 신축 신고(제 16~19조)

자료: 수원시, 2019,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p.35.

2) 미국 뉴욕시

○ 미국 뉴욕시의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 제고’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장애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의 함양임

○ 뉴욕시는 1973년 시장실 내에 장애인부서를 조직하고 장애인에 대한 포용과 접근성의 가치를 장려하고 있음. 뉴욕시의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 제고’ 정책은 뉴욕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장애인의 이웃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정책과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음

○ 뉴욕시의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 제고’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위원회(TLC)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뉴욕시 전역 접근운송’ 프로그램 및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는 택시 수를 증대하였음. 이를 통해 사람을 운송하는 교통 관련 업체에 휠체어 접근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둘째,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통신시스템을 마련하였음

셋째, 정보통신부(DOITT)와 제휴해 ‘수화 다이렉트’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수화를 이용해 화상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미국수화에 유창한 정보 전문가를 통해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뉴욕시는 주립 장애인 도서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성을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립도서관 본관이 있고 장애인 도서관을 포함한 별도의 영역별로 본관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 뉴욕시의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 제고’ 정책을 통하여 장애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이용의 편리성 추구, 그리고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어 뒤처질 수 있는 장애인을 배려한 사회적 인식과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돋보이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정책이라 평가 할 수 있음

3) 영국 런던시

○ 런던시는 2004년에 시민에 정주환경 제고를 위한 「London Plan」을 수립, 그 중 「모든 것에 대한 접근성(Accessible to all)」이라는 주제로 관련된 제도 정비를 실행함

- 2011년에는 시민과 방문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을 목표로 포괄적 환경을 촉진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 보조계획 지침 (SPG : The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을 발표함
 - 보조계획 지침(SPG)에는 여러 영역의 접근성 및 포괄적 설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접근 요건을 강조하며 「런던의 접근 가능한 환경에 관한 포괄적 설계원칙 구현과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Accessible London : Achieving an inclusive environment)」을 포함하고 있음

【그림 4-8】 영국 런던, 「London Plan」



자료 : 영국 런던시, 2014. 「Accessible London -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표 4-8> 영국 런던, 「The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SPG)의

주요내용」

항 목	주요 내용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친화적 개발, 대안적 주택 옵션 등을 장려 - 적절한 수준의 주택 가격과 서비스를 권장 - 보스턴에서 이용 가능한 주택 및 주택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세금 감면을 통한 고령의 주택 실소유주를 지원 - 어려움에 처해있는 보스턴 거주 노인들을 지원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금을 활용한 교통수단과 개별운송수단 옵션을 최적화 - 교통수단에 관한 고령층의 지식 및 접근성을 향상 - Vision Zero와의 협력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향상
야외공간 및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및 공공장소 설계 시 노인의 요구와 의견을 고려 - 야외공간 이용 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 현재 이용 가능한 공중화장실의 위치 파악 및 정보를 전달함 - 독거노인 우선의 냉방 수단을 마련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지원 및 혜택 수혜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며 소외된 고령자들과의 관계망을 확장 - 고품질의 알맞은 음식을 접할 기회를 보장
시민참여 및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노동자의 노동력을 홍보 - 고령노동자에게 보다 나은 고용기회 및 자원을 연결 - 고령자의 자원봉사 기회 증진 및 홍보를 확대 - 고령자의 관점 및 요구를 도시계획과 정책에 반영
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
존경 및 사회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친화적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 - 공교육을 통한 노인차별적 문제를 접근함 - 고령자를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촉진함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개발 - 고령층에게 보다 나은 접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자료 : 영국 런던시, 2014. 「Accessible London -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설문분석 및 결과



SWOT분석	1
설문조사 및 개요	2
설문분석 및 결과	3
설문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4
정부의 통계지표	5

1.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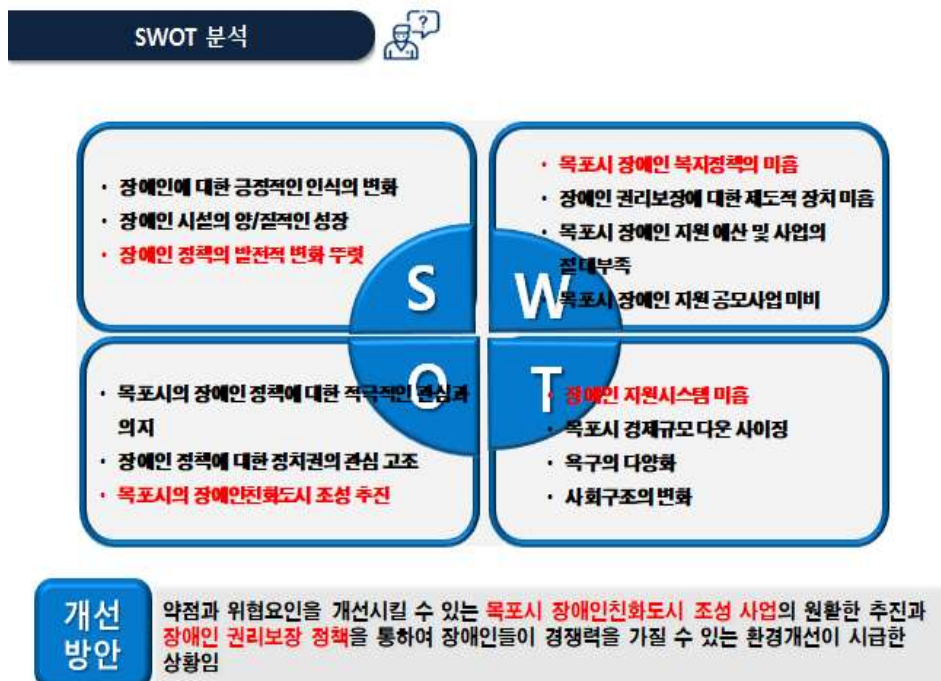
1) SWOT 개요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직은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은 조직의 침체와 활성화에 직·간접인 관계가 깊음

○ 외부환경은 기회요인(Opportunity)과 위협요인(Threat), 그리고 내부환경은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을 분석하여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SWOT분석

【그림 5-1】 목포시 장애인 SWOT분석



2. 설문조사 및 개요



✓ 조사목록

-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 목포시 장애인, 복지기관종사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설문분석 진행상황

- 2022. 06. 01 ~ 30 : 설문목록 작성
- 2022. 07. 01 ~ 08. 10 : 설문지 배부 및 수집
(136부 회수, 132부 분석)
- 2022. 08. 10 ~ 20 : 설문분석

추진 계획 및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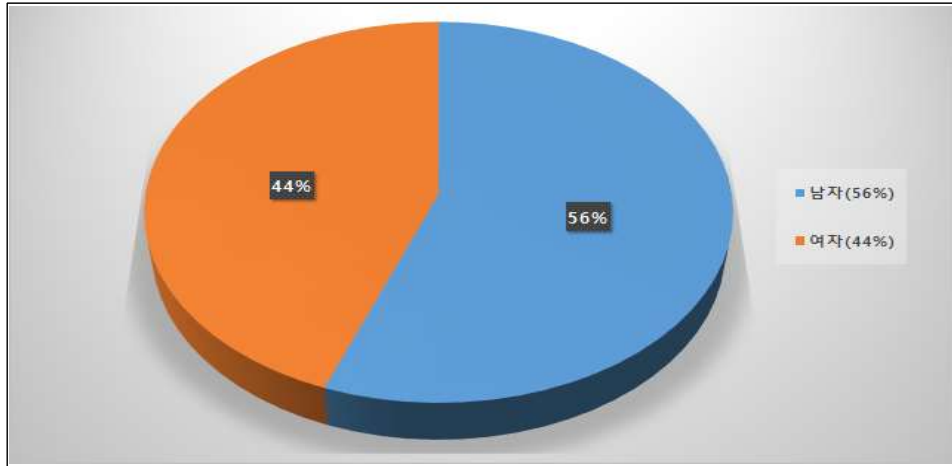
- 2020. 03. 01 ~ 08. 28 : 설문설계 및 결과분석
- 2022. 08. 28 : 최종보고서에 반영 예정

3. 설문분석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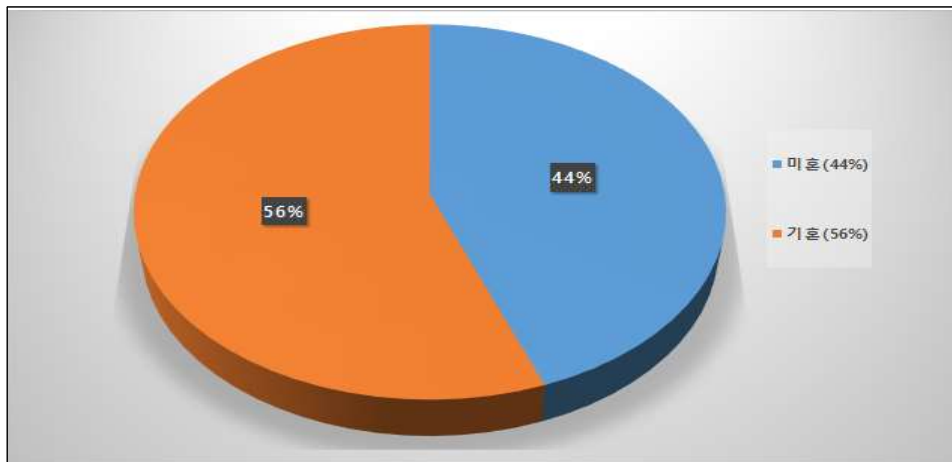
1) 장애인

(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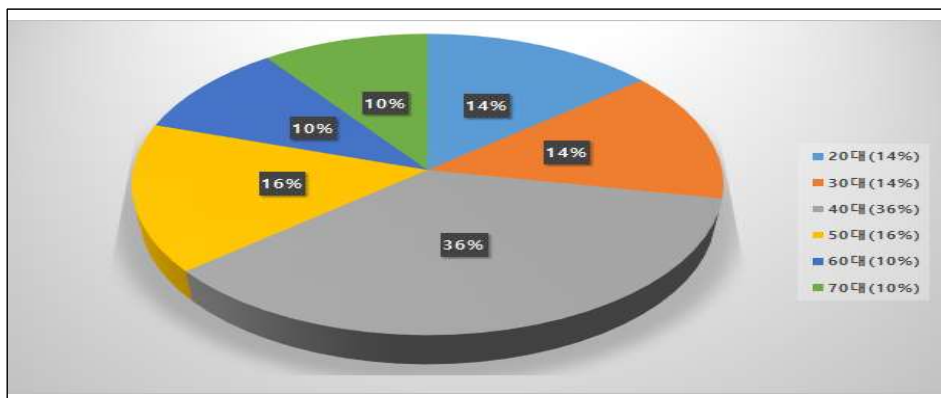
귀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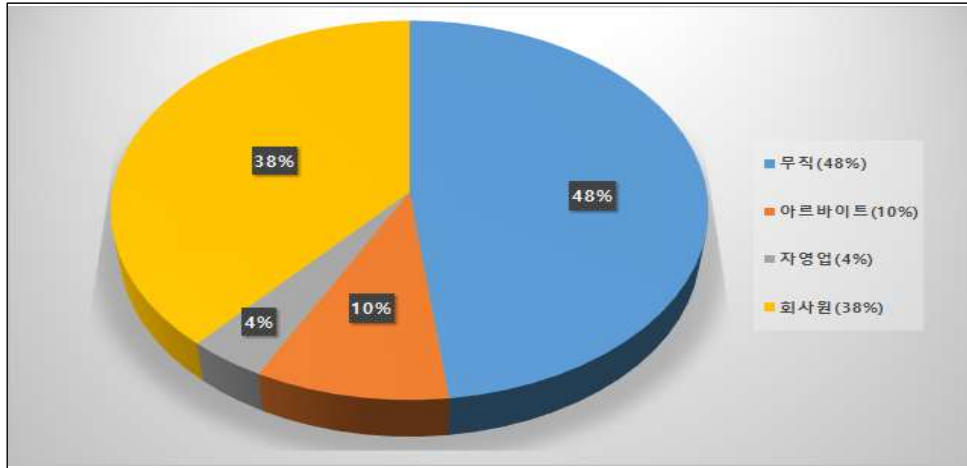
귀하의 결혼여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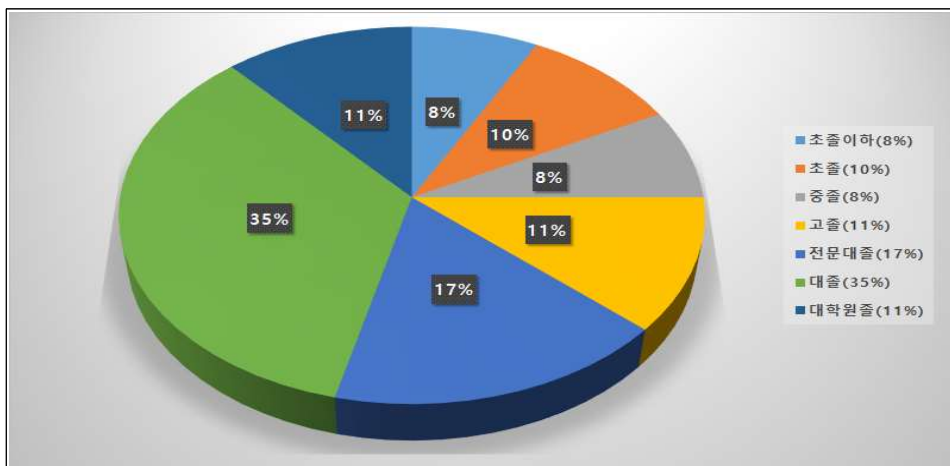
귀하의 연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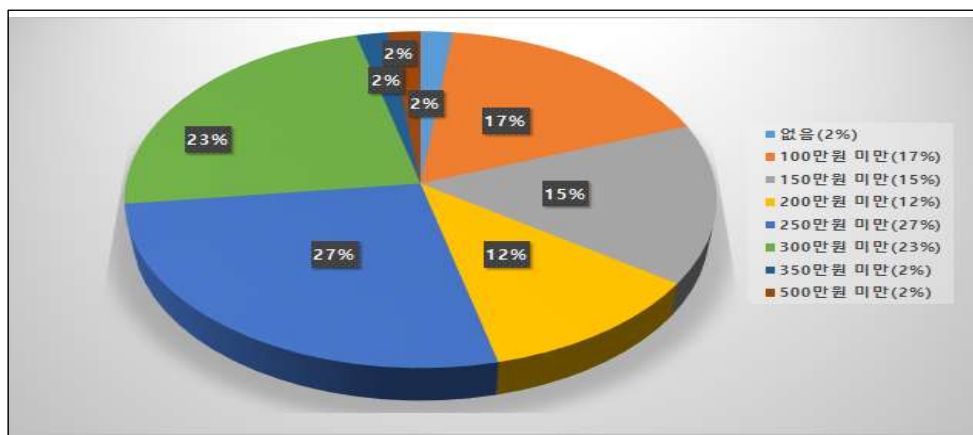
귀하의 직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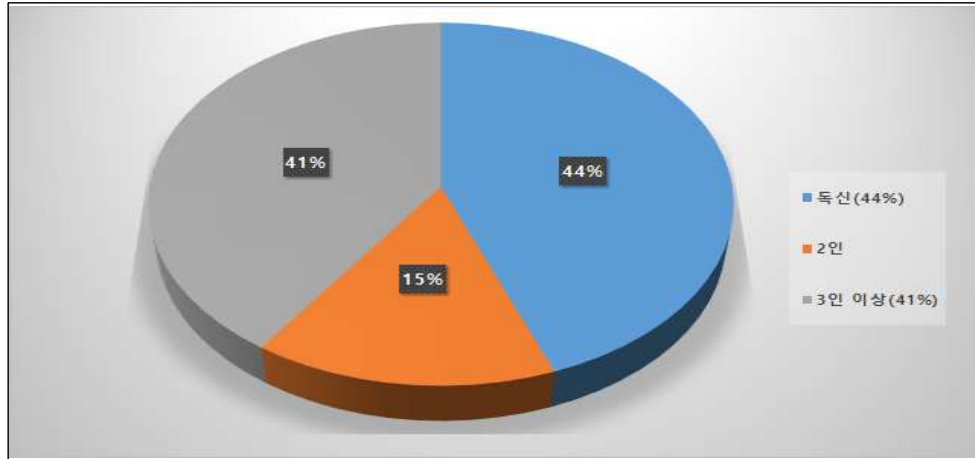
귀하의 학력은?



귀하의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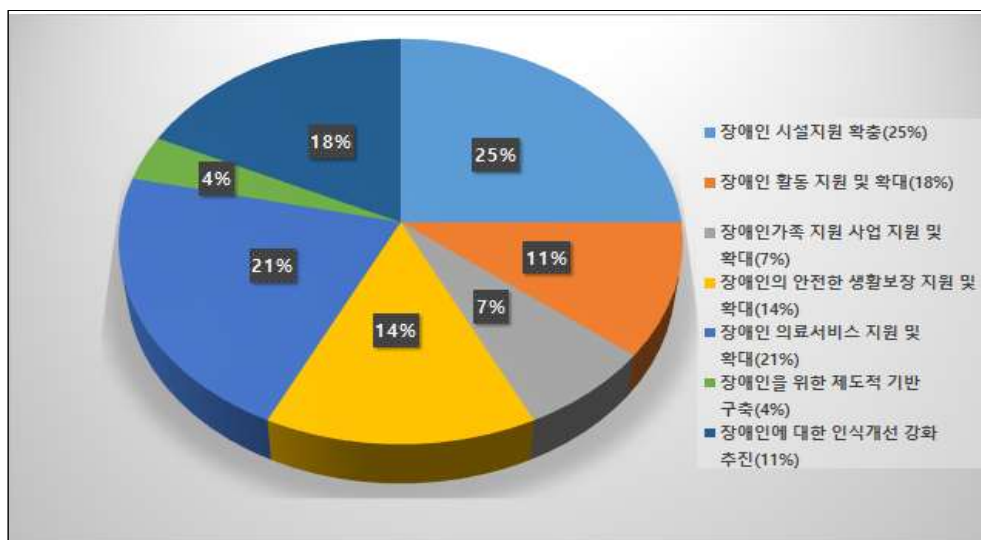


귀하의 거주 세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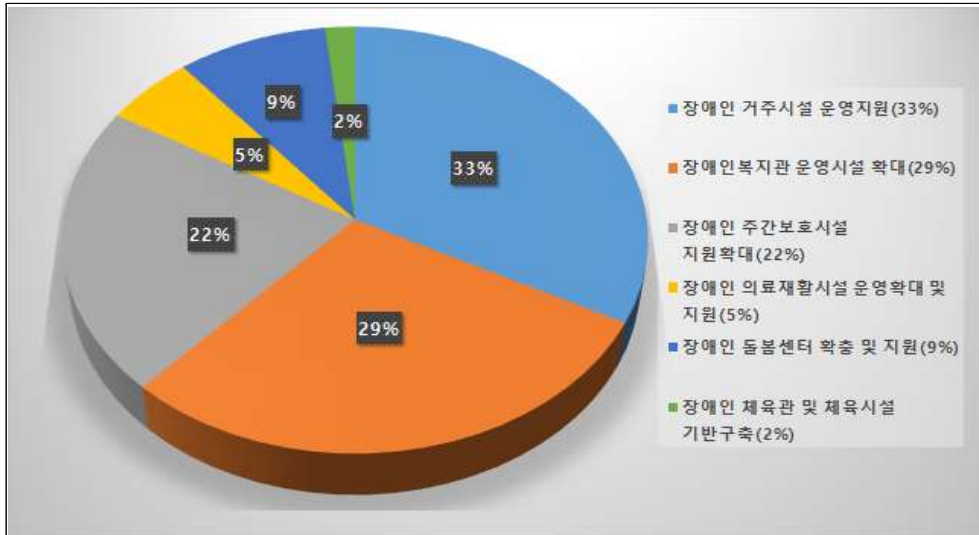


(2)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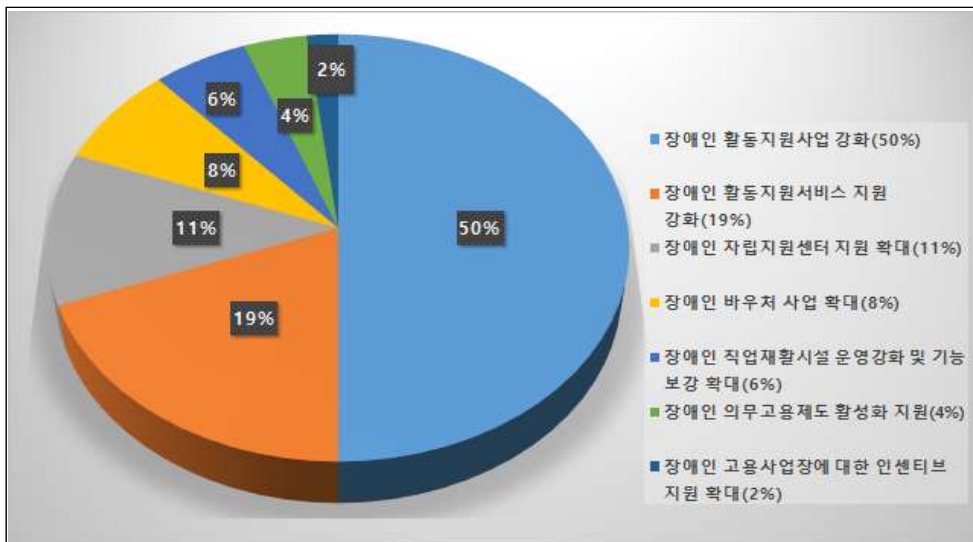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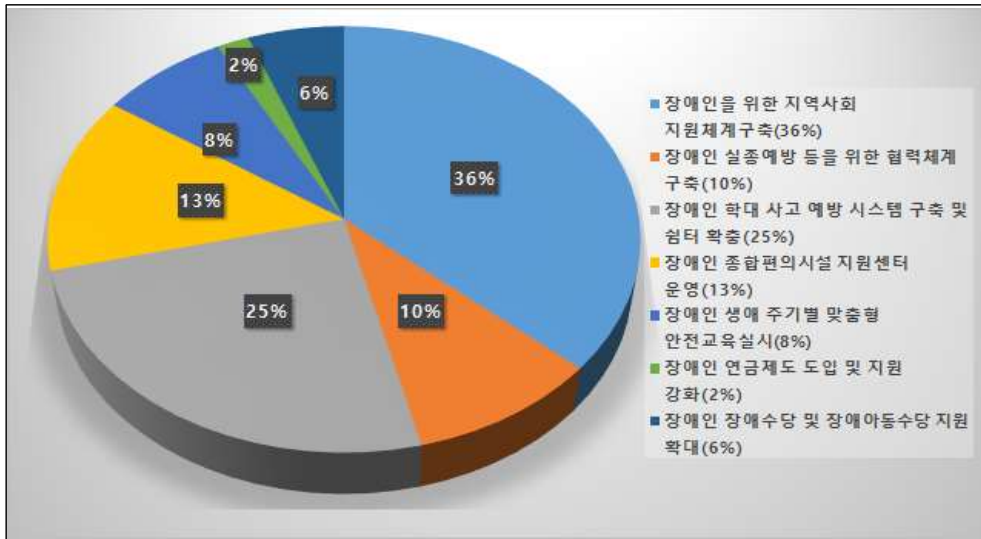
장애인 시설지원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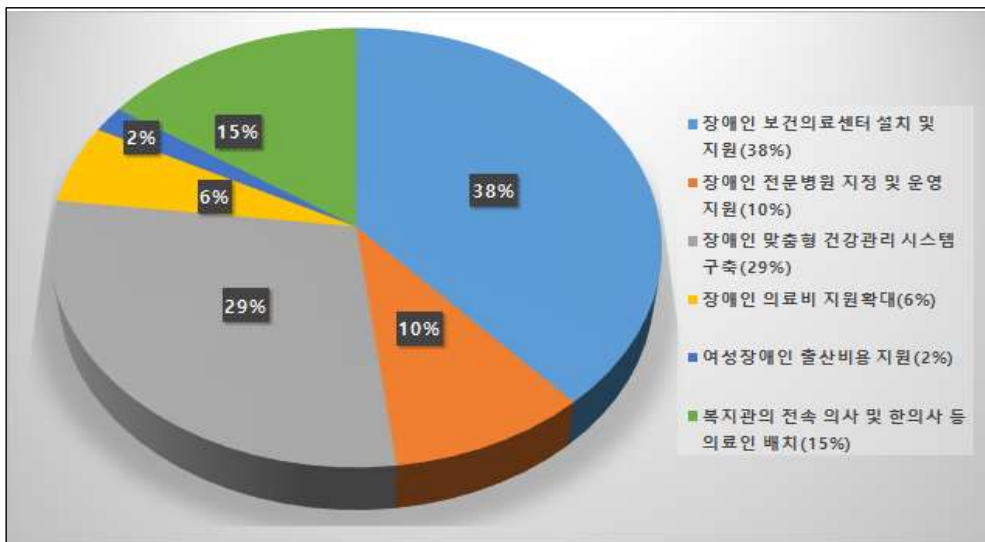
장애인활동(일자리 지원 등)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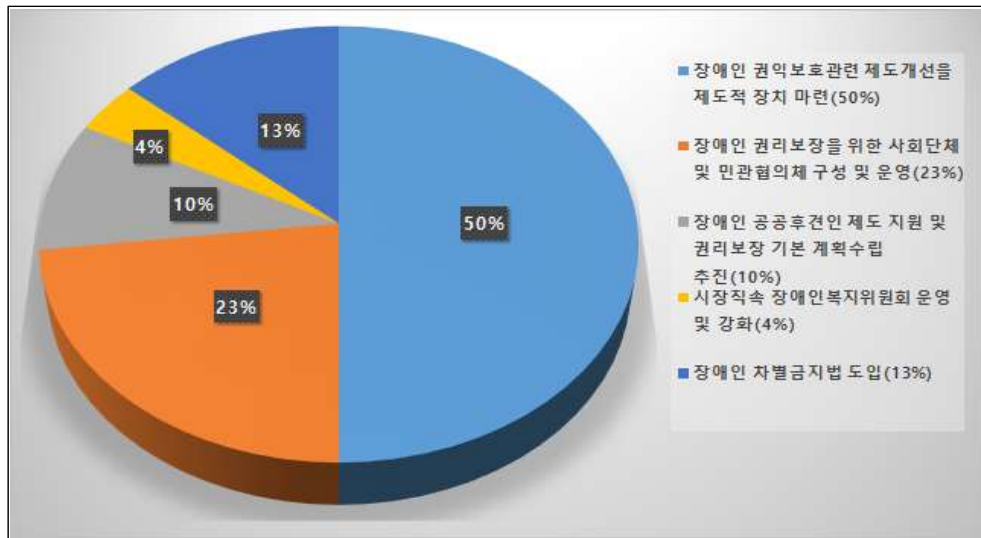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보장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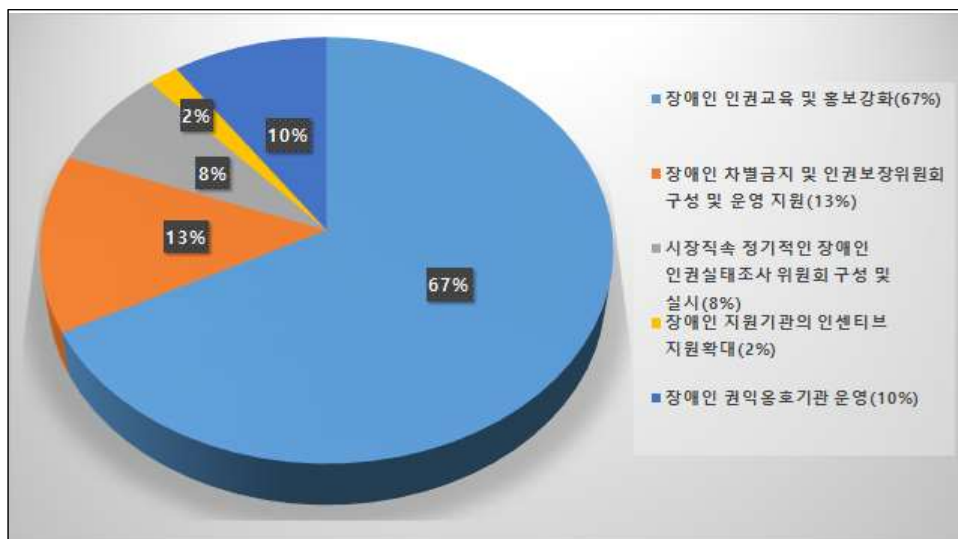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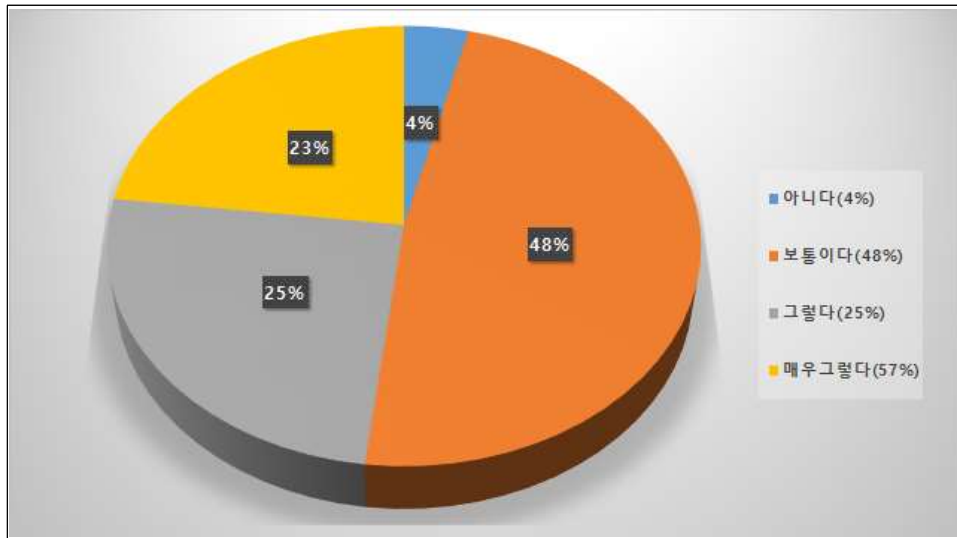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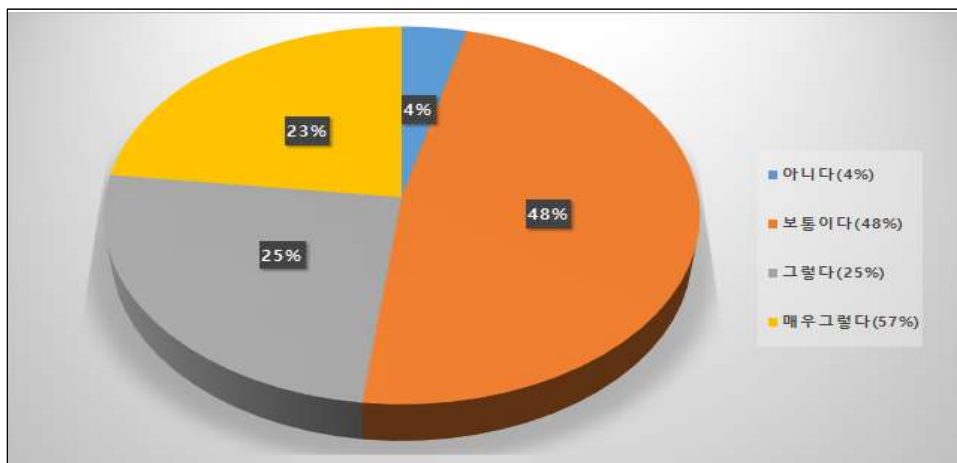


(3)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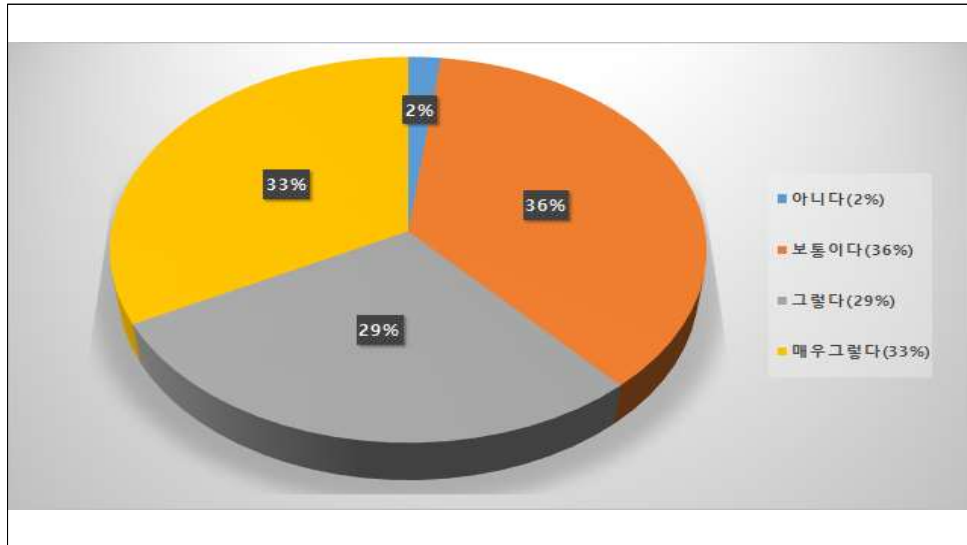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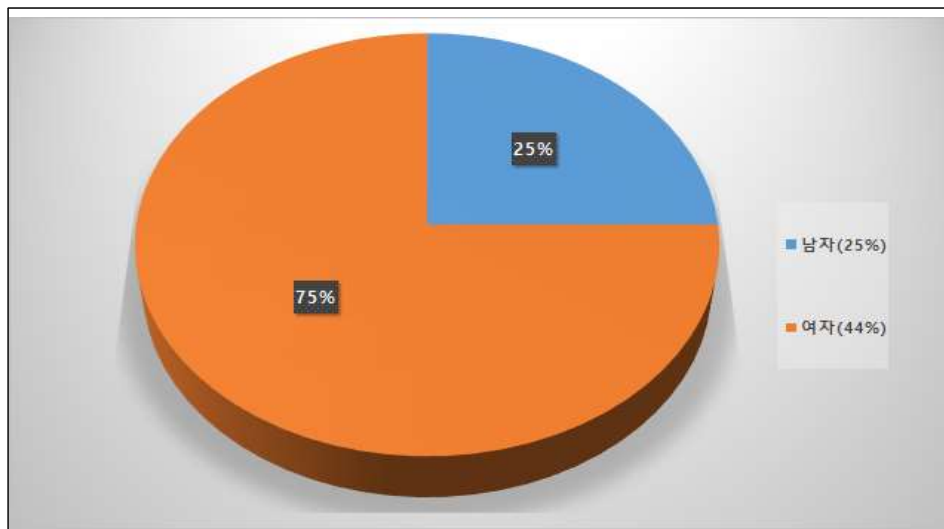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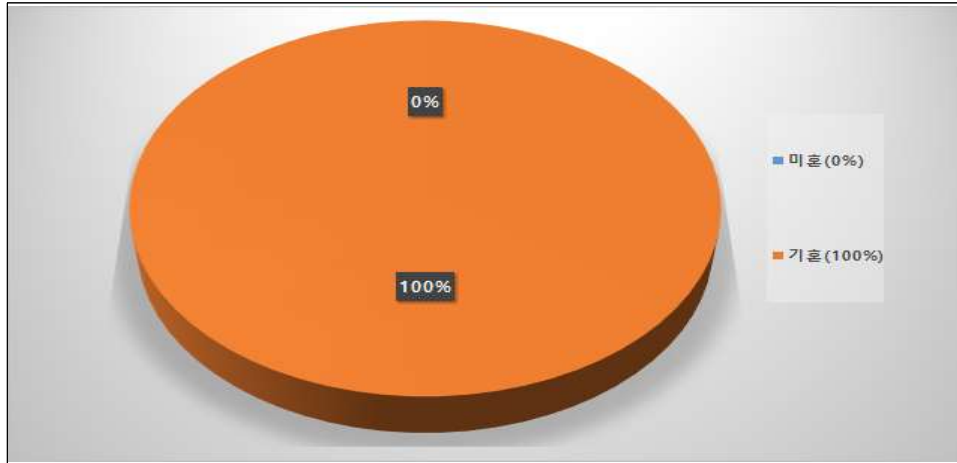
2) 종사자

(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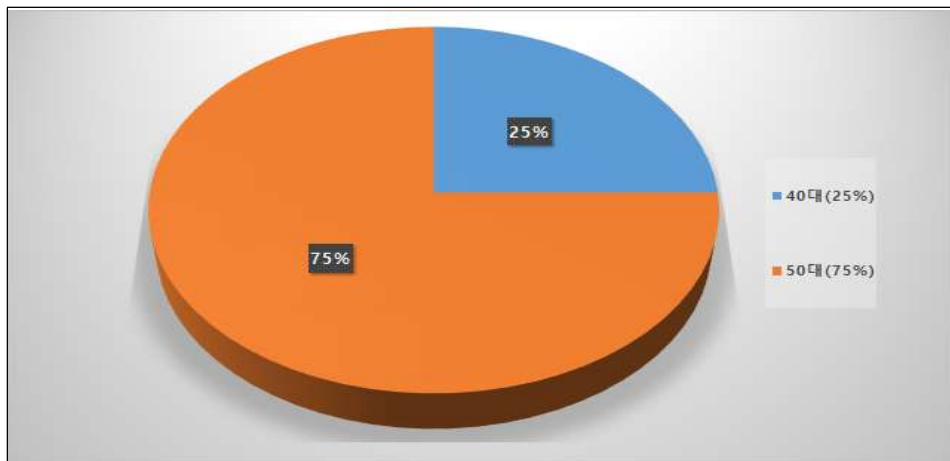
귀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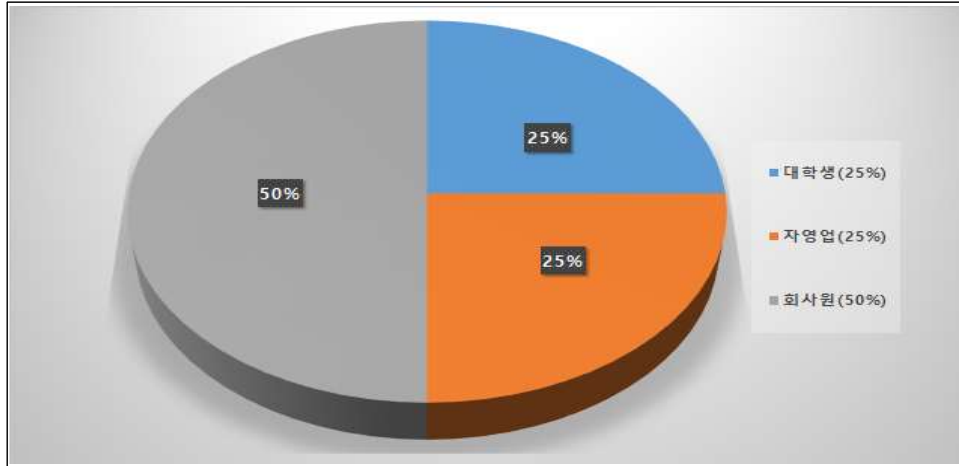
귀하의 결혼 여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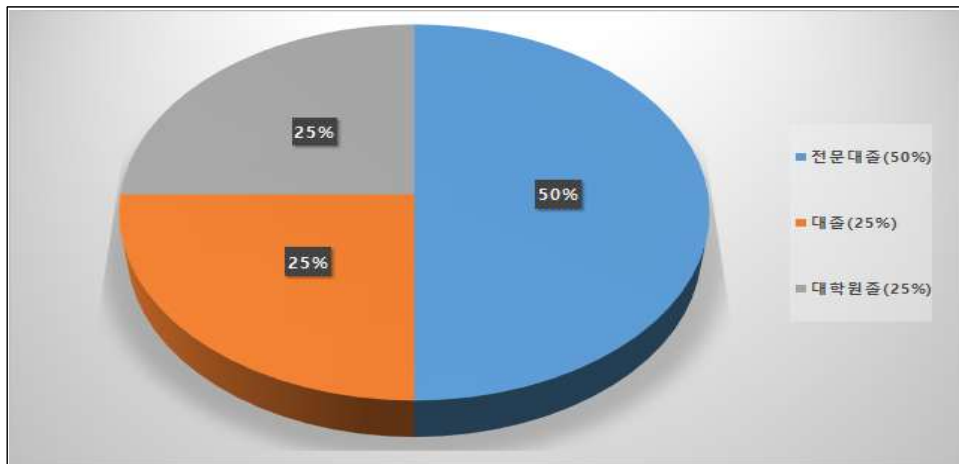
귀하의 연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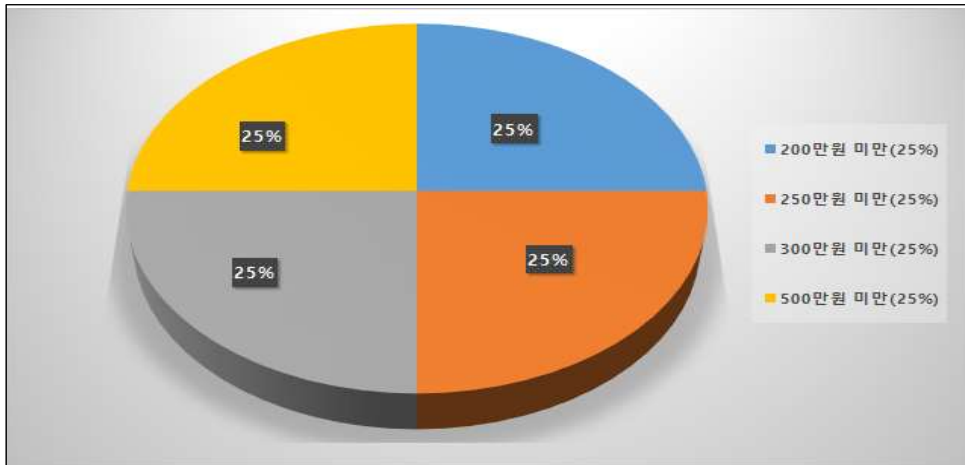
귀하의 직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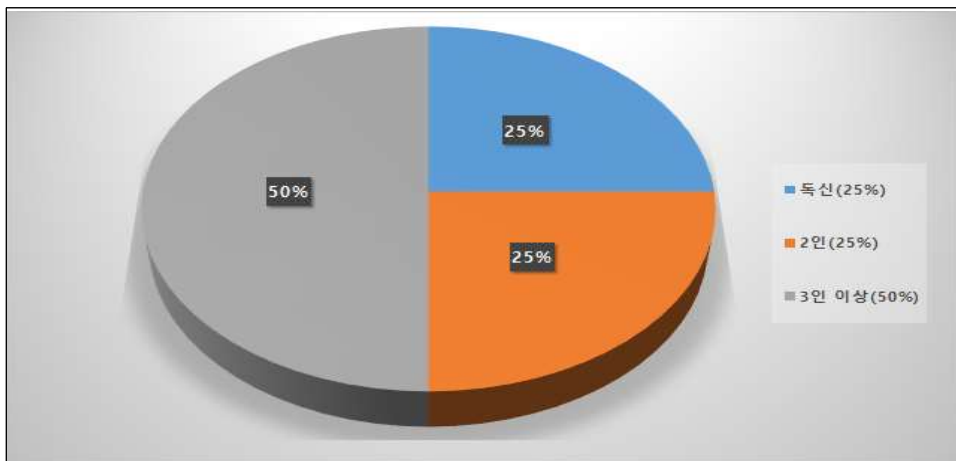
귀하의 학력은?



귀하의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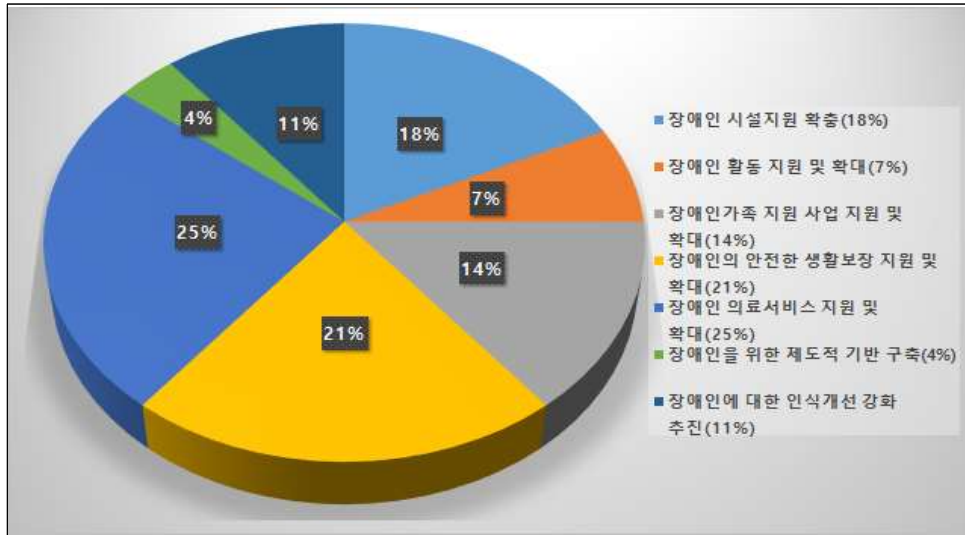


귀하의 거주 세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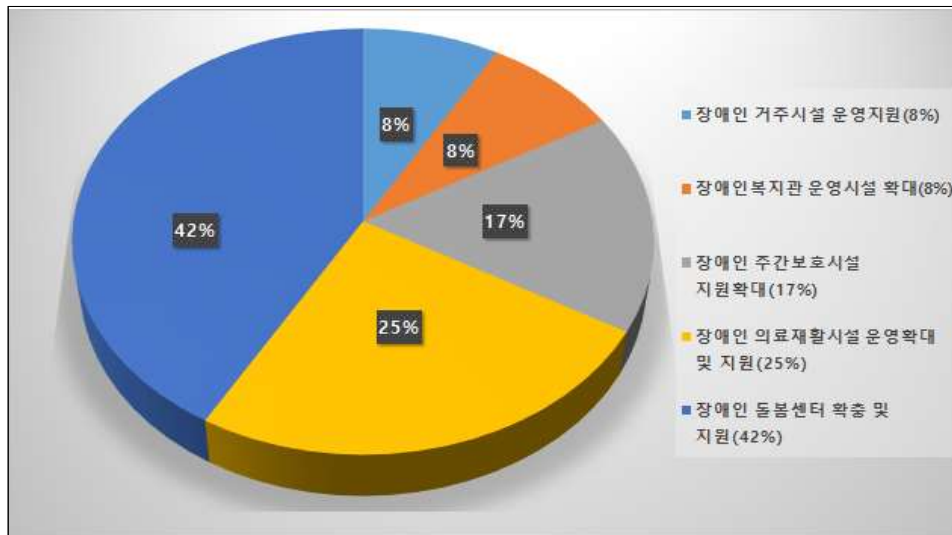


(2)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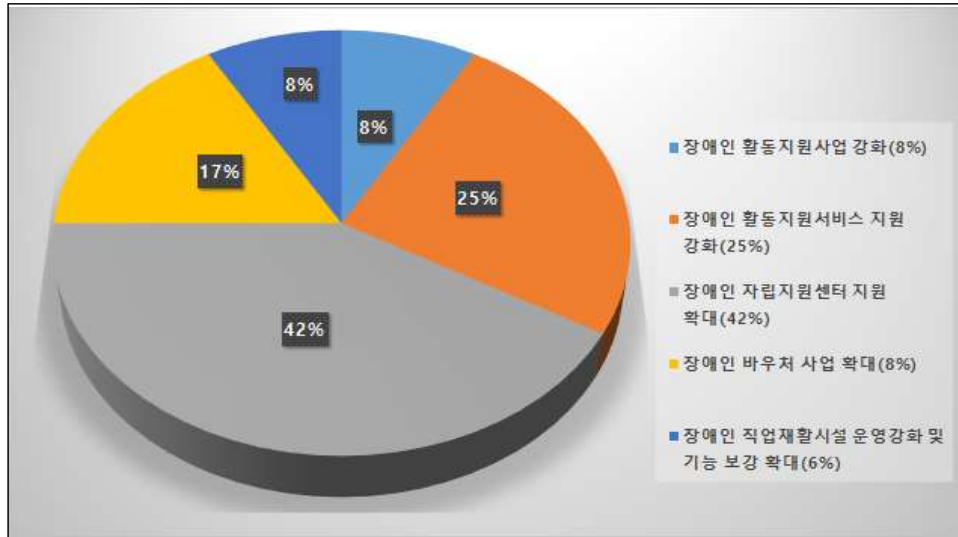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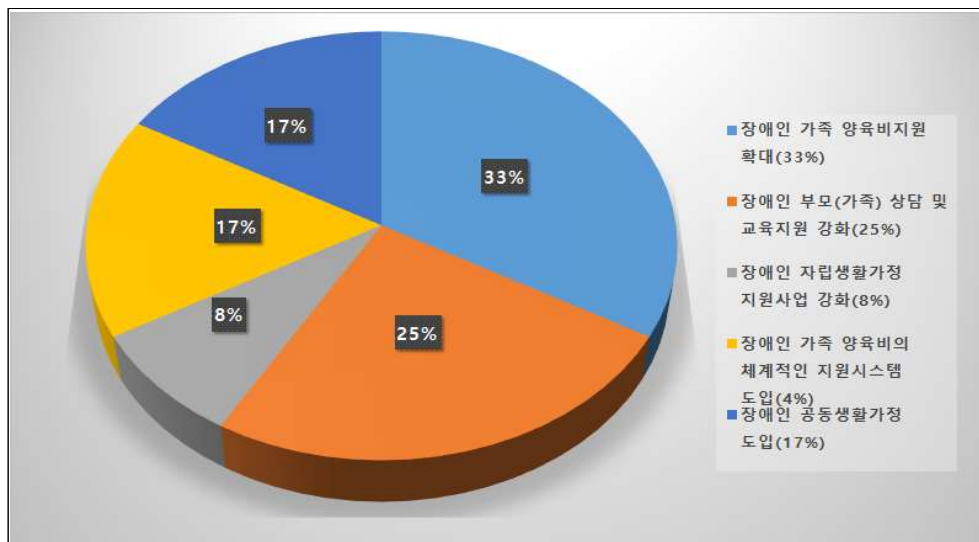
장애인 시설지원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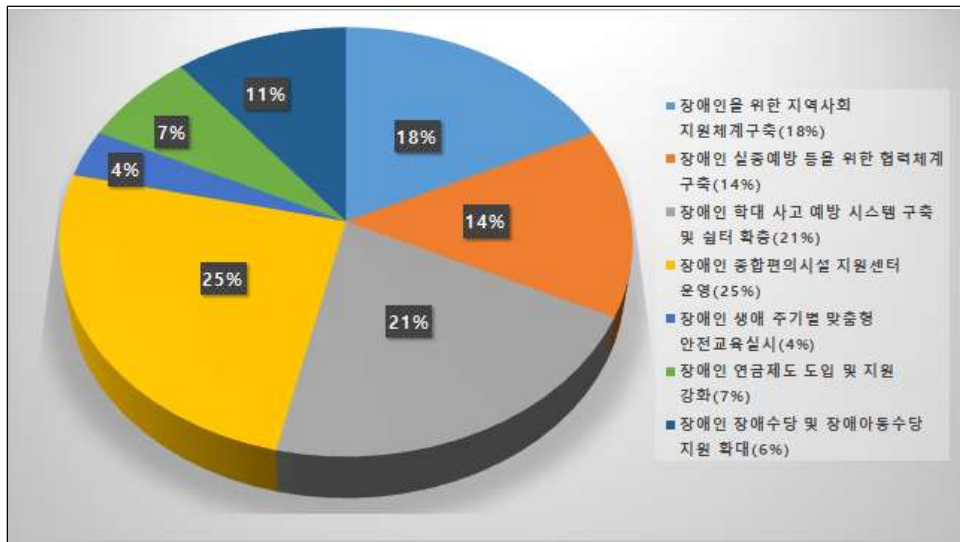
장애인활동(일자리 지원 등)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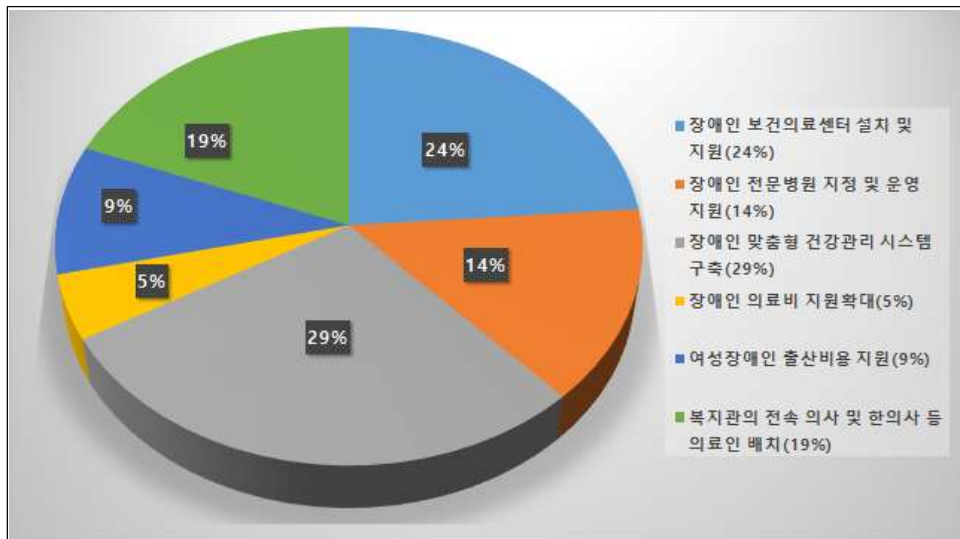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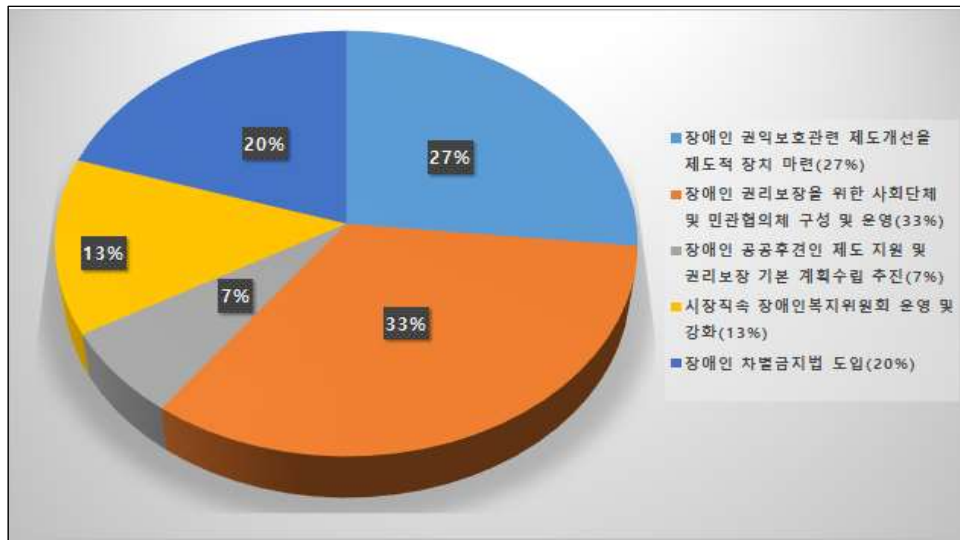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보장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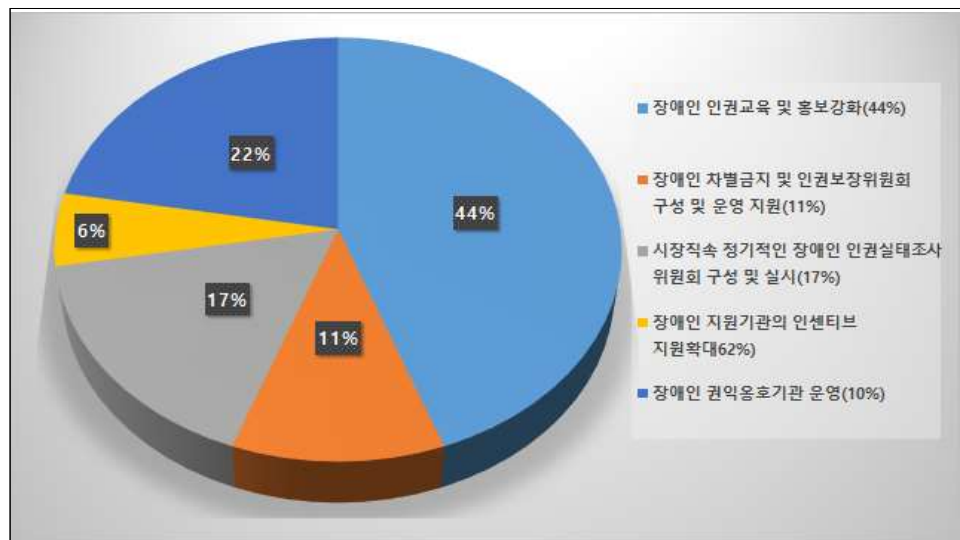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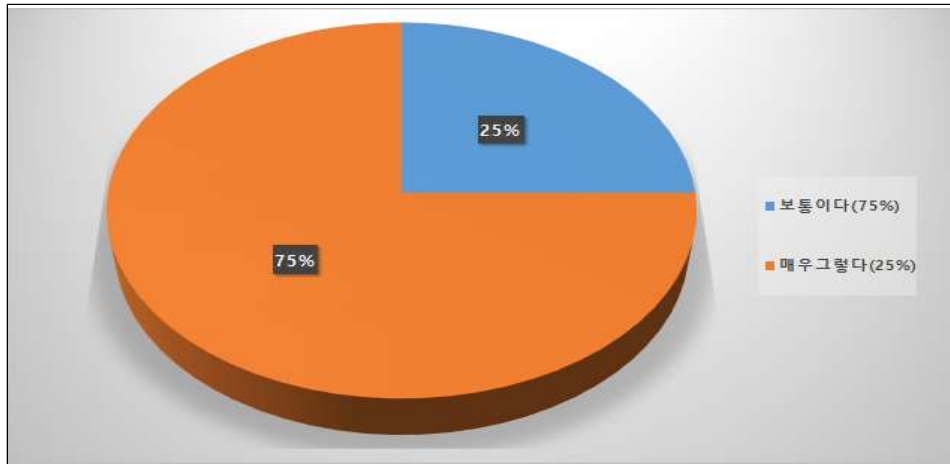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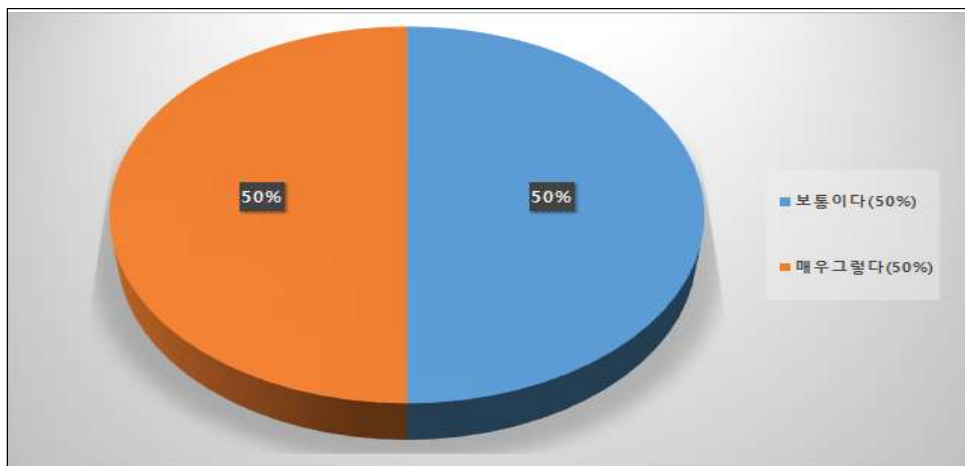


(3)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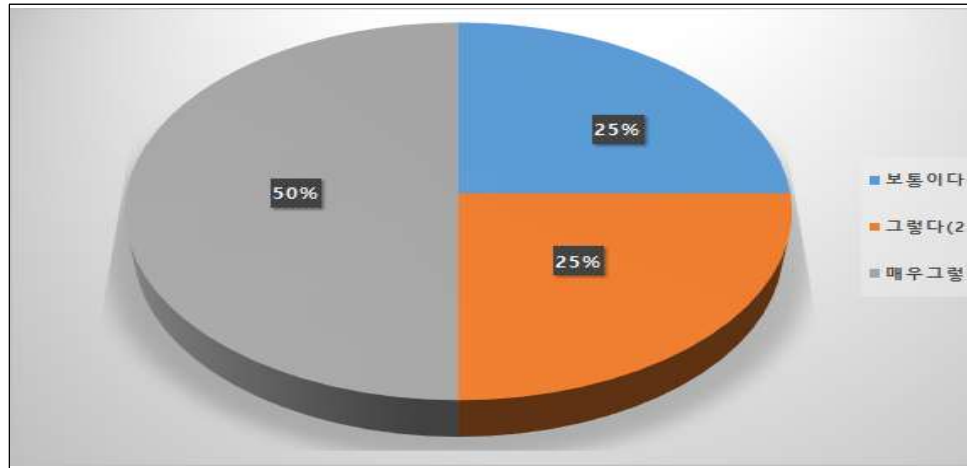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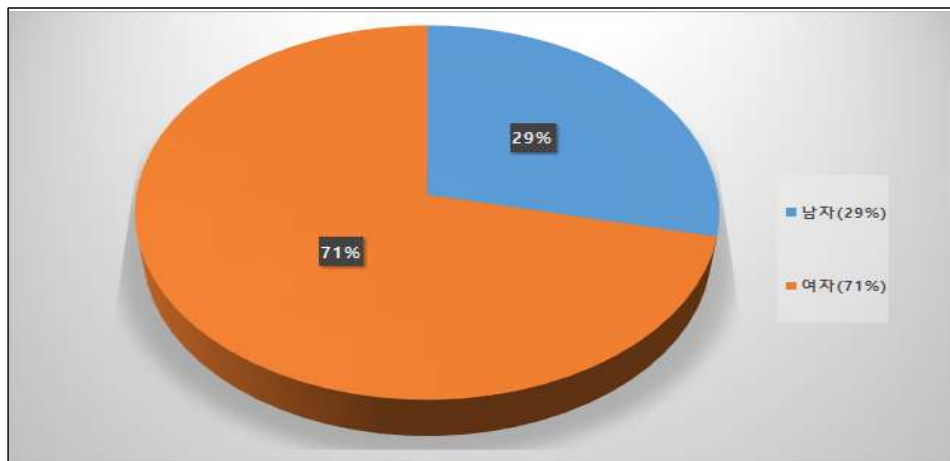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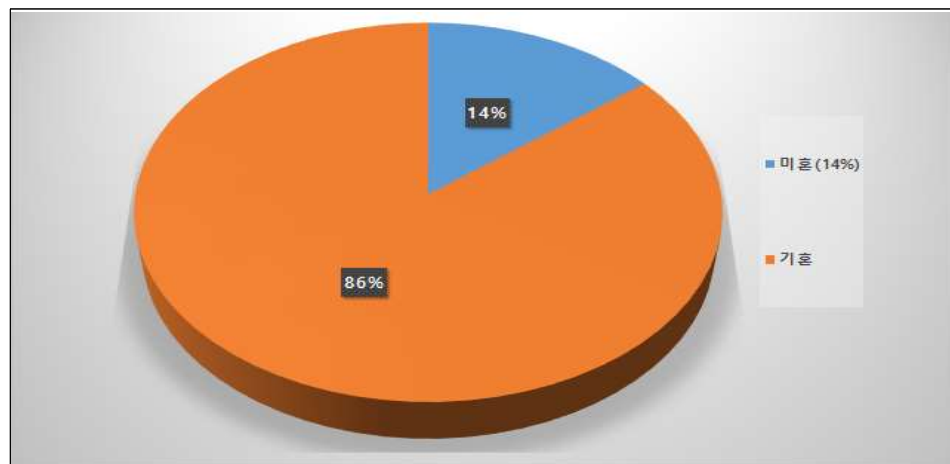
3) 장애인 가족

(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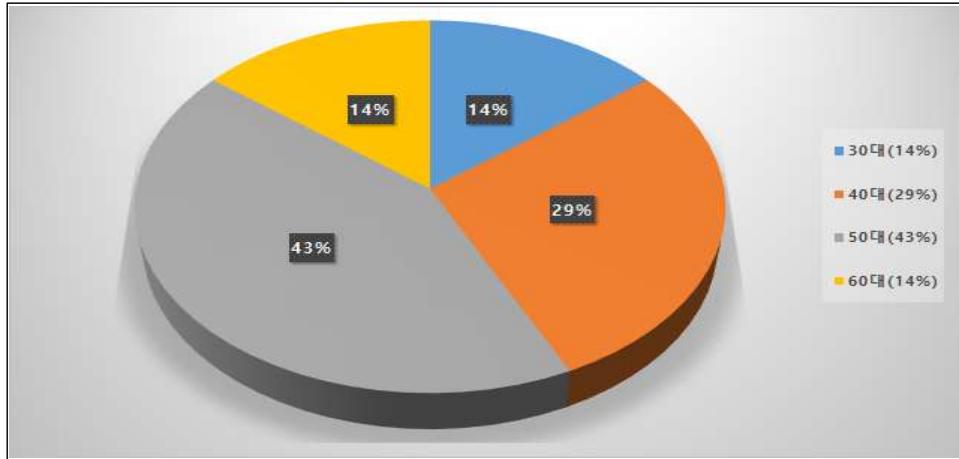
귀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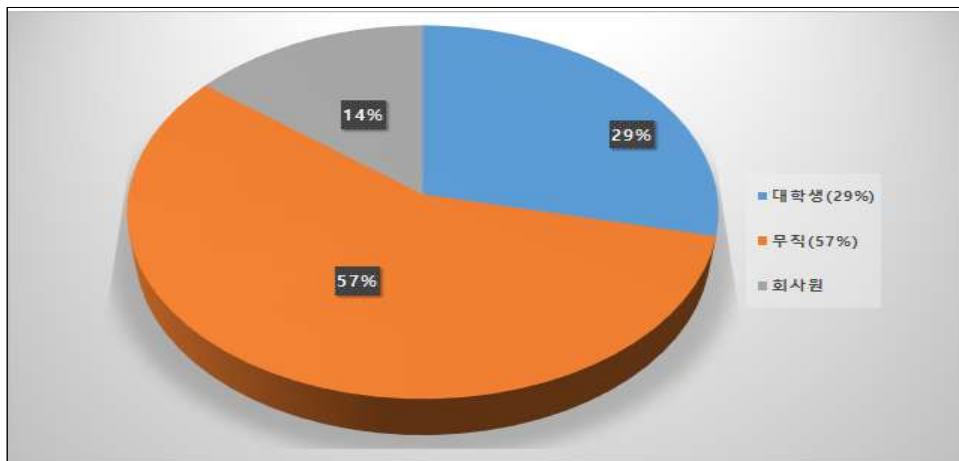
귀하의 결혼여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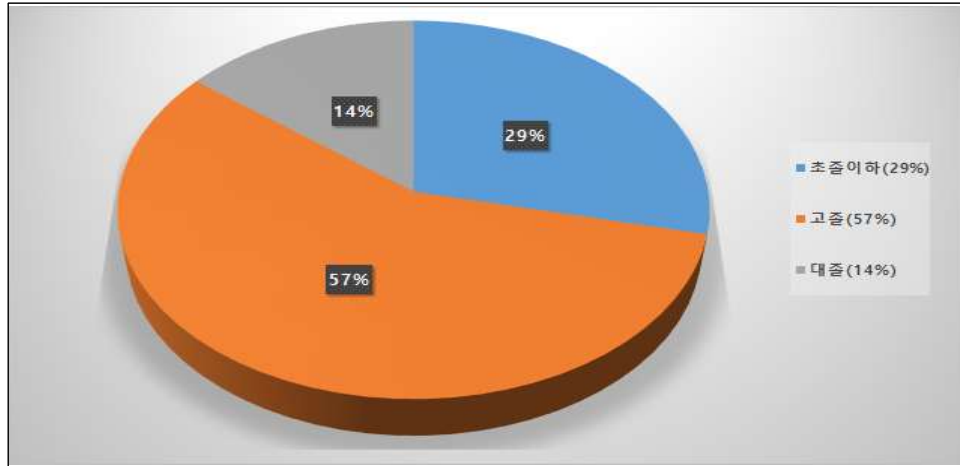
귀하의 연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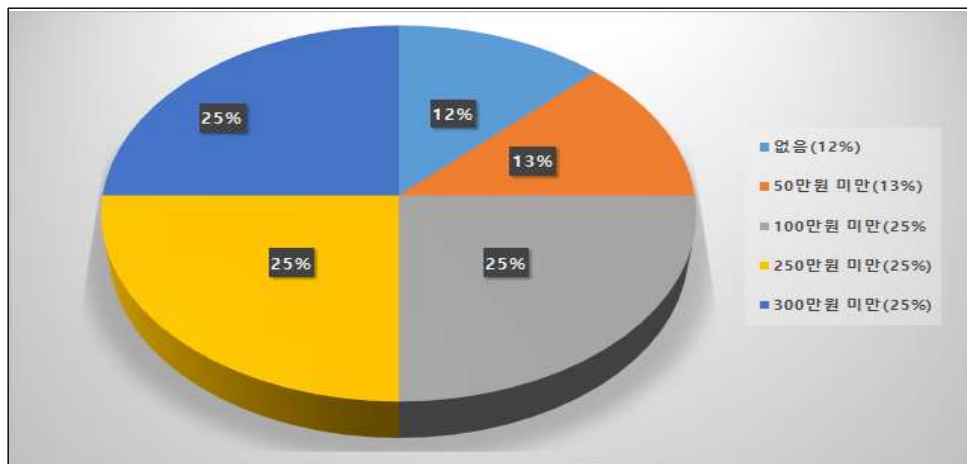
귀하의 직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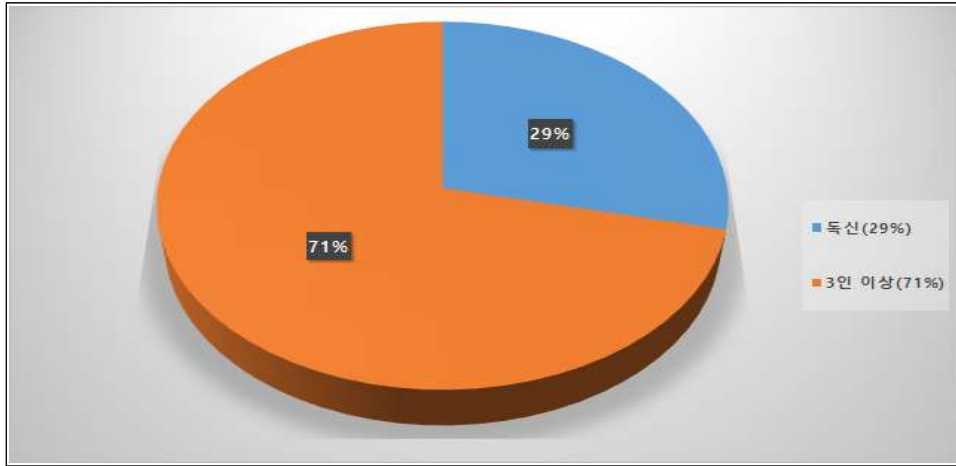
귀하의 학력은?



귀하의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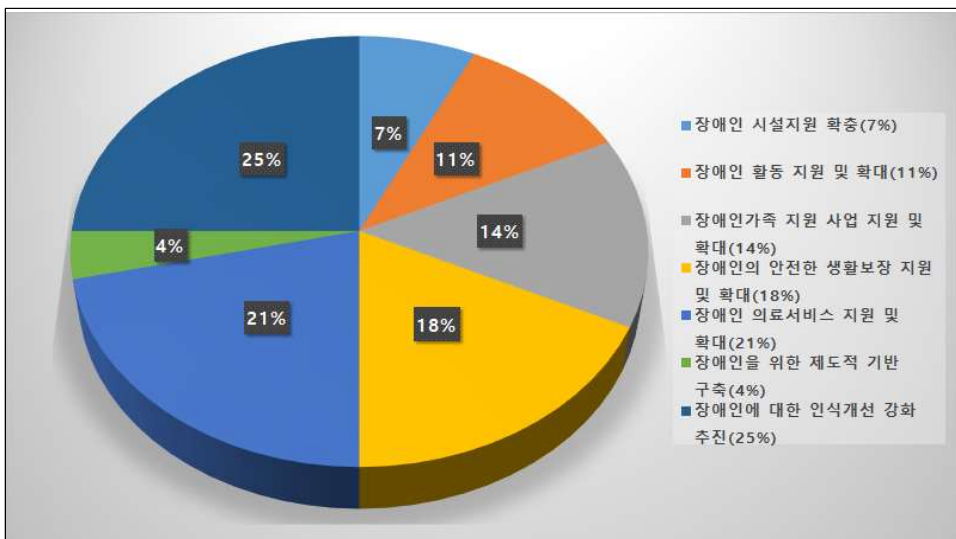


귀하의 거주 세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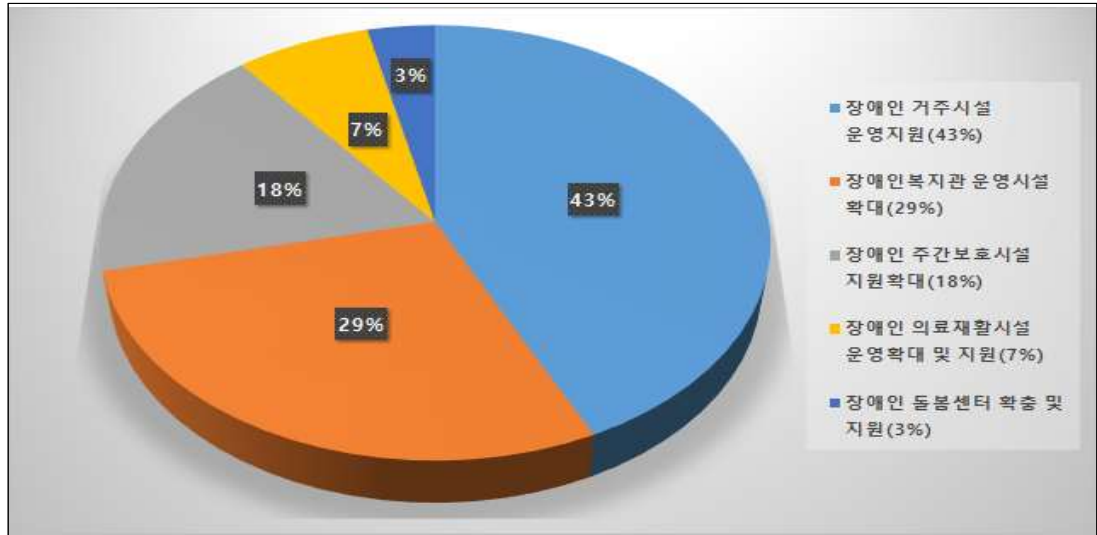


(2)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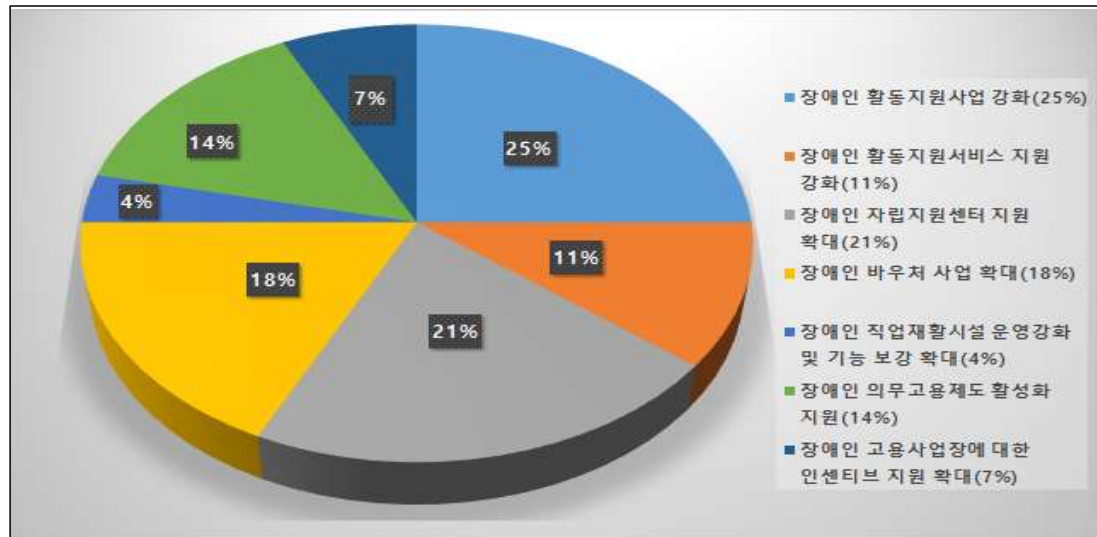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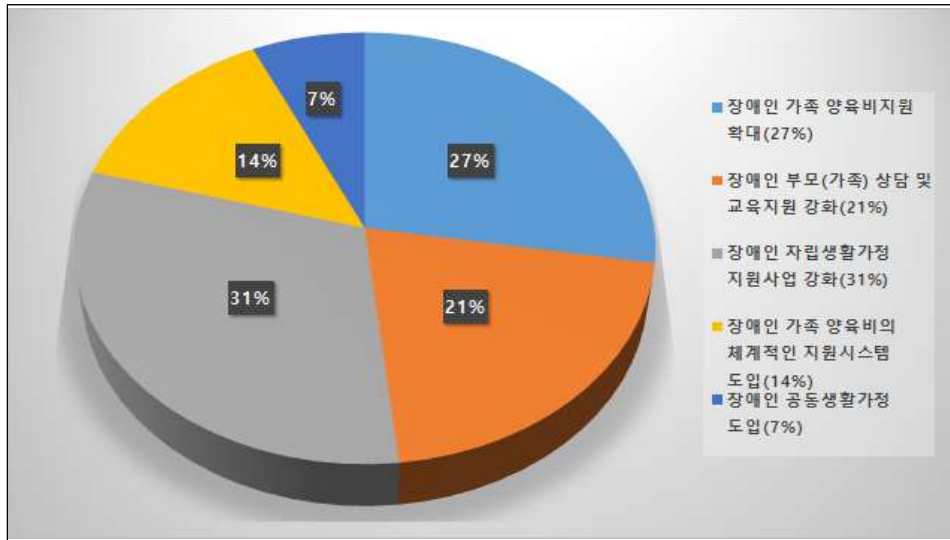
장애인 시설지원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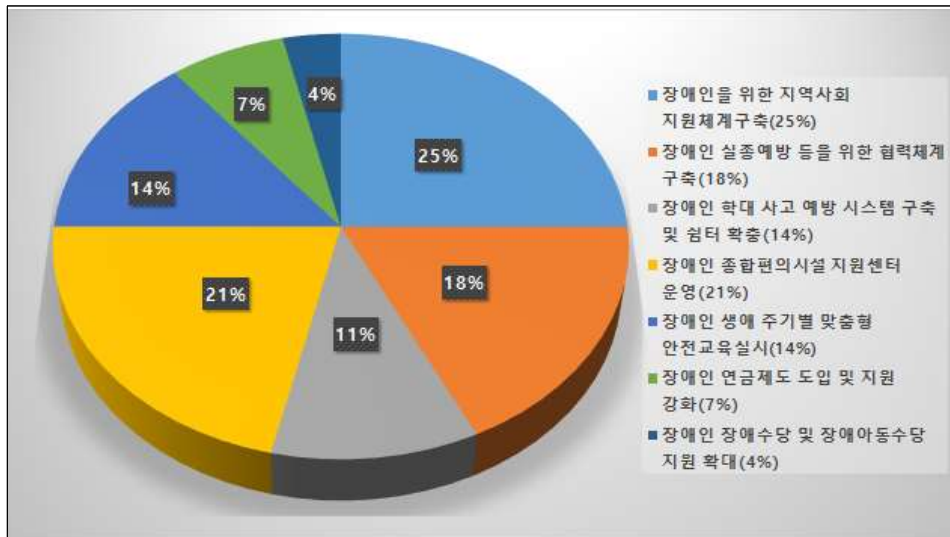
장애인활동(일자리 지원 등)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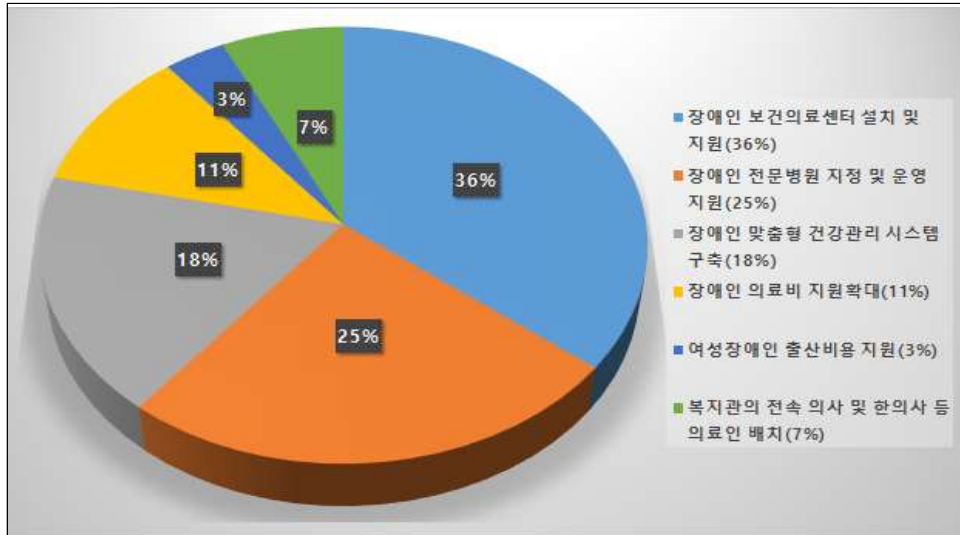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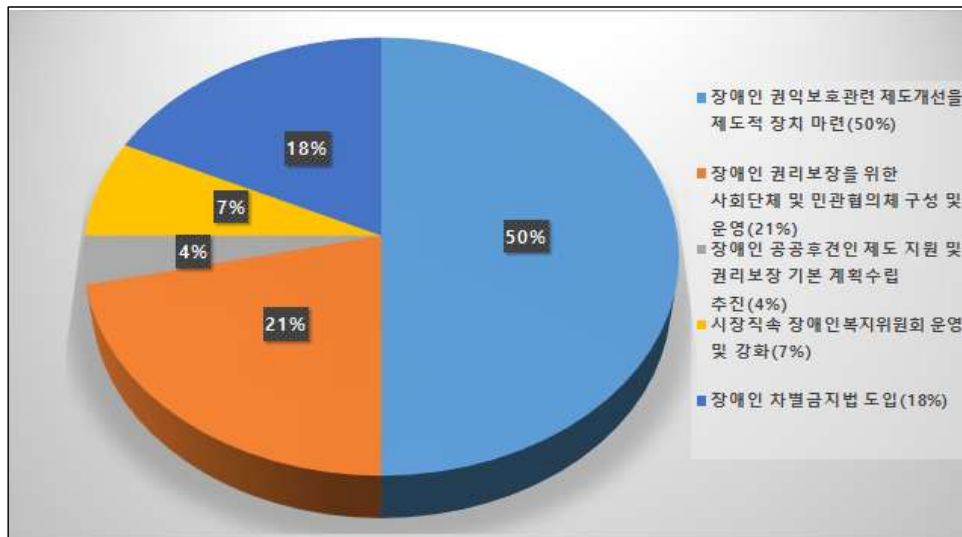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보장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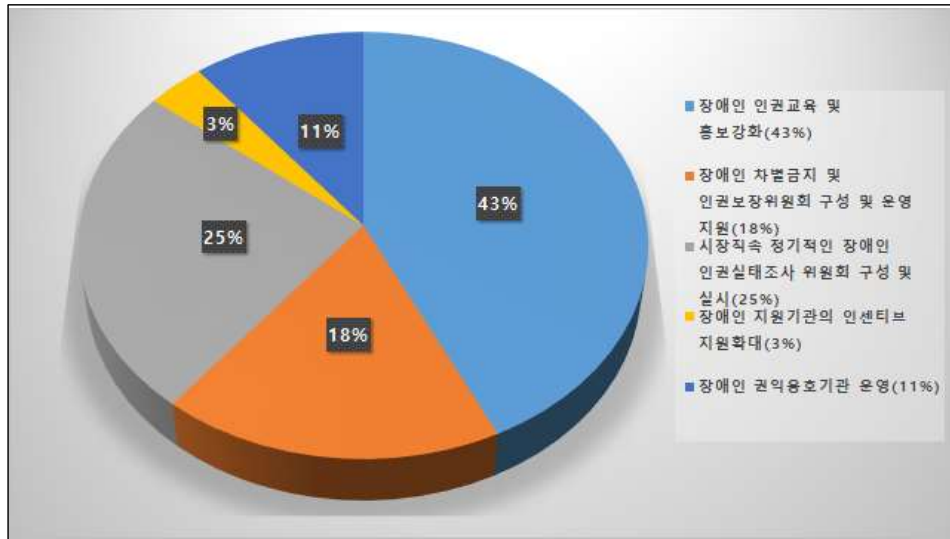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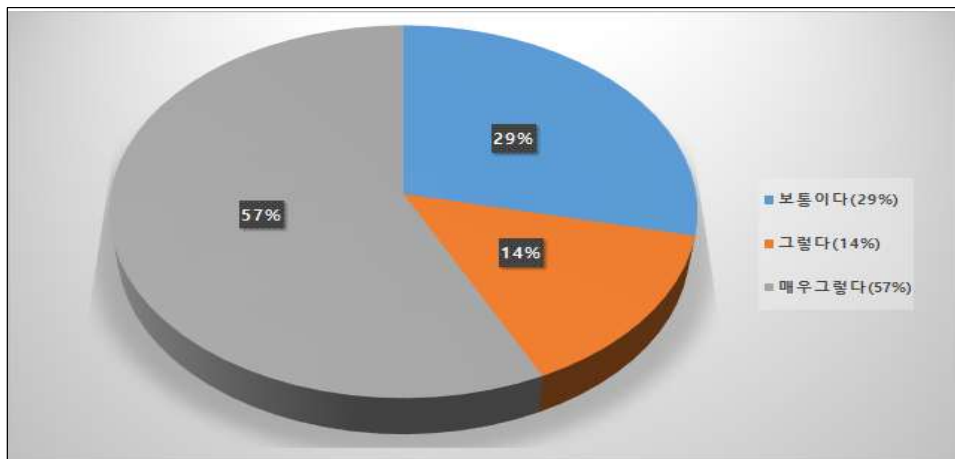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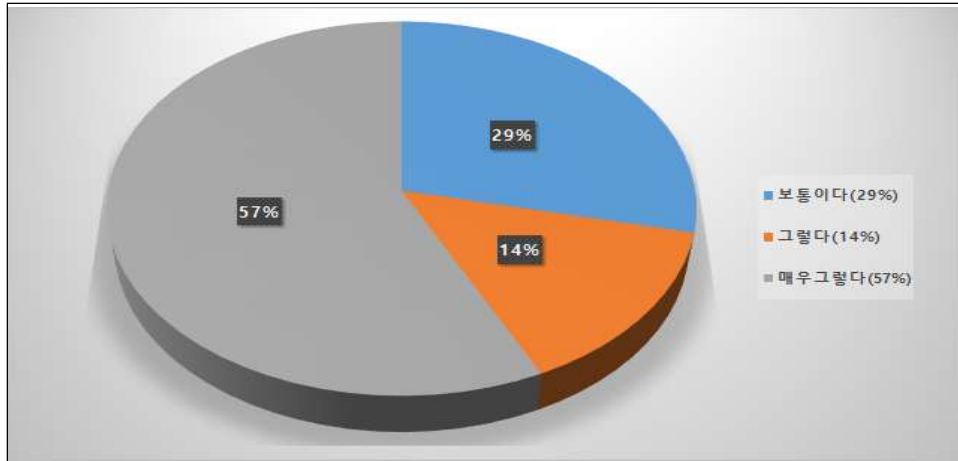


(3)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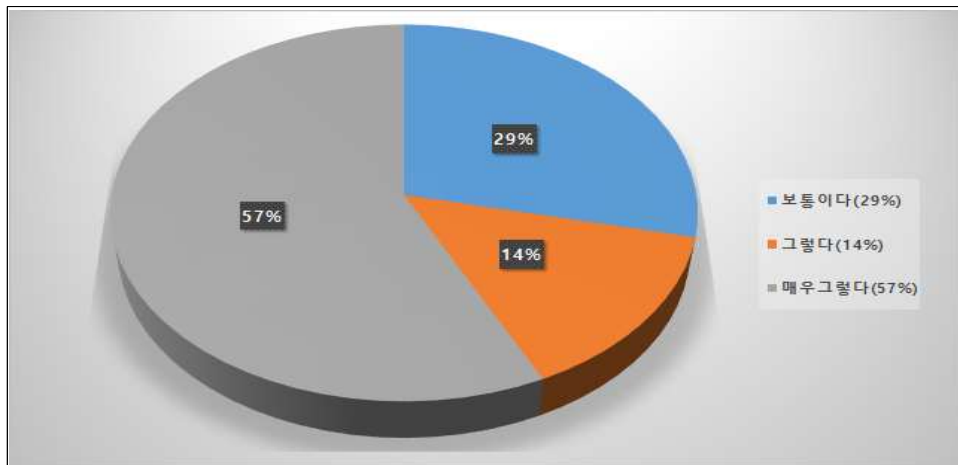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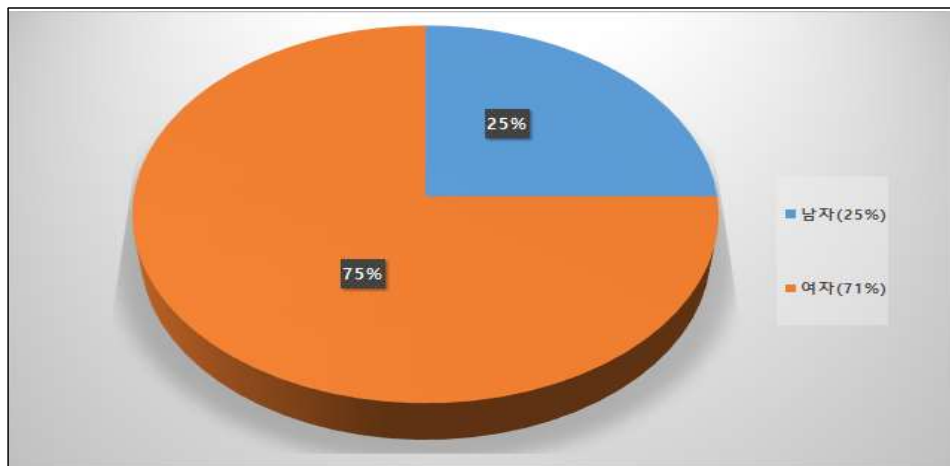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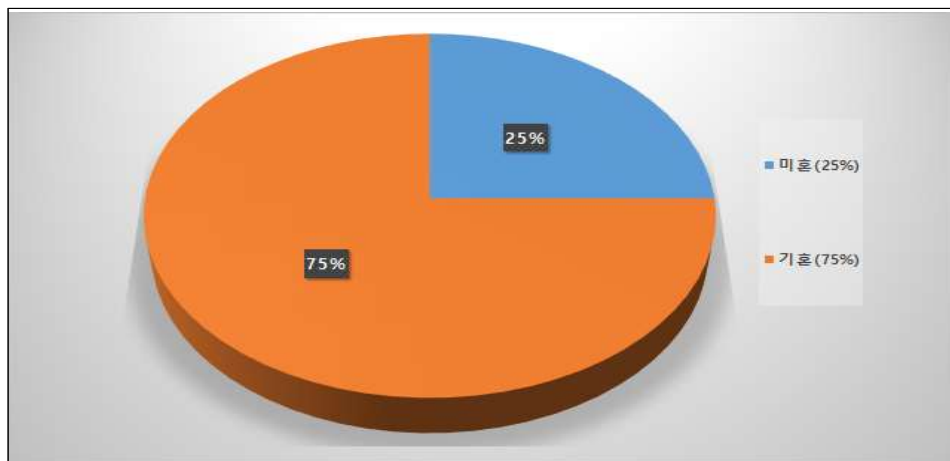
4) 일반시민

(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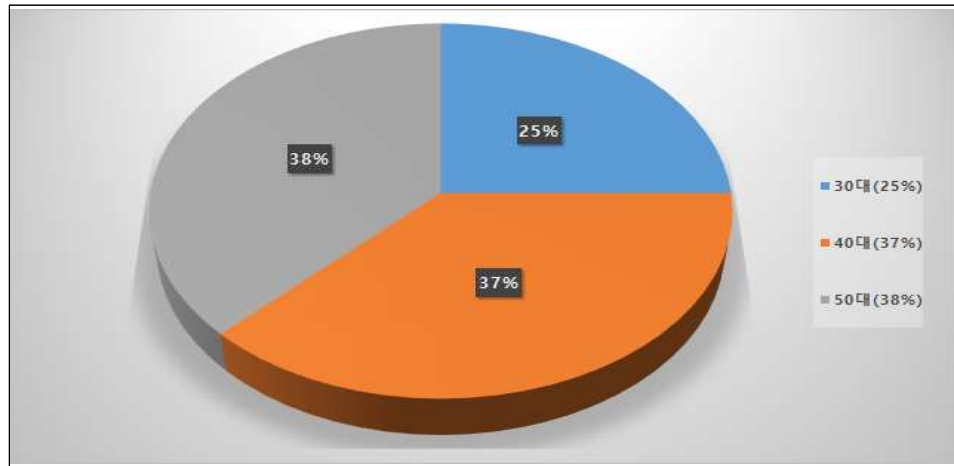
귀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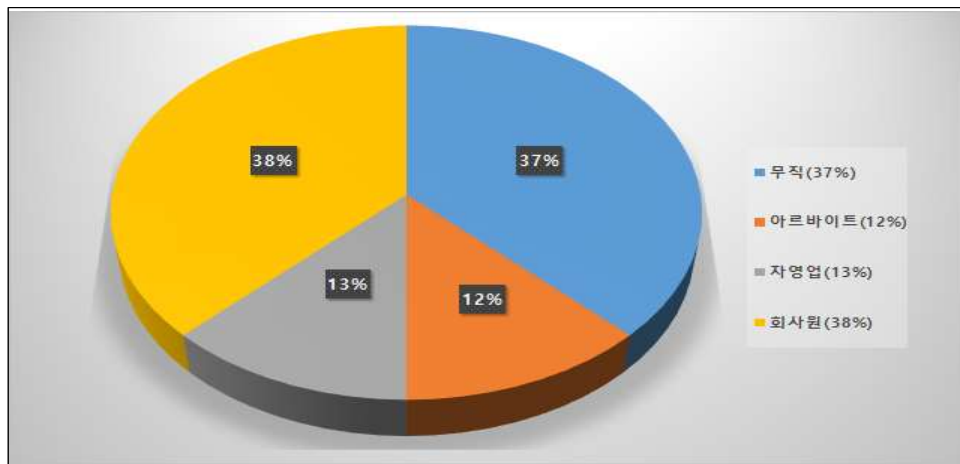
귀하의 결혼여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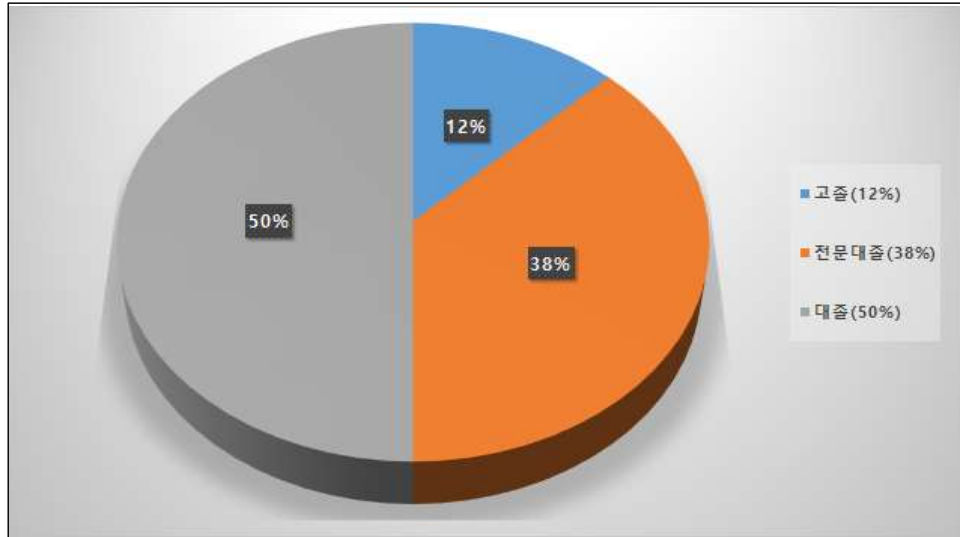
귀하의 연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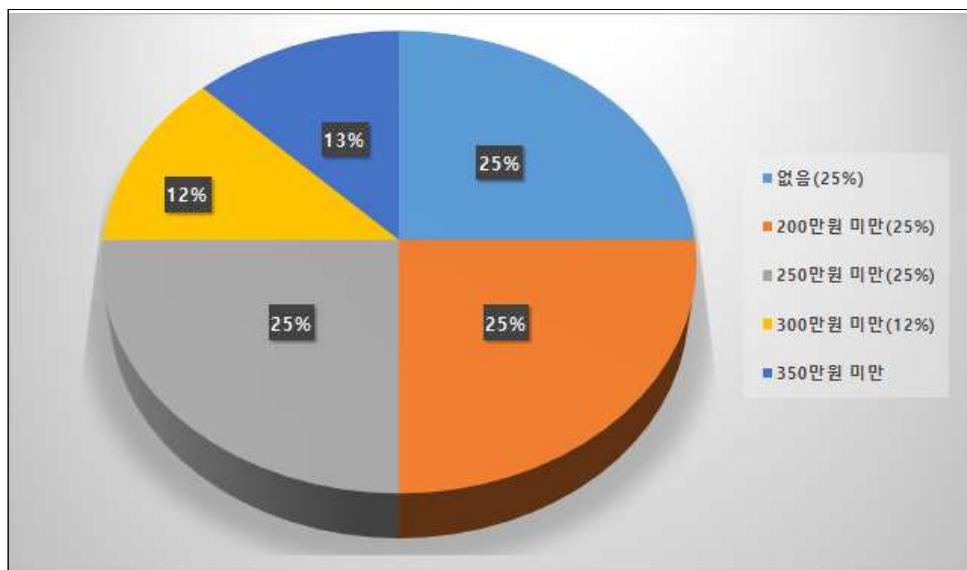
귀하의 직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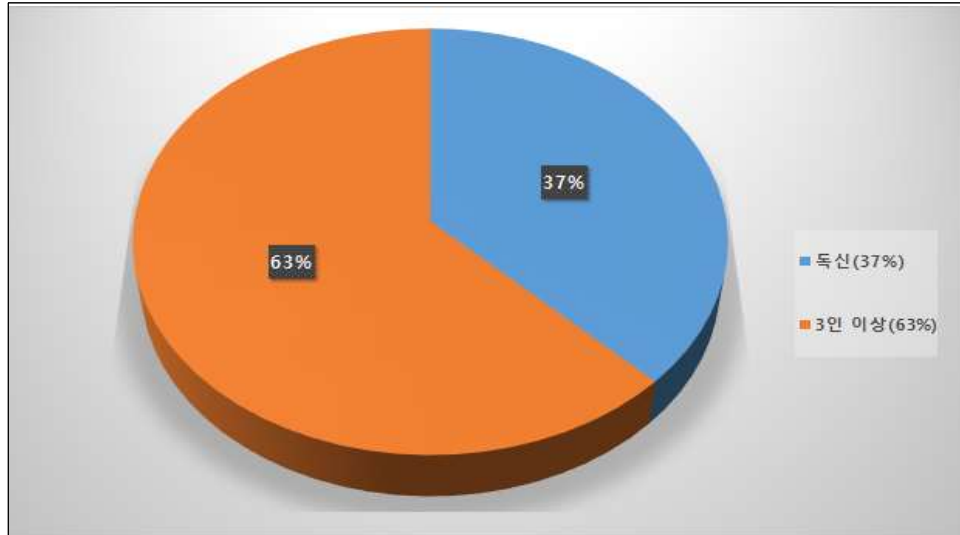
귀하의 학력은?



귀하의 월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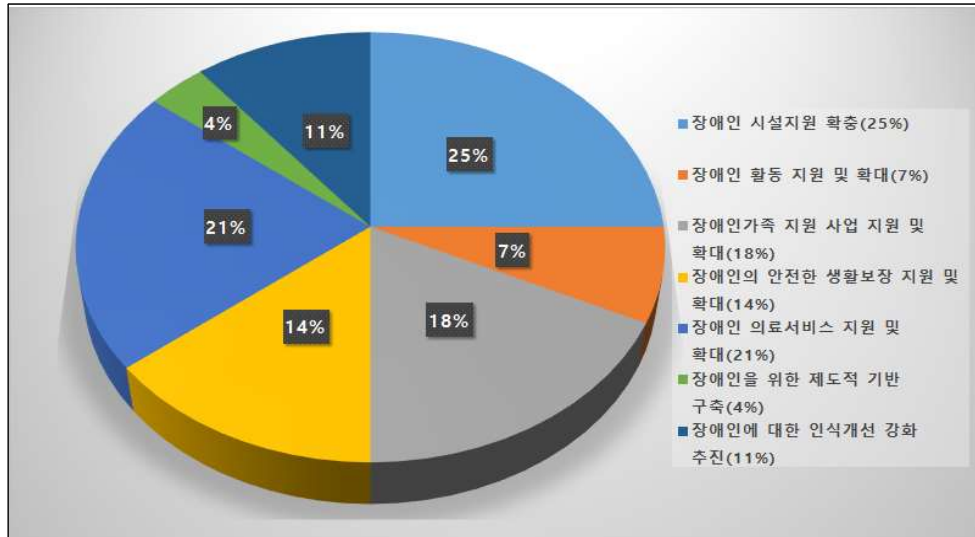


귀하의 거주 세대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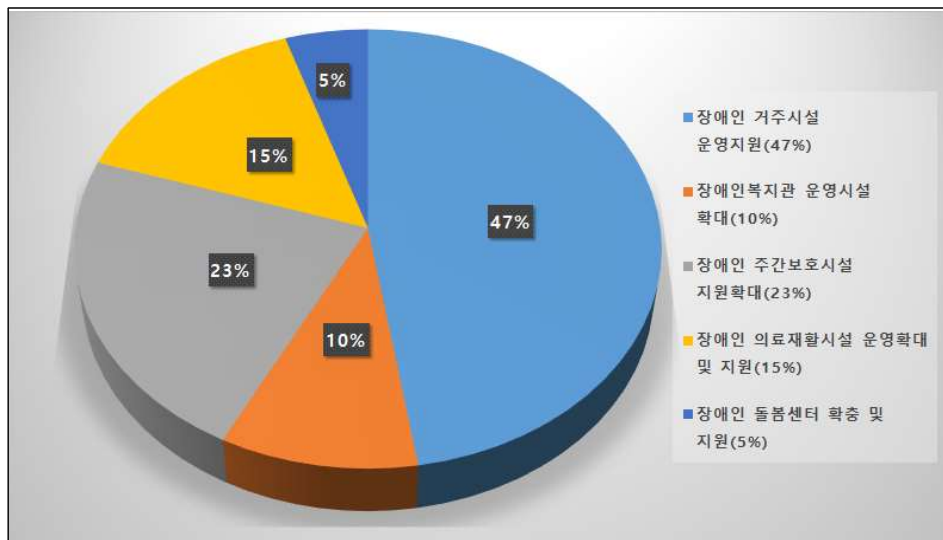


(2)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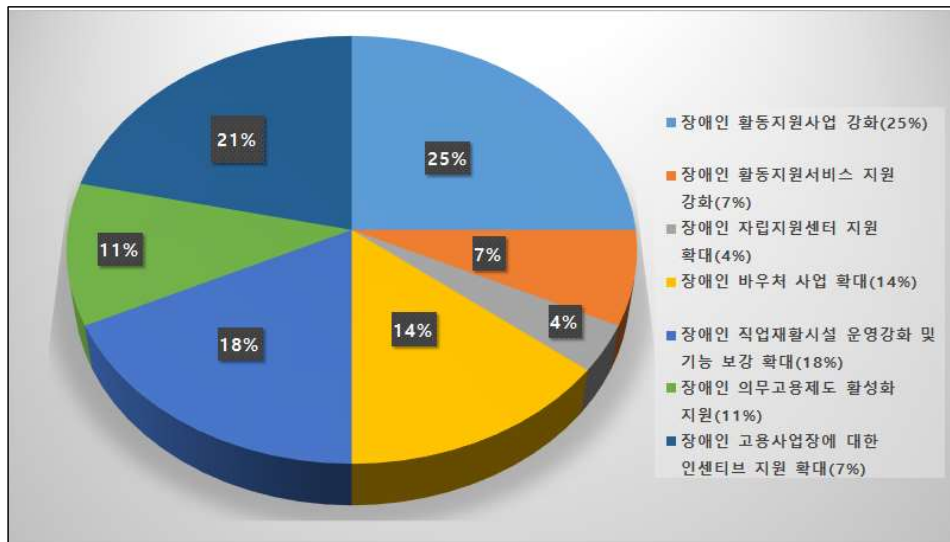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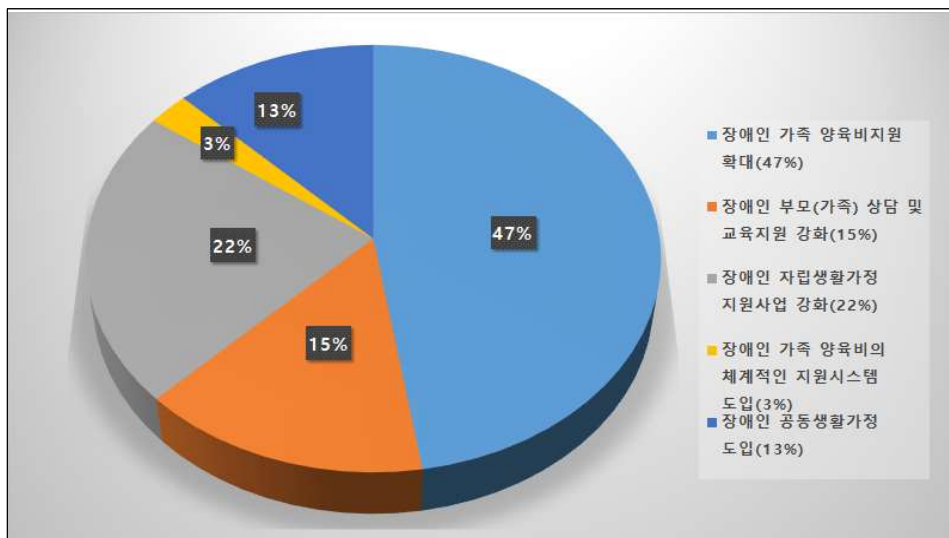
장애인 시설지원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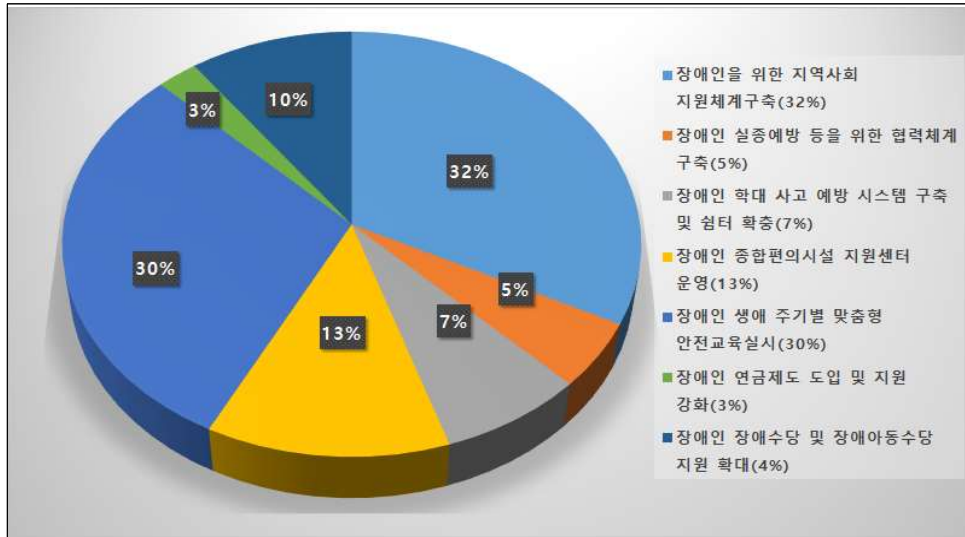
장애인활동(일자리 지원 등)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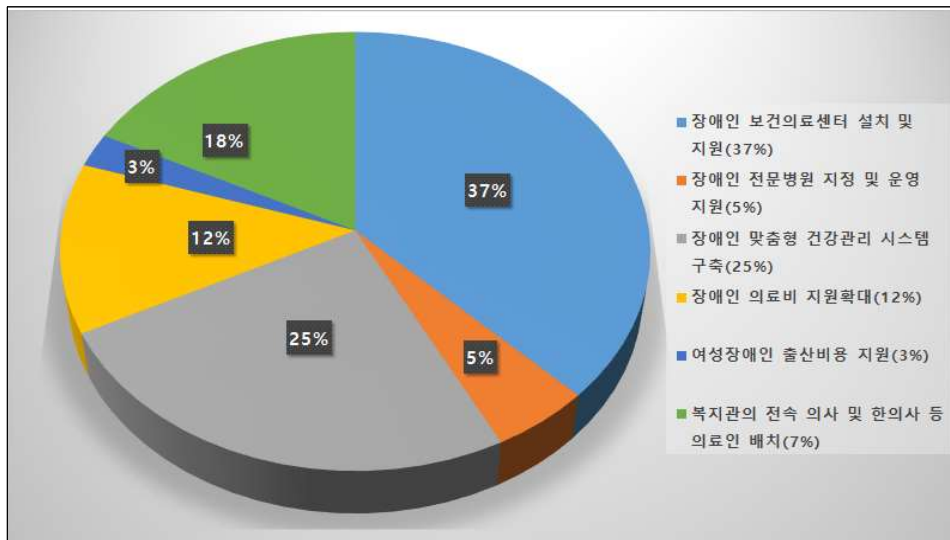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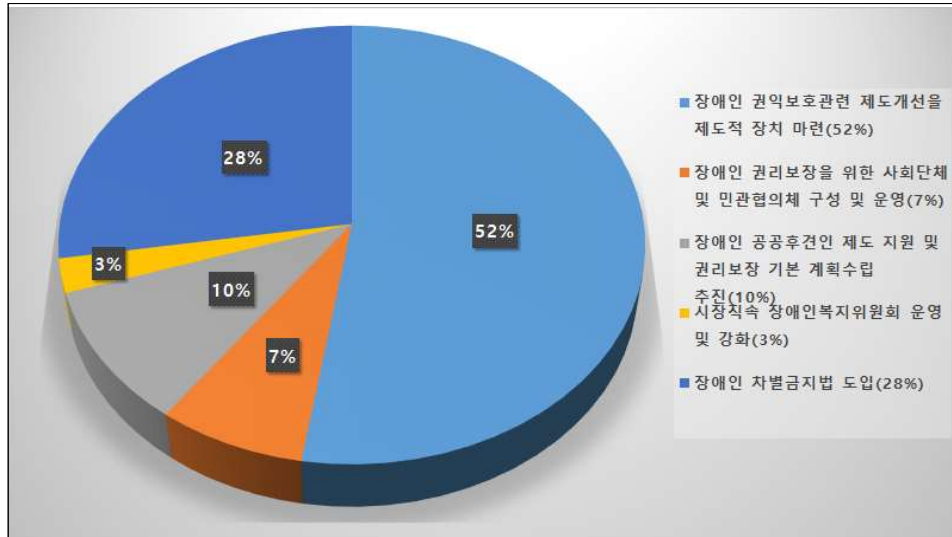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보장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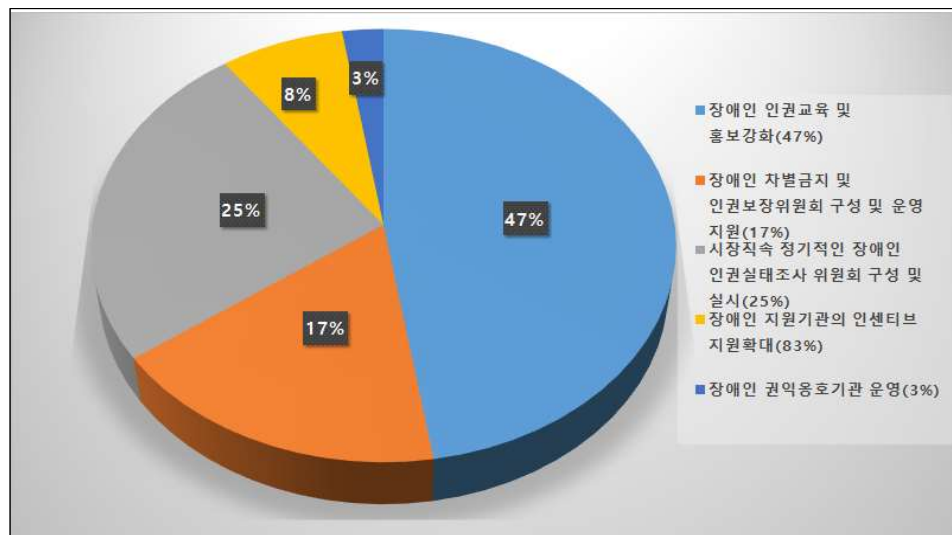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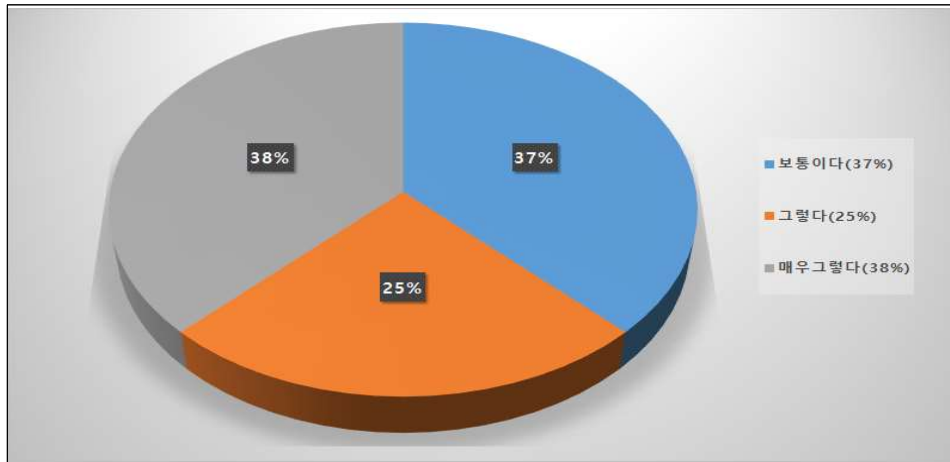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위에 따라 1(1순위), 2(2순위), 3(3순위), 4(4순위)를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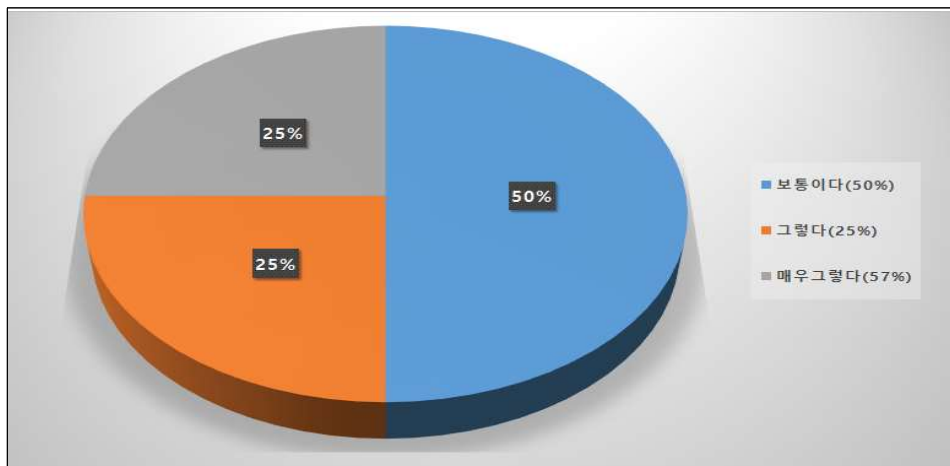


(3)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인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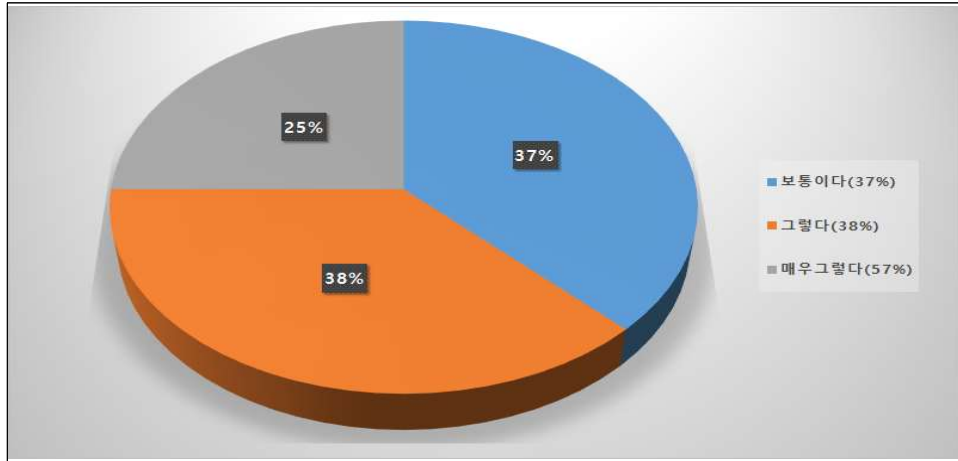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4. 설문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설문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는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설문 중 목포시의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 중 장애인들은 대체로 장애인 시설지원 확충이란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현재 목포시 장애인관련 시설은 양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임

○ 따라서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정책 수립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적인 부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② 장애인 시설지원 확충에 대한 사항

○ 현재 목포시 거주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 시설지원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확대 및 지원을 선

택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안정된 삶의 영위를 위해 평안한 거주시설을 희망하고 있으며, 의료재활시설의 운영확대에 대해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정주여건 개선 및 의료재활시설 확대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장애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나 의료재활지원사업의 경우 재정투입이 상당한 사업들이어서 목포시 재정여건에 적합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③ 장애인활동(일자리 지원 등) 지원 등의 사항

○ 장애인활동(일자리 지원 등)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순위로 대체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강화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장애인들은 자유롭지 못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목포시의 지원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연장 선상에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확대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장애인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설문결과라 할 수 있음

④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지원 및 확대에 대한 사항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지원 및 확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들은 대체로 장애인 가족 양육비지원 확대, 장애인 부모(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사업 강화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 가정의 경우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의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생각됨

⑤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보장 지원 사항

○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보장 지원 및 확대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및 지원 강화 등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선호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들의 경우 비장애인들에 비해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매우 제약적인 요인들이 많기때문에 장래에 안정적인 경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포시의 연금제도 같은 지원정책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 장기적으로 장애인 연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⑥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 및 확대 사항

○ 장애인 의료서비스 지원 및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장애인들은 장애인 전문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및 지원 등에 대해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의 경우는 전문병원 및 재활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과 같은 의료혜택과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인들의 보건, 의료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⑦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사항

○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들은 장애인 권익보호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 지원 및 권리보장 기본 계획수립 추진, 그리고 시장직속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및 강화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장애인들의 권익 및 권리보장에 대해 많은 긍정적인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들의 생각은 아직도 장애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목포시에 시장직속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⑧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화에 대한 사항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들은 제1순위로 장애인 인권교육 및 홍보강화를 지정한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목포시 차원에서 시장직속 정기적인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됨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추진 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방향	1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체계 설정	2
7대 추진 전략에 따른 중점과제	3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을 위한 로드맵 및 추진계획	4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 안	5

1. 비전 및 추진 방향

1) 비전

○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하여 장애인 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목포시 중장기 기본계획(2023~2027)의 비전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행복하게 자아실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 목포’로 설정함

2) 추진방향

○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 방향은 ‘불편한 접근성->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성’, ‘소극적 활동-> 건강하고 행복한 적극적 활동’, ‘수동적 삶-> 자아실현을 통한 능동적 자립’

첫 번째 추진방향인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성’은 장애물이 있는 기존의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수단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에서 장애인들이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가지는 도시기반시설과 교통수단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편의성 있는 접근성을 갖도록 도시 환경 조성

두 번째 추진방향인 ‘건강하고 행복한 적극적 활동’을 위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여가 및 사회활동을 평등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

세 번째 추진방향인 ‘자아실현을 통한 능동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이 자아실현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자립할 수 있는 경제 활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자아를 실현 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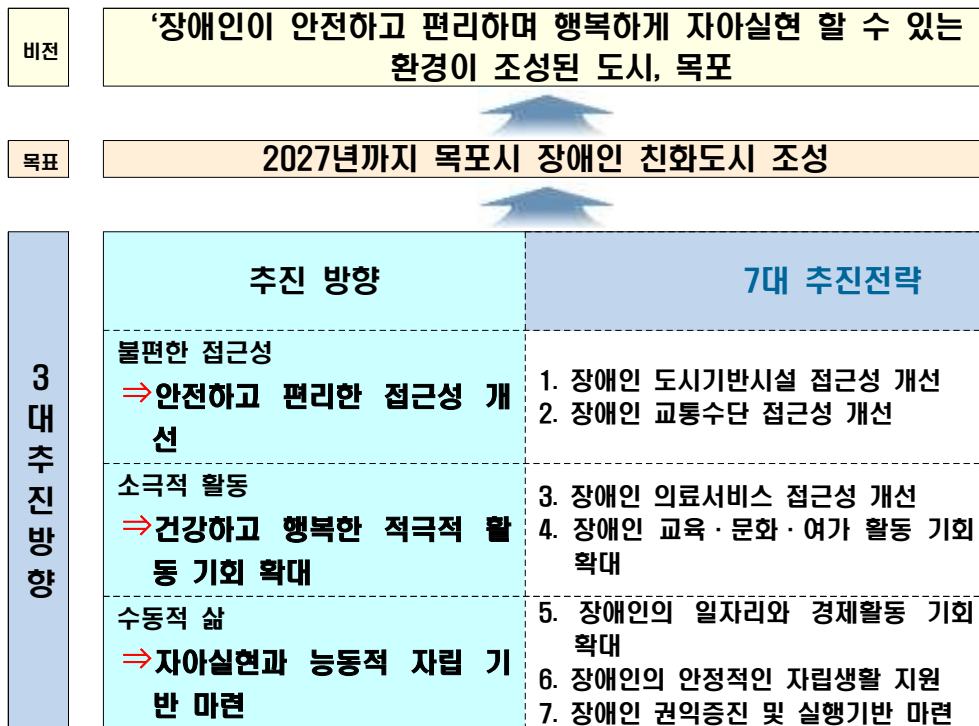
3) 7대 추진전략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6조에 기준하여 7대 추진 전략을 세움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4.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5.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그림 6-1】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 및 추진 방향



2.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체계 설정

1) 기본체계 설정

(1) 기본체계 구축의 필요성

○ 목포시는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5년 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그러나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조성지원 및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포시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대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 안을 제시하는 것은 성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연도별 세부시행사항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같은 구체적인 조성지원 및 평가기준안이 없는 현재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포시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평가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과 관련하여 연도별 명확한 로드맵의 부재와 성공적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6-2】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방안



【그림 6-3】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중/장기 로드맵

추진목표		Hardware 및 Software 역량 강화를 통한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연도별 계획	현재	단기		중·장기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이후
발전 방안 로드맵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설계 확정	기본계획 및 사업내용 중간점검	1차 사업 완료 및 2차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사업의 완료	성과 점검 및 Feedback 등
	학술연구용역 실시 (목포시 예산)	분야별 사업분류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성 제시	장애인친화도시 정착 (1년차)	장애인친화도시 정착 (2년차)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 수립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활동 시작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중사자들의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목포시만의 특성화를 위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방안 제시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장기적 방향성 제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시장직속 TFT 본격적인 활동시작	장애인, 가족, 종사자, 일반시민들의 의견 수렴 후 관리 및 운영 등 제 논의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성과분석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 실시	포지셔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추진	디지털 장애인친화도시 정착 등

3. 7대 추진 전략에 따른 중점과제

추진 방향	7대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과제
안전하 고 편 리 한 접근성 개선	1. 장애인 도시기반시설 접근성 개선
	1.1) 장애인 시설 지원
	2.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개선
	2.1)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
건강하 고 행 복 한 적극적 활동 기 회 확대	3.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3.1)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4. 장애인 교육·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4.1)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실시 4.2) 문화 향유 기회 확대 4.3) 체육 등 여가 접근성 강화
자아실 현과 능동적 자립 반 마련	5. 장애인의 일자리 및 경제활동 기회 확대
	5.1)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6.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6.1) 장애인 소득 보전 지원 6.2) 장애인 주거복지 강화 6.3) 장애인 활동 지원 확충 6.4) 장애인 가족 지원 확충 6.5) 안전한 생활 보장
	7. 장애인 권익증진 및 실행기반 마련
	7.1) 제도 기반 강화 7.2) 탈시설 활성화 7.3) 인식개선사업 추진 7.4) 장애인 단체의 협력과 소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7대 추진 전략, 중점과제, 추진과제

추진전략	중점과제	추진과제
1. 장애인 도시기반 시설 접근성 개선	1.1 장애인 시설 지원	1.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BF) 공공시설 및 공원 인증 시설 확충
		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3. 장애인복지관 운영시설 확대
		4.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확대
		5.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확대 및 지원
		6. 장애인 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2.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개선	2.1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강화	1.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BF) 도로, 교통 인증 시설 확충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3. 저상버스 도입 확대
		4.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확대
		5.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보급
3.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3.1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1.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 및 운영
		2.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장애인구강진료, 건강주치의 등) 서비스 제공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4. 장애인 전문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및 지원
		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확대
4. 장애인 교육·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4.1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실시	1. 장애아 교육(특수학교 지원 강화)
		2.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동반교육 강화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강화
		4.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5. 발달장애아동 통합교육지원센터 지원
	4.2 문화 향유 기회 확대	1. 장애인 청소년 음악 등 문화활동 지원 강화
		2. 정보접근권 확대
		3. 점자도서관 건립
		4.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5. 장애아동 문화예술교육 및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6. 장애인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
	4.3 체육 등 여가 접근성 강화	1. 장애인 스포츠 시설 확충
		2.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마련
		3. 장애인 체육대회 확대 및 전문체육인 양성
		4. 생활 속 안전한 장애인 체육 향유 기반 조성
		5. 장애인 이동친화형 공원조성
5. 장애인의 일자리 및 경제활동 기회 확대	5.1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강화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활성화
6.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6.1 장애인 소득 보전 지원	1. 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 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확대
	6.2 장애인 주거복지 강화	1.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우선 지원 2. 장애인 등 자립기반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 강화
	6.3 장애인 활동 지원 확충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강화
		2.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강화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4.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강화
		5.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확대
		6.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확대
		7.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수리 지원 확대
	6.4 장애인 가족 지원 확충	1. 장애아 [발달장애인 포함]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2. 발달장애인부모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 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강화
	6.5 안전한 생활 보장	1. 중도중복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2. 장애인 실종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장애인 학대 센터 확충
		4.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제도 추진
		5. 편의시설 설치 시민추진단 운영
		6. 지적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7. 장애인 맞춤형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
		8.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7. 장애인 권익증진 및 실행기반 마련	7.1 제도 기반 강화	1.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단체 및 구 민관협의체 운영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 계획 수립 3.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확대 4.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확대
	7.2 탈시설 활성화	1.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확충
		2.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 강화
		3.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강화
	7.3 인식개선사업 추진	1. 장애인 인권 교육 및 홍보 강화
		2. 장애인 차별 금지 강화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강화

5.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을 위한 로드맵 및 추진계획

추진 로드맵 및 추진 계획

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을 위한 규정 및 제도 정비 및 핵심 인증 [2023~2024년]

- 2023년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위한 규정 보완 및 정비
- BF 현황 및 실태조사
- BF 보행망 및 시범사업 계획수립
- 민간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BF 인증 비용 지원
- BF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한 BF 웹사이트 구축
- BF 인증기준이 포함된 BF 도시조성 매뉴얼 제작
- 부서 간 연계를 위한 BF 도시조성센터 설치
- BF 적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수립
-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BF) 도시를 위한 전문가 교육계획 수립

②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 사업 실시 및 기반 구축 [2025~2026]

-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도로 인증 시범 사업 실시
-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공원 인증 시범 사업 실시
-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공공시설 인증 시범 사업 실시
-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제작
- 유도 안내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공공공간 대상의 유도 안내 체계 개선
- ‘시장 탐방로’, ‘문화역사탐방로’ ‘교육 탐방로’ 등의 시범사업 실행
- 주요 거점 보행환경, 공공/교육시설, 공공의료/복지시설, 공원, 주거지 가로등을 대상으로 BF 환경개선사업 실시
-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BF) 도시와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장애 체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BF) 도시행사’ 개최
- BF 제품과 장애 체험을 위한 쇼룸 운영, 공무원·전문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BF) 도시 관련 교육
- BF 적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실행
- 숙박업 및 관광업을 대상으로 BF 적용 확대 방안 마련

③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 영향 평가 [2027]

-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BF) 도시 영향 평가

6.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

○ 본 연구에서는 목포시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에 대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 등의 세부사항을 제시하였음

○ 즉,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 및 평가지원안은 조례(제6조)에서 제시한 안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체계를 설정하고자 함

첫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은 목포시가 장애인 및 일반시민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최대한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을 제1차적으로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은 도시기반시설의 안정성과 편리성,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準用하여야 함

둘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은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準用하여야 함

셋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은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있어서 최소한 정책 등을 평가하여 기준을 準用하여야 함

- 즉,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은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기본으로 하여야 함

넷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을 살펴보면

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 안에서는 비영리 법인·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의 유/무 및 성과, 그리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할 것임

다섯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은 철저하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한 기준안을 토대로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의 객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을 제시함

여섯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은 목포시의 재정상태, 장애인친화도시 지원정책의 실현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현재의 재정이나 여건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함

일곱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10조(교육·홍보)를 살펴보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인권익보호 인식의 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세부사항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의 예시안 에서는 교육, 홍보 부분을 삽입하였음

여덟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은 장애인뿐 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공감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통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아홉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은 목포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인접지역의 지자체의 세부사항을 참조하여야 함

-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정책의 추진 시 인접지자체의 협력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있음

<표 6-1>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평가기준안

추진전략	중점과제	조성 기준(안)	평가기준(안)	
			자료인용	작성기관
1. 장애인 도시 기반시설 접근성 개선	1.1 장애인 시설 지원	1.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 시설 확충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 시설 실적	한국장애인개발원
		2. 장애인복지센터 확충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확충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5. 장애인 돌봄센터 확충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개선	2.1 장애인 편의성 강화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개선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3.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3.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3.1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1. 장애인 의료시설 확충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 장애인 건강검진 센터 확충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3.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확충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애인 교육·문화·여가 활동 기회 확대	4.1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실시	1. 장애아 교육(특수학교 지원 강화)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강화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4.2 문화·교육 기회 확대	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강화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 정보접근권 확대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기정통부
		3. 점자도서관 건립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4.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5. 장애아동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6. 장애인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4.3 체육 등 여가 접근성 강화	1. 장애인 체육관 확충	전국 체육시설 현황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전국 체육시설 현황조사	문화체육관광부
		3. 장애인 체육대회 확대 및 전문체육인 양성	전국 체육시설 현황조사	문화체육관광부
5. 장애인의 일자리 및 경제활동 기회 확대	5.1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1. 장애인 일자리스업 지원 확대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강화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활성화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6.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6.1 장애인 소득 보전 지원	1. 장애인 가구별 소득 확대	장애인 경제 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2. 장애수당 연금 지원	장애인 경제 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3. 장애수당 확대	장애인 경제 활동 실태조사	통계청
	6.2 장애인 주거복지 강화	1.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 장애인 주거복지센터 운영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6.3 장애인 활동 지원 확충	1. 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발달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확충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4.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확충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5.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6.4 장애인 가족 지원 확충	1. 장애아 (발달장애인 포함) 가족 양육지원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발달장애인부모 상담 및 교육 지원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6.5 안전한 생활 보장	1. 장애인 실종 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2. 장애인 학대 쉼터 확충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제도 추진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4. 편의시설 설치 시민추진단 운영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5. 장애인 맞춤형 리모델링사업 추진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6.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장애인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7. 장애인 권익증진 및 실행기반 마련	7.1 제도 기반 강화	1.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단체 및 구 민관협의체 운영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제도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실적	한국장애인개발원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7.2 탈시설 활성화	1.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확대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 강화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강화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7.3 인식개선 사업 추진	1. 장애인 인권 교육 및 홍보 강화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강화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 장애인 차별 금지 강화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결론 및 정책제언

VII

결론 1

정책제언 2

1. 결론

○ 최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비 인격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차별 철폐와 권익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목포시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입장에서 변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이동수단의 편리성, 정주여건 개선, 의료/보건 서비스 질 제고, 일자리제공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 추구, 차별금지 정책의 제고,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목포시의 장애인 복리증진과 권익보장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일반시민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과 사회공동체 일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목포시는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0. 06. 22)하고 시행함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방안으로 시행규칙에 필요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 안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안을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목포시 장애인들이 사회의 편견없이, 그리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이 제시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실증적 분석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구체적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화 되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본 학술연구에서는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장애인, 종사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토대로 제시하였음

○ 이를 토대로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으나 그를 통한 성과를 내야하는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지침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즉,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의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준 안에 근거하여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기준 안과 평가 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둘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과 더불어 목포시의 예산수립 및 지원 등과 중/장기적인 로드맵 제시가 미흡함

셋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과 관련하여 분야별 지원체계구축이 미흡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어, 중증별, 장애별, 성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세부계획의 수립이 되지 않음

- 따라서 이와 같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본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참조하여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권유함

- 본 연구에서 조성기준 및 평가기준안을 제시함

○ 장애인, 장애인가족, 관련종사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첫째, 목포시 장애인들은 목포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이동의 편리성,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둘째,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된 일자리 보장, 주거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 안정된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목포시가 정책적으로 제공해 주기길 바라는 것으로 분석됨

셋째, 장애관련 종사자들의 설문분석을 종합해 보면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에 대한 편리성과 접근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됨

넷째,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분석을 살펴보면 목포시민들이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목포시의 장애인 정책인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모든 정책은 정부나 목포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내,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각 나라와 지역의 특색에 가장 적합한 장애인 복지관련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포시의 경우도 목포시만의 지역특성과 예산 등을 종합하여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즉,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정책의 수행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따라서 정책의 성공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중/장기 로드맵을 참조하여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유함

2. 정책제안

①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와 복지향상, 그리고 권익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의 수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됨

-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정책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권리증진 기여 필요

②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장애인친화도시 관련 종합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통해 목포시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임
- 또한, 이를 통해 목포시의 장애인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분석 및 feedback 등의 원할 한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음

③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등 자유롭고 안정 된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이 필요함

④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을 통해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 안정 된 일자리 지원, 보건·의료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⑤ 목포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의 성공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범 목포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자원마련의 사업계획 수립 및 적극적으로 정부나 전남도의 공모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⑥ 현재 목포시의 여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목포시의 예산수립과 동시에 전라남도나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⑦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은 역사, 전통, 문화 등을 이용하여 사례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진주시처럼 장애인과 일반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존과 병용되는 정책추진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됨
- ⑧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서울시 노원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로 장애인복지과 내에 ‘장애인 친화도시팀’을 신설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⑨ 따라서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목포시, 장애인, 종사자, 가족, 일반시민들이 모두 사회적 합의와 동의하에 목포시의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긍정적인 효과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

본 학술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을 참조하여

첫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 사례연구 분석, 그리고 학술연구 등을 종합하여 최적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둘째, 사업과 정책 등 운영의 효율성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임

셋째, 중/장기적으로 목포시민들이 모두가 혜택과 이득을 볼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여 할 것임

넷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성기준과 평가기준 안을 참조하여 목포시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안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다섯째,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발전방안들을 바탕으로 목포시에서는 가장 최적의 전략적 방안을 선택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문헌

강원연구원 <http://www.rig.re.kr/front/index.do>

경향신문(2019. 10. 10), “언어장벽 없는 마을 ‘AAC’를 아시나요”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1910101503011#c2b>

김성희·이동석·오옥찬·김희성·배용호·오다은(20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인순·이소영(20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립장애인도서관 <https://www.nld.go.kr/>

도시정책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

목포·통계정보 <https://www.mokpo.go.kr/stat>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1&SEARCHKEY=TITLE&SEARCHVALUE=%EC%9E%A5%EC%95%A0%EC%9D%B8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handicap/deinstitution/vision.do>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s://www.nowon.kr/>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홈페이지 <https://www.mapo.go.kr/>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정성훈(2021),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진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jinju.go.kr/>

통계청 장애인 등록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215&tblId=DT_K037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oddi.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한연주(2019), 「수원시 무장애도시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수원시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헤럴드경제(2015. 10. 15), “단풍 가득한 관악산... 무장애 숲길서함께 걸어요”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015000183>

amNY(2022. 5. 17), “TLC chief nominee David Do calls for expanded Access-A-Ride on-demand cab program”
<https://www.amny.com/transit/david-do-access-a-ride-on-demand/>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info/index_en

Mayor of London London Assembly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london-plan-guidance-and-spgs/creating-london-accessible-all>

Universal Design Center
<https://www.csun.edu/universal-design-center>

● 김판진/책임연구원/경영학박사/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유영림/연구원/ 사회복지학박사/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김세희/연구원/전남대학교 정책학석사(사회문화복지정책전공)/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동아보건대학교 외래교수

● 곽병한/전문가/경영학박사/(주) Q and A 컨설팅 대표

발 행 일 : 2022년 08월

발 행 인 :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연구기관 :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 본 청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사를 금함
